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전화. 02) 523-8760 (E) goodlaw@goodlaw.org (우) 08502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코오롱 타워 10층 1001호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문정권 5년차 국정감사성적, 법치기준 “빈사상태” / 후한평가 “C-”

한국의 국정감사는, 그나마 6.25전쟁과 독재를 극복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싹을 지켜낸 세계10위의 선진대국이 되는 나름의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서둘러 상시정책청문회 등 365일 상시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으면 부패공화국을 면할 수 없다

**국감의 주역인 야당(국민의힘)은 - 용장도, 지장도 없이 헛발질만
여당은 정부잘못을 감싸고, ‘정책제시’ 에만 치중, 국감본래취지 퇴색**

▶ 모든 상임위 팻말논란 등 “단군 이래 최비리” 라는 “대장동 등 토건비리” 쟁점화
-- 피감기관장들 답변회피/책임회피 -- 척결/규명 못하는 국회에 국민분노 --
-- 최대부패사건(대장동) 척결위한 **증인(152명) 1명도 채택 못한 - 죽은국감**

▶ 국정감사에서 코로나(C-19) “정치방역과 백신사망 등” 의혹제기,
-- **백신 부작용 사망관련 자료제출도 거부, 부적절 방역으로 자영업자 등 초토화**

▶ 무더기 피감기관 채택 : 하루 10개 이상 피감기관 감사 24회나 (2020년 21회)
▪ 과방위 하루 53개 피감기관 국감 그중 35개 기관의 장은 질의를 못받아
▪ 국감일손 축소(15대이후 175일 ⇒ 21대 137일) 감사기관은 증가(15/16대 375개 ⇒ 21대 745개)
▶ 파행하면서 의원의 질의시간 제한 : 100군데 조사결과 총 2,957회 마이크 중단
▪ 감사위원당 하루 1.59회 끌로 마이크 꺼진 - 소리 없는 감사 실시

▶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세계 꼴찌 수준의 부끄러운 복지·민생·안전의 단면들**

- 우리나라 자살율이 17년간 OECD 1위(복지위, 최연숙 의원)
- 노인빈곤율은 OECD 1위 (운영위, 이수진 비례의원) / 고령화 속도 1위(통계청장)
-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기재위, 김주영 의원)
- 한시적 근로자 비중이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하면 압도적으로 1위 / 69%로 OECD평균의 약 5배(기재위, 추경호 의원)
- 10대~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의원)
- 2년 연속 세계 꼴찌, OECD중 출산을 1명대 미만 유일국(정무위 이정문 의원)
- 어린이 교통사고율 단연 세계 최고(행안위, 이해식 의원)

1. **[국감성적]** 지난 제15대 국회 말부터 23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밀착 모니터링 해온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 외 22인)은 제

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의 5년차 국정감사, 1988년 부활한지 34년째 국정감사인 올해 **국정감사**를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지난해 10월 15일 중간평가에서 밝힌 그대로 **C-학점 국정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 1) 중간평가 이후 국방위의 15일 군인공제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당이 군인공제회 피켓 논란으로 파행이 되었고, 국감 마지막날 국회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도 리본, 마스크 논란으로 귀중한 오전 시간을 파행으로 진행하여 더 나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2)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감수감으로 인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루어져 여야의 입장차를 비교할 수 있었으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복기되어 ‘대장동’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3) 올해 국정감사는 **대장동 사태**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손팻말 전투로 시작해, 윤석열 검찰총장(국민의힘 대선후보)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경선 승리자)에 대한 **후보검증(대선전초전)**으로 끝나면서, 부동산, 일자리, 경제실정, 백신참사, 외교 실패 등 정부 심판론을 앞세웠던 국민의힘은 날카롭지 못한 공세로 일관했고, 주요 상임위에서 **요청한 증인채택은 여당의 원천봉쇄에 대거 무산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옹호와 정부방어에만 치중하였다는 평가입니다.

2. **[국감행태]** ① 제21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는 지난해와 같이 그동안 정착되었던 ‘**일문 일답**’이 많이 사라지고, ② 정부여당이 국정감사의 본래적인 취지인 피감기관 직무집행의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고 시정케 하는 국감이 아닌 의원의 비전(정책제안)이나 의견을 길게 발표하는 **비전제시형 국감**으로 퇴보하였습니다.(야당의 입장에서는 피감기관의 답변까지 포함되는 진행방법 때문에 질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괄질의를 하고 그 다음 답변을 하라고 요구함) ③ 코로나 위기라면서도 745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과다하게 선정했으며, ④ 국감조법으로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을 하지 않고 20일 국감을 고수한 채, 감사일정은 158일에서 137일로 대폭 축소(위원회별 평균 10일)하였습니다. ⑤ 국감기간 아닌 때에 할 수 있는 현장시찰과 민간인 증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여전하고, ⑥ 태부족한 감사시간에 피켓, 리본, 마스크 논란, 증인채택논란과 여야간의 끼어들기 막말 등 불필요한 정쟁을 반복하였습니다. <<국회가 국감이 부활한 지 34년간 증인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연구를 하지 않아, 적절한 피감기관선정, 일반인 증인과 기관증인과의 중요성 정도를 알 수 없음>>

3. **[국감개선]** 국회의원(감사위원)이 수년간 지적해도 피감기관은 시정이나 개선하지 않고 피감기관장은 그저 “예, 알겠습니다” 라는 형식적 면피성 답변이 많았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이 1년이 지나서야 감사장에서 되물어 **시정조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맹탕 국감이 재현되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의한 의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지적한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국감이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질의실명제 실시) 또한 **현장시찰과 일반증인은 국감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30일 중 10일간 정기국회 전 실시하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4. **[의원평가]** 제21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대장동 국감, 대선전초전 국감 등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국감**이었고, ‘C-’ 학점 국감이었지만, 정책국감을 전개했다고 평가된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의원 수는 포지티브** 운동을 하는 본 모니터단의 성격과 노선에 비추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권영세·김영주·노웅래·안규백·우원식 의원 등 4선 중진의원**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원의 25%를 수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 기본적으로 **평균질의횟수와 질의응답시간(본질의+보충질의+추가질의 합산횟수 평균), 질의내용전체를 종합 수집**하였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예산집행관련 문제점 지적, 부정비리 지적, 정책관련 문제점 지적,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내역 점검여부**를 6단계(아주잘함 5점, 잘함 4점, 보통 3점, 못함 2점, 아주못함 1점, 해당사항 없음 0점)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평균질의 횟수 이상 질의, 대안 또는 법과 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은 가점**하고, **중복질의(발전 없이 같은 내용을 중복 질의한 경우) 질의 매너(막말, 소리 지르기, 질의시간 안지키기, 상대방 의원 비난) 감사매너(끼워들기, 잡담, 판짓) 국정감사 방해(파행유발,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국감방해) 등은 감점**하였고, **추천 및 지적의 경우에는 ①적시성(필요성) ②충실성 ③논리성(실효성) ④정확성(적법성) 등의 기준에** 따랐습니다.

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의 경우**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평가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잘한 의원들을 1차 선발(50%)한 후 선발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 차례 교차하여 평가**하였고(예: 한 상임위원회에서 A, B, C, D의원들이 추천된 경우 AB, AC, AD, BC, BD, CD의 질의를 비교하여 평가함),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모니터단에서 모니터·분석·확보한 자료와 맞는지 내용을 비교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였으며, 국감불참 2일 이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국감우수의원(국리민복상)은 각 상임위별 상위 25%내에서 선정하였습니다. 결임 상임위의 경우에는 본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의원 중에서 선정하였습니다.

3) 이번 평가에서 **모범의원**으로, 5선이면서도 적확한 자료와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정책질의로 국감의 생기를 불어 넣은 변재일 의원(과방위)과 서병수 의원(재정위) 그리고 당차원의 전략적 사보임 중에도 공무원 증원 문제 등 날카로운 정책질의와 함께 모범적인 감사를 한 이명수 의원(행안위)과 상임위원장으로 매 피감기관마다 정책질의를 하여 국정감사 활성화에 기여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선정하였습니다.

4) 이번 **우수 상임위원장** 평가에서는 위원장의 리더십과 역량을 비중있게 평가하였고, 여야정쟁 속에서도 편파시비나, 파행없이 감사를 한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3선의 박광은 법사위원장(민), 윤재옥 정무위원장(국)과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국)을 선정하였습니다.

5. **[국감당부]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은 “권력은 집중(분권-Balance)되거나 통제(감사-Check)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한다.(Lord Acton)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모든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의 의미는 막중하다. 그러므로 여당이라 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권력(정부)을 제대로 감사해야(헌법 제46조②, 국회법 제114의2)하고, 야당은 여당보다 더 엄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무장해 사전준비와 철저한 현장점검을 거쳐 충실국감을 해야 할 것임에도, 이번 국감은 끝까지 상대당 대선주자에 대한 흠집내기에 치중하는 부실국감이었다.” 고 강조했습니다.

예년(근년12/27)보다 1개월 늦어진 - **국정감사 종합평가/국리민복상 수상자 발표 지연이유** : 2021 연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 위중증 환자 등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자가격리/ 자발적 사무실 폐쇄 등으로 정밀평가에 시일이 걸렸음을 양해바랍니다.

붙임 : 국정감사(21-2) 종합평가와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명단 1부. 끝.

《상세한 분석·평가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 WWW.GOODLAW.ORG 참조바랍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문의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02-523-8760》

2021년도 국정감사(21-2)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명단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23년 전통의--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모범의원상) (가나다 순)

변재일 의원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5선)	서병수 의원 (재정위, 국민의힘, 5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명수 의원 (행안위, 국민의힘, 4선)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위원장상)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박광온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재욱 정무위원장 (국민의힘)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 (국민의힘)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원회	선정 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존칭 생략, 가나다순>> 정당표시 : 더불어민주당(민), 국민의힘(힘), 시대전환(시)
국회운영	6	성일종(국) 이수진(민) 임이자(국) 전주혜(국) 추경호(국) 흥기원(민)
법제사법	4	송기현(민) 유상범(국) 조수진(국) 최기상(민)
정무	6	강민국(국) 김희곤(국) 민병덕(민) 유동수(민) 윤창현(국) 이용우(민)
기획재정	6	김수흥(민) 류성걸(국) 박홍근(민) 서일준(국) 우원식(민) 유경준(국)
교육	3	권인숙(민) 이탄희(민) 정경희(국)
과학기술정보통신	5	박성중(국) 조승래(민) 한준호(민) 허은아(국) 황보승희(국)
외교통일	5	김경협(민) 김석기(국) 김영주(민) 조태용(국) 지성호(국)
국방	4	강대식(국) 김민기(민) 신원식(국) 안규백(민)
행정안전	5	김도읍(국) 김민철(민) 박완수(국) 박재호(민) 서범수(국)
문화체육관광	4	김승수(국) 김승원(민) 배현진(국) 임오경(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5	어기구(민) 위성곤(민) 이만희(국) 이양수(국) 이원택(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7	김정재(국) 신영대(민) 양금희(국) 양이원영(민) 이장섭(민) 이철규(국) 조정훈(시)
보건복지	6	김미애(국) 신현영(민) 이종성(국) 전봉민(무) 정춘숙(민) 최혜영(민)
환경노동	4	권영세(국) 김성원(국) 노웅래(민) 안호영(민)
국토교통	7	김은혜(국) 김희재(민) 송언석(국) 조오섭(민) 조응천(민) 천준호(민) 하영제(국)
여성가족	2	강선우(민) 서정숙(국)
비고	79	1. 선정비율 : 상임위원회별 25% 범위 내에서 선정 2. 전체 340명(운영 28/ 여가 17) 중 79명으로 전체 23.24% 3. 겸임상임위는 본상임위에서도 우수하였음 4.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당시의 상임위원회임(사보임의 경우 맨 마지막 상임위)

2021년도 국정감사(21-2)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통계

2021. 10. 27. 국정감사 종료시점 기준

① 교섭단체별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선정의원(명)	41	43	2
전체의원(명)	163(169)	103	23
선정비율(%)	25.15%	41.75%	8.70%
검입상임위포함(명)	189	119	26
선정비율(%)	21.69%	36.13%	7.69%

※ 국회의장 제외. 더불어민주당(163인)의 경우에는 국무위원(6인)을 제외한 수취임 <<운영, 여성가족위원회 포함 의원수>>

② 당선횟수별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선정의원(명)	46	23	10	6	2
전체의원(명)	149	73	42	19	12
선정비율(%)	32.21%	30.14%	19.05%	31.58%	16.67%

※ 박병석 국회의장(6선) 불포함

③ 여성의원

구분	여성의원(명)	우수의원(명)	선정비율(%)
의원수(명)	55	22	40.0%

※ 감사위원 295명 중 여성감사위원의 비율은 18.64%임

④ 지역구 / 비례대표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선정의원(명)	15	71
전체의원(명)	47	248
선정비율(%)	31.91%	28.63%

※ 지역구 의원 249명 중 국회의장님 제외

⑤ 지역구 의원의 선거구별

광역 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광역 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47	14	29.79%	강원도	8	4	50.00%
부산광역시	18	7	38.89%	충청북도	7	2	28.57%
대구광역시	12	6	50.00%	충청남도	11	3	27.27%
인천광역시	13	1	7.69%	전라북도	10	4	40.00%
광주광역시	8	1	12.50%	전라남도	10	1	10.00%
대전광역시	6	1	16.67%	경상북도	13	5	38.46%
울산광역시	6	1	16.67%	경상남도	16	5	31.25%
세종시	2	0	0.00%	제주도	3	1	33.33%
경기도	58	15	25.86%	계	248	71	28.63%

※ 국회의장은 국가위원이 아니므로 대전은 7명 중 국회의장 지역구인 대전시 서구갑 1명 제외

2021년도 국정감사모니터링 평가기준 및 방법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면 비대면모니터링으로 변경하였고,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을 정함.

1. 기본 자료 조사

- 국정감사에 참가하는 모든 국회의원(감사위원)들의 각 상임위원회 피감기관별 질의내용 중 다음의 사항을 전수 조사함.

- (1) 피감기관별 질의횟수(주질의, 보충, 추가질의 합산횟수)
- (2) 피감기관별 질의시간 합산
- (3) 피감기관별 질의내용 정리

*의사진행, 자료제출발언은 포함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조사 및 평가

(1) 질의내용 분류 및 평가

- 질의내용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잘함 5점, 잘함 4점, 보통 3점, 못함 2점, 아주못함 1점, 해당사항 없음 0점’ 으로 평가함.

- ① 부정비리지적(피감기관이나 그 직원이 잘못된 사항 지적)
- ② 대안, 법제도 개선(피감기관의 법제도, 정책미흡 개선방안 제시)
- ③ 자금집행(재정)문제점(피감기관이나 그 구성원이 예산을 잘못사용한 사례 지적)
- ④ 시정조치점검(과거국감 지적에 대해 시정이 되었는지 점검)
- ⑤ 정책관련 잘못 지적(피감기관의 정책 문제점조명, 사례제시)
- (2) 중복질의유무(다른 의원의 질의에 발전 없이 같은 내용을 중복질의)
- (3) 감점요인 평가

- 질의 중 다음과 같은 언행이 있는 경우 확인하여 감점함.

- ① 질의매너(막말, 소리 지르기, 시간 안 지키기, 상대의원 비난)
- ② 감사매너(끼워들기, 잡담, 딴짓)
- ③ 국감방해 원인제공(파행유발, 의사진행 국감방해)

3. 국정감사모니터 위원 평가 및 우수(못한)의원 추천 기준

- 국정감사 내용 평가의 경우, 아래 다섯 가지 준거(원칙)에 의해 5 단위

(아주 잘함, 잘함, 평범, 못함, 아주 못함) 척도로 평가하여 우수의원과 못한 의원을 추천함.

- ① 적시성: 감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기(적시)에 이루어 졌는가?
- ② 충실성: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 효과를 낼 수 있는가?
- ③ 논리성: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가?
- ④ 정확성: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인가?
- ⑤ 공정성: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이 없이 공정한가?

4. 종합평가

(1) 교차평가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평가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잘한 의원들을 1차 선발 (50%)한 후 선발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 차례 교차하여 평가함.

예) 한 상임위원회에서 A, B, C, D의원들이 추천된 경우 AB, AC, AD, BC, BD, CD의 질의를 비교하여 평가함.

(2)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의 평가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본 모니터단이 입수한 자료와 비교,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함. 잘한 의원이 많거나, 평가가 비슷한 경우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함.

5. 결과 발표 및 국정감사 평가

전체 국정감사 평가대상 국회의원 중 위원회별로 25%를 우수의원으로 평가하여 국민민복상 수상자로 선정함.

①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의 법적근거와, ②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③법률연맹의 국회의정감시 7종 국익(國益)기능

① 국정감사모니터링은 국민주권원리, 헌법(제50조)국회법(제75조)국감조법(제12조)에 근거한 의사공개원칙에 따른 권리다
 ② 대학생단체 등 270개 NGO연대기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3년된 국감모니터 전문단체이며, 그 주관단체인 ③ 법률소비자연맹은 30년된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NGO/NPO로서, 국회사무처가 모니터링을 방해한다 하여도, 이미 지난 10수년 동안 ‘온 라인 만으로’ 시행한 의정종합평가(대한민국 헌정대상)가, 국내외적으로 정착(미국/일본/영국 등의 NGO/국회의원/교수/변호사들의 롤 모델이 됨)되었듯이, 현장 모니터링 안해도 국감모니터링은 할 수 있지만, 이는 아래와 같은 7종 국익기능을 저해하는 반쪽애국/민주화다.

1. 국회의원의 민주성 상징 --대한민국 국회엔 22년(주관단체는 30여년)동안 “단 한번의 공정성 시비없이” <편취/비방보도는 법적/윤리적 근거없는 100% 가짜뉴스로 드러남> 국회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모니터/평가를 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그 활동, 즉 시민의 권력 감시가 실질적으로 작동된다는 자체가, 국회와 국회의원의 건전성/민주성의 상징이 된다.

2. 국회의원의 신뢰성 회복 --국민들은 언론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이 싹질하는 것만 보았다가, 우수한 스펙을 가지고, 국민민복을 위하여 국정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대학생이나 시민(대표)들이 비로소 국회의원의 노고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와 국가에 대한 우호적/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되게 한다.

3. 법치주의를 지키는 공헌 --권력은 부패하는 속성이 있고,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Sir. Acton > 권력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예방/적결하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시민단체들이 모니터/평가하는 것은 법치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권리요 책무이다.

4. 감사위원의 긴장감 조성 --감사현장에 NGO대표가 불참(22년 만에)한 2020년도 국감(과기)에서, 국정의 비위를 비호하고 감싼다는 의혹 속에 엄중한 감사보다는 여/야간 막말과 난장판이 연출되었는바, 현장참관은 유권자가(감사위원을) 지켜본다는 긴장감속에, 피감기관의 부정비리, 예산낭비, 정책지적 등, 충실한 감사를 독려하는 기능이 크다.

5. 피감기관의 긴장감 조성 --피감기관이 국감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모르쇠’ 답변이나 ‘불성실하게 버티기’ 답변을 하기도 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때 감사현장에서 시민단체(NGO모니터단)가 피감기관을 지켜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감기관을 긴장케 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감하게 만든다.

6. NGO 정책과 국정 참여 --시민사회단체가 감사현장에 참여하여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지는 국정정보를 이해하여, 시민사회공동체의 정책개발과 건전한 비판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받는다. UN이 정부(GO)의 주장만이 아닌, 옵서버로 비정부 민간기구(NGO)를 제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공동발전을 위한 진실 추구적 협동원리라고 본다.

7. 시민 대학생들 정치학습 --청년/대학생 및 시민들이 국감현장을 직접 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학습하게 된다. 정해진 룰(rule)에 따라 국정현안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들으며, 나라사랑/나라걱정을 하게 되는 등 민주정치 학습을 하게 된다.

감사위원들께서 (국정)감사장에 반드시 참석하고 자리를 지켜야(坐定) 할 5가지 필요성

《 국정을 감사하는 감사위원이 감사장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책무다. 》

1. 수감기관(대개 20~40명)을 압도하는 숙연한 감사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감사위원(국회의원) 전원이 감사위원석에 좌정(坐定)할 필요가 있다고 봄

국정감사가 수감기관에 대해서 기관단위로, 즉 국회(상임위 감사반)가 감사하는 것이라면 감사위원석이 텅빈 채 질의하는 감사위원 한 사람만 남아서 감사하는 것이 옳은지? 효율적인지? 그렇다면 전체 감사위원석(16~29석)을 상설하기보다는 한사람씩 올라가서 질의하는 감사위원 좌석을 (감사장 전면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어떨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 등의 “심상치 않은 여러 상황(소위 변론의 전 취지)등”을 파악·대처하기 위해서도 ‘자리지킴’이 필요하다고 봄.

설사 감사장 밖 의원실 등에서 TV 화면으로 타 의원의 질의내용을 시청한다고 하더라도, TV 카메라만으로는 감사장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상황이나 민감한 부분이 있을 뿐더러, 그나마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면 충실한 감사의 결실을 얻어내기는 어렵다고 봄.

3. 피감기관의 교묘한 회피성 답변에 대한 승복을 받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교묘한 회피성 답변으로 “질의와 감사를 무색하게 만드는 피감기관”이 적지 아니한데, 그런 상황을 지켜 보면서 수감기관의 승복을 받아 내려면 회피성 답변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타 의원과 수감기관의 질의응답을 꼼꼼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중복·반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많은 상임위에서 중복·반복질의로써 연중 20일에 불과한 국정감사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바, 수감기관에게 ‘실상을 모르는 허술한 감사’로 알보이지 않고, “다른 의원이 방금 전에 했던 질의를 똑같이 다시 질의하는” 중복질의의만이라도 피하자면 감사위원의 ‘자리지킴’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국감직후에 있는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도 좌정이 필요하다고 봄

감사위원으로서의 ‘질의준비’ 또는 ‘국감 외의 다른 업무처리’를 ‘이석’의 사유라 할 수 없으며, 감사당일에는 타의원의 질의내용이나 피감기관의 답변 등을 경청함으로써, 국감직후에 있을 예산국회와 입법과정에 긴요한 자료를 수집·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감사장을 꼭 지켜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그러나, 본 NGO모니터단의 출석·이석체크는 우수의원 선정을 위한 평가의 주요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마라톤 경주에서 완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틀이상 결석 시에는 우수의원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왔던 것이며, 둘째, 이석 상황은 정성평가 결과가 동일하거나 비등한 우수의원 후보의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가·감정평가를 하여 왔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국정감사 총평 및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선정

—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연대기구인 23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 국감평가 주요목차 ■

■ 2021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모범·우수상임위원장·우수의원)	5
■ 2021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주요통계(모범·우수상임위원장·우수의원 포함)	6
■ 2021년도 국정감사모니터링 평가기준 및 방법	7
■ 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의 법적근거와 모니터단의 국회의정감시 7종 국익(國益)기능 ...	8
■ 감사위원이 국정감사장에 좌정해야 할 이유	9
I. 국정감사 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총괄	10
◎ 2021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 개요	10
◎ 2021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13
1.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의 성적은 C-학점	14
2. 국정감사 질의 횟수 및 질의응답 시간	26
(1) 총괄 : 질의횟수 총 5,934회, 질의응답 총 698시간 22분 46초	26
(2) 질의횟수 최고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조한 위원회는 국방위원회	26
(3) 질의응답시간 최고는 법제사법위원회. 저조한 위원회는 국방위원회	27
(4) 국회운영,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원회	28
(5) 질의시간 총량 :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우세	28
(6) 교섭단체 상임위별 평균질의 응답시간 및 평균질의횟수 비교	29
3.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과 상임위 국감활동 요약	31
(1)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 대장동과 고발사주	31
(2)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 대장동 사건 vs 도이치 증권	33
(3)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 가상자산 과세, 문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공과	34
(4)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 : 대학역량평가, 학력격차	35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 : 플랫폼, 탈원전, 방송 공정성	37
(6)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 : 종전선언 논란과 남북교류	39
(7)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 :국감무산, 군인공제회 투자실패	40
(8)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 대장동 게이트와 공정선거관리	41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 : 플랫폼, 코로나19와 문화	43
(1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 : 쌀값과 해양쓰레기	45
(11)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학영) : 에너지전환과 상생	47
(12)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 위드 코로나와 백신 부작용	49
(13)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 : 광상도와 탄소중립	51
(14)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현승) : 대장동 게이트	53
(15)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 : 대장동 근조리본과 무료변론	54
(16)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 : 여성가족부 폐지	55
4. 마구잡이 피감기관 선정,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국감 여전	55

5. 증인체택 문제 등으로 인해 의사진행 발언만 풍성	56
6. 국회사무처의 코로나 방역 가이드라인은 옳은가	59
7. 제21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개선돼야<매년 제안>	61
(1)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 ‘붕어빵’ 국감이 되지않게 해야	61
(2)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국회 전 30일), 못 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63
(3)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64
(4)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64
(5)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 겉핥기’ 식 국감 종식	66
◎ 2021년도 국정감사 감사위원 평가	67
1.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모범의원)	67
(1) 선정근거와 연혁	67
(2) 선정결과와 선정사유를 약술함 (가나다 순)	68
(가) 변재일 의원(5선,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68
(나) 서병수 의원(5선,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71
(다) 서영교 의원(3선, 행정안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73
(라) 이명수 의원(4선,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77
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	80
(1) 평가기준 및 방법	80
(2) 선정결과 및 사유를 약술함 (국회법 제37조에 의한 순)	81
(가)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81
(나) 윤재옥 정무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3선)	84
(다)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3선)	88
3.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명단 별첨함)	90
II. 2021년도 국정감사 진행상 특징	91
1. 코로나 19 국정감사로 인한 특징	91
(1) 국정감사 현장출입 제한 / 별도 대기장소 마련	91
(2) 국회에서 대부분 진행(지난해에 이어 계속)	91
2. 질의시간 길어져 소리없는 국감: 100군데 국감장 조사결과 총 2,957회 마이크 중단, 의원당 매일 1.59회 소리없는 국감	92
3. 2021년 국정감사의 행태적 특징	96
(1) 10개 이상 동시수감으로 부실국감 여전	96
(2) ‘한마디’ 말 못하는 기관도 여전	99
(3) 심야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도 줄어(8개) 그것도 파행때문	100
(4) 저녁 6시 이전에 일찍 마무리되는 국감도 19회로 여전	101
(5) 또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은 ‘깜깜이’ 재외공관 국감 실시	103
(6) 파행성 정회가 늘어 — 손팻말, 마스크, 리본 정회	104
(7) 국정감사 불출석 의원은 조금 많이 늘어	105
4. 국정감사의 일반적 특징은 여전함	107
(1) 지역구 관련 질의	107
(2) 피감기관의 제출자료로 시간 때우기 (노력한 결과물이 없음)	107
(3)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버티기	107

(4) 자리 안 지키기 여전	107
5. SNS시대이지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캄캄	107
Ⅲ. 2021년도 국정감사의 화제성(話題性) 통계 등 자료	111
1. ‘대장동’ 국감이라고 하는데, 87개 국감장에서 ‘대장동’ 은 1,924회 나왔음	111
2. 오징어게임 선풍적 인기, 37개 국감장에서 모두 63명의 감사위원이 언급	116
3. 제21대 국회 국감의 단골소재가 된 방탄소년단(BTS)	117
4. 코로나 19 방역 및 백신 관련 국정감사 내용	120
5. ‘플랫폼’ 국감, 플랫폼 질의가 나온 국감장은 73곳	122
6. 대똥이 등 2021년도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국감소품 일부사례	130
7. 주목을 받은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141
8. 2021년도 국정감사장 앞 시위 (언론보도 중심)	148
9. 2021년도 국정감사장의 ‘웃음소리’, 웃음이 터진 이유 분석	152
10. 2021년도 국정감사기간 곤욕을 치른 국회의원	162
(1)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	162
(2) 환경노동위원회의 윤준병 의원	163
(3) 문화체육관광위의 정청래 의원	163
(4)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	164
(5) 행정안전위 김용판 의원	164
11. 국감 중 망신스러웠던 피감기관(장) 및 증인	166
(1) 이성윤 서울고검장	166
(2)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167
(3) 군인공제회	167
(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168
(6) 장하성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168
(7) 김외숙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169
(8)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170
(9)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170
12. 낙하산 인사 등의 논란은 38곳 국감장	172
13. 논란이 된 증인 및 피감기관의 ‘말 한마디’	182
(1)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그분이 아니다.’	182
(2)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잘 알지 못하니’	182
(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무료분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182
(4) 이재명 지사의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싶다’	182
(5)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부심이 매우 큰 사업 중의 하나’	183
(6) 김오수 검찰총장의 ‘계좌추적을 죽어라 하고 있다’	183
(7)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종전선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183
(8)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	183
(9) 양승동 KBS 사장의 ‘수신료 인상’	184
(1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구체적 협의가 있다’	184
(11)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BTS도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본다’	184
14. 열전 또는 가십을 야기한 ‘한마디’ (언론보도 중심)	184
(1)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버르장머리’	184

(2) 조경태 의원의 ‘쫓잔’	185
(3) 임오경 의원의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다고 한다’	185
(4)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모’	185
(5)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돈다발’	186
(6) 정청래 의원의 ‘통행세, 봉이 김선달’	188
IV. 제21대 국회 제2차년도(2021년도)국정감사 이모저모	189
1. 2021년도 국정감사의 실시시기 조정 등	189
2. 2021년도 국정감사의 감사위원 :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295명	189
3. 2021년도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은 745개(지난해 705개)	191
4. 5개 이상 피감기관 동시수감은 51회	193
5.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 및 인터넷 생중계	198
6. 2021년도 국정감사의 감사진행시간은 1210시간 7분	200
7.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 2개 위원회 6일 동안 8개 시·도 대상 실시 이슈는 서울시- 대장동, 경기도 - 대장동, 부산시 - 엘시티	202
8. 국정감사 중 감사의원 등의 회자된 말	205
9. 국정감사 중(시작전 포함) 위원회 전체회의 횟수 32회(지난해 40회)	217
▣ 2021년도 국정감사, 2020년도 국정감사 및 2019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표	220

I. 국정감사 평가회 및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총괄

▣ 2021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외 22인의 공동단장)은 한국 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연대기구인 23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활동을 온라인(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하여, 국정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의 질의응답 상황과 내역을 날날이 모니터링하였고, 295명 감사위원 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모니터하면서, 입수가능한 모든 국감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지난 23년간 공개하고 있는 정밀·공정한 평가기준과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정량화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선정된 제21대 국회 제2차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을

선정, 공개하며, “2021년도 국정감사 종합평가” 를 발표한다.

■ 2021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1.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의 성적은 C-학점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제21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의 성적을 지난해(D학점)보다 조금 상향된 ‘C-’ 학점으로 평가한다.

(1) 국감행태

- ①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동영상(주로 뉴스)을 재생하거나, 자기 의견을 길게 발표하는 비전제시형 국감으로 퇴보하였으며, 시간부족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일대일 질의/답변을 통한 생동감 있는 감사라는 국회법상의 일문일답원칙이 훼손되었다.
- ② 감사일정은 대폭 줄고, 코로나 위기라면서도 지난해보다도 40개가 증가한 745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선정했다.
- ③ 국감조별로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 을 하지 않고 21일 국감(행안위의 경우에는 26일)을 고수한 채, 감사일정은 대체 공휴일로 인해 3일 국감하고 4일 쉬는 3감 4휴 국정감사를 하였다.
- ④ 국감기간 아닌 때에 할 수 있는 현장시찰과 민간인 증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일부 위원회에서 여전하였고,
- ⑤ 태부족한 감사시간을 ‘대장동’ 팻말이 국회법 148조¹⁾ 위반인지, 정치적 표현인지 논란으로 불필요한 파행을 반복하며 낭비(?)하였다. <<다행히 위원별로 협의가 이루어져 순차적으로 양당의 국회의원 앞 손팻말을 제거하기로 하였

1)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으나 10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근조리본, 마스크의 문구 때문에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지다가 정회한 후 오후에 국정감사를 진행»

- 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질의참고를 위해 캔, 물병, 병 등을 이용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수조, 산업용 안전벨트(윤준병 의원), 문광위에서는 게임VR시연(이성현 의원), 국토위원회에서는 양가면 개인형(송석준 의원) 등 소품이 등장하였으나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윤준병 의원은 수조에서의 물고기가 죽어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비난성명을 받기도 하였음»

(2) 최대 이슈

① 대장동 국감 : 판교 대장동(이재명) 게이트 vs 국민의힘 게이트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하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천하동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진행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게이트' 라고 하였다. 환노위에서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쟁점이 되었고, 기재위는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법사위에서는 전 대법관의 관여여부와 이재명 선거법위반 재판에서의 영향력 행사 여부가 집중되었다. 그 외 정무위와 국토위 등 대부분의 상임위 국감장에서 관련 질의가 있었다.

«대장동 의혹 관련 국정감사 쟁점»

쟁점	내용	관련 상임위
초과이익 환수 조항 뺀 최종 결정자는 누구였나	민간사업자에게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최종 사업협약서에서 빠진 경위 등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등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	컨소시엄 구성 당시 전후 사정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하나은행 컨소시엄 측이 주주협약 변경 과정에서 화천대유에만 유리하게 바꾼 점	정무위 등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호화 고문단' 영입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유명 법조인들로 구성된 화천대유의 '호화 고문단'이 어떤 목적으로 영입됐는지	법제사법위 등

② 플랫폼 국감 :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올해는 네이버, 카카오 등 IT기업인 위주로 국정감사 증인이 채택되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플랫폼 기업인들이 위원회별로 겹치기 증인으로 채택되어 기업 자체의 문제와 중소기업, 골목상권과의 충돌 문제에 대한 호통과 질책을 들었다.

③ 손팻말 국감 : 손팻말에 리본, 마스크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교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 등의 피켓과 마스크와 리본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父) 집, 곽상도(子) 50억. 아빠의 힘,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50억 클럽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등의 손팻말이 나타났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안합니까. 적당히들 하세요’라는 손팻말을 게시했다.

이 때문에 10월 1일과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손팻말’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다만 이 팻말논란으로 인해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되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3) 최대관심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이달(10월) 마지막 주 초쯤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2주인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11월 9일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가늠한 말로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또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감한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불편·분노케 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과학적이지 않은 정치방역조치였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4) 실망스러웠던 국감장

① 국방위(위원장 민홍철)의 국방부 국정감사

10월 5일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무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설치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피켓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시작되지 못했다. 이면에는 군인공제회의 대장동 관련 투자 실패 국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 졌다.

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이원욱)의 ‘버르장머리’ 파행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5일 오전 10시에 개시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30분 만에 중단됐다. 진행 절차를 놓고 이원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 간에 고성어 오가는 다툼이 벌어졌다. 이원욱 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버르장머리 없게” 라는 말을 하였다.

③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이채익)의 특혜성 이건희 콜렉션 관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소속 의원들이 10월 7일 무려 11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후 5시 23분경에 서둘러 마치고, 야밤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작품들을 관람하였다. 이에 ‘여야 의원들의 특혜성 관람’ 과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논란이 야기되었다. 그럼에도 문체위는 10월 8일에도 현장시찰을 하였다.

④ 의원간의 언쟁으로 장내 소란 / 파행

의원간의 언쟁으로 인해서 장내 소란이 벌어져서 파행을 빚기도 하였다. 첫날 외교통일위원회가 대표적이었다(오후 5시 넘어 국정감사가 중단됨). 가장

많은 소란이 있었던 곳은 국토교통위원회로 모두 5곳의 국정감사에서 소란이 벌어져 정회를 하기도 하였다.

그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로 3곳 국정감사에서 소란이 있었고, 정회가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 10월 26일과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소란이 빚어졌고, 26일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는 오전에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고, 오후에 국정감사를 하는 파행성 정회를 하였다.

《의원간의 언쟁으로 인해 장내 소란사태가 발생한 국정감사장》

국감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2021.10.01.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한아프리카재단
2021.10.01.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1.10.0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2021.10.0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1.10.07.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안전관리원·주택관리공단(주)·건설기술교육원
2021.10.08.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2021.10.18.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2021.10.19.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1.10.20.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2021.10.20.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2021.10.26.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2021.10.27.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5) 어느 나라 공직자인지 의문시된 답변들

① 성남 판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책임회피 소극답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면서 또 국민들을 절망케 한 대장동 게이트는 많은 국가기관과 관련이 있었으나 정작 공직자들은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듯한 답변을 이어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장동 감사에 대해 ‘직무범위를 넘는 것’ 이라고 답변을 하였고,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NH공사가 직접 한

사업이 아니다’ 라며, 그 ‘당시에 재직 중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하였다. 김대지 국세청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세무조사나 금융조사와 관련해 “수사과정을 지켜 본 후 절차에 따라 하겠다” 고 답변을 하였다.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 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화천대유의 담합여부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하겠다” 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② 정의용 외교부 장관 “안보개념 변화로 북한은 주적 아니다?”

10월 1일 외교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의 국정감사에서는 9월 30일 북한의 근거리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이 UN연설과 국군의날 행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을 질타하였다. 또한 북한의 계속된 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요구조건을 계속 들어주고 있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석기 의원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 아니냐” 고 질문하자 외교부 장관은 “주적개념이 변화하였다” 고 답변하여 많은 국민을 경악케 했다.

김석기 의원)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주적이라는 말씀을 한 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어제와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도발이 계속 되는 데에도 북한이라는 말을 굳이 안 하십니까. 우리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정의용 장관) 주적 개념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 주적개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안보개념이 바뀐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연설 과정에 우리 군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를 밝히시고, 또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그러한 계획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김석기 의원) 아니, 우리 군을 신뢰하고 국방력을 강화한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굳이 북한이라는 말을 한 마디도 안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외교부 국정감사 2021.10.1.>

또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임에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라고 발언하였다.

③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실패라기 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조치 다 했다”

서병수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가, 성공했

다고 평가하는가” 를 묻자, 기재부 장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정책적 조치는 전부했다**” 고 답변하였다. 잘못했음을 인식해야 정확한 대책마련이 가능한데,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더 할 정책도 없다면 앞으로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서병수 의원)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세요,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홍남기 기재부장관) 예, 의원님 뭐 여러 가지 경제정책 분야가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전 국민이 밀접하게 관련이 된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도 할 수 있는 조치는 정책적 처방은 전부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서병수 의원) 아니 결과적으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홍남기 기재부장관) **제가 뭐 그렇게 평가하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년과 올해 이렇게 안정되지 못해서**
 서병수 의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송영길 민주당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21.10.5.>

④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북한 퍼주기 연구서 관련 ‘용역일뿐’ 답변

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이채익)의 문화체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정부가 북한관광 개발을 위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을 담아 보고서(용역비 3억)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 황희 문체부 장관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연구한 것으로 연구용역 차원일 뿐 전혀 실행된 바가 없다” 고 말했다. 배 의원은 “북한은 사실상 리스크를 거의 감당하지 않으면서 관광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받아가는 이상한 구조” 라며 “어떻게 하면 국내 자본을 수월하게 북한으로 유입시켜 북한관광자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어떻게 적절하게 회피할 수 있을지 고민이 담긴 보고서” 라고 비판했다.

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저출산문제에 대한 무대책 답변

보건복지위원회의 10월 6일 국정감사 첫날 이달곤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문제를 지적하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른 정책을 개발해야지 돈을 주는 정책만 계속 하고 있

다”라며 “돈은 나가고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장관 업무 범위에서 세계 최악의 결과가 나왔으니 사과하라”고 하였고, “국정감사는 여태까지 한 일에 대해 오류가 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유가 뭔지를 따지는 자리”라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대답은 국정질의해서 하면 된다. 장관과 청장의 답변이 감사받는 태도가 아니다. 너무 심하다”라고 질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위험상황 등을 대통령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달려가서 보고했냐”고 물으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권덕철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⑥ 정의용 외교장관, 서욱 국방장관의 북한의 발사는 도발이 아니라 위협

북한의 SLBM에 대한 발사에 대해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도발을 “(우리) 영공과 영토, 영해 등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북한의 SLBM에 대해선 “이번 건은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고 말했다.

강대식 위원) SLBM 사거리가 590km에 불과합니다. 이번 SLBM하고 최근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아주 도발 행위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서욱) 저희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집니다.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공영토영해에,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 “우리 군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전략적 도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6) 피감기관의 자료부실/지연

①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감전날 자료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12시간 전에야 법사위 요구자료 제출한 대법

원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대법원은 9월 30일 밤 10시경에야 법사위가 의결해 요구한 국감용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위반 관련 재판연구관의 의견서는 끝끝내 제출을 거부하였다.

② 외교부의 소속정당 이름 들린 자료 제출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가 정부(외교부)의 자료제출 거부 및 부실 실태를 조목 조목 PPT로 지적하기도 하였고, 국민의힘을 국민의 당이라고 표시하거나, 무소속이라고 표시하여 외교부의 국회 무시(정신나간)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③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의 자료제출 거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 시작과 동시에 야당 의원들은 10월 6일 ‘백신 이상반응 인과관계’ 자료제출 미흡을 지적했다. 질병청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상반응 관련 신고자료에 의무기록 등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였다.

④ 대장동 관련 요구자료 214건 중 제출자료 0건

언론보도에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 의하면, 10월 13일 기준 대장동 관련 요구자료 214건 중 제출 자료 0건, 자신만만해하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놓고 ‘꼼수 국감’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료 없이 국감을 하라며 국회를 짓밟는 이재명식 신(新)독재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재명 후보의 ‘독재국가 예고편’ ” 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자료제출 거부(지연) 및 부실제출이 논란이 되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선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자료가 사실은 꼭 제출받아야 되는 자료임에도 전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꼭 필요한 자료는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광역교통부담금 현황 및 남부내역 그다음에 감면액 현황 그 자료를 감사 오전 중에, 이걸 충분히 댈 수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시장 결재직인이 찍혔거나 결재·서명된 서류를 요구했는데 일부만 제출하고 또 주주협약서 요구에 대해서는 표지하고 14페이지, 15페이지만 발췌해서 제출하는 등 이런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7) 미흡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국감성과

- ① 법치와 정의를 유린하고, 사법비리 의혹까지 들게 한 성남 판교 대장동 게이트 사태를 실시간으로 질의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알권리를 보장하였다.
- ②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 퍼져 있는 관피아 낙하산 인사와 캠프코더 (대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확인하였다.
- ③ 플랫폼 기업의 확장과 중소기업, 골목상권간의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감이 되었다.
- ④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서만 듣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이 감사장에 나와 코로나19 백신 피해 호소 등의 목소리를 국민들이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8) [국민소통] 국회의원의 82.2%(185명)는 네이버 블로그를 자신의 홈페이지로 소개

국정감사 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해 실시간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는 지를 조사해 본 결과(10. 9~10), 국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를 공개하고 있는 의원은 전체 감사위원(295명)의 76.27%인 225명이었다.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국정감사 자료를 게시하고 있는 의원은 141명으로 과반이 안 되는 47.80%였다. 국회의원 소개란 홈페이지에는 개인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북, 네이버 블로그 등이 소개되어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소개해 놓은 의원이 185명으로 82.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대표 등이 국감장(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불러 와서 플랫폼 기업과 고용여건(갑질) 관련 질타를 받은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9) [국감개선] 시정조치 여부 확인 점검 해야

- ① 국회의원(감사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해도 시정/개선하지 않고 피감기관장은 “예, 알겠습니다” 만 하고, 올해에도 감사위원들이 “작년 국감에서” “지난번 국정감사” 에서라며 시정조치가 되었는지를 감사장에서 확인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바람직했다. 시정조치의 여부를 끝까지 제대로 점검해 ‘그 나물에 그밥’ ‘붕어빵’ 국감을 근절해야 한다(시정조치는 질의한 의원의 실명을 명기하여야 할 것).
- ② 또한,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도 보강해, 실시간 시청 중 버퍼링 현상, 화면정지 등도 개선해야 한다.
- ③ 이번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하루에 10개 이상의 피감기관을 선정하여 감사를 하는 날이 135일 중 25일로 지난해 21일보다 많았다. 하루에 여러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정하여 하루종일 한 번도 질문을 받지 못하는 피감기관도 많아, 무더기 피감기관 선정을 근절해야 한다.

[참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10월 18일 월요일 한국연구재단 등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 53개 기관중 무려 35개 기관은 질의를 받지 못하였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변경 국감상황을 보면 질문을 받지 못한 기관수가 많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등 국정감사》

연도	구분	피감기관수	질의를 못한 기관수	비고
2017 (20대 국회 2차년도)	1일차	26	6	박상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예” 한마디 답변 제외
	2일차	26	6	
2018 (20대국회 3차년도)	1일차	26	9	
	2일차	26	4	
2019 (20대 국회 4차년도)	1일차	27	3	
	2일차	25	6	
2020 (21대 국회 1차년도)	하루	53	7	22개 기관만 출석요구함
2021 (21대 국회 2차년도)	2일차	53	35	

[조사] 국회 연도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1. 9. 28.~30)

- ④ 국정감사시 요구자료에 대해 거부를 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따라 주무장관의 해명 또는 관계자의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김석기 위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거짓으로 제출하면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징계조치를 촉구해주시고. 말로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국회가 왜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우리가 국정감사 준비를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징계촉구를 요구하겠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 중에서 2021.10.1.>

■ 국감 자료제출관련 문제가 된 곳 <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2021.10.5. >

윤한홍 위원) 난 금요일 날 대법원 국감을 처음 했는데 그 당시에 대법원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국감 하루 전날 거의 밤 10시, 12시 돼서 자료를 보내기도 하고 또 자료를 보내지 않기도 하고.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 아닌가 보여지는데 법무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주지 않아요. 의도적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서는 질타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냥 넘어가서 될 사항도 아니고요. 예시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특검법 관련해서 법무부의 입장이 뭐냐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을 안 합니다. 이게 답을 안 할 사항이에요?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5년간 공무원 뇌물죄·사후수뢰죄 기소 현황, 검찰 기소중지 현황, 최근 5년간 불기소처분 관련 수사기록, 은수미 선거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이유서,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해 기소된 관련자들 공소장, 다 줄 수 있는 자료예요. 다 줄 수 있는 자료인데 지금 국감이 시작을 하는데도 자료가 안 와요. 새롭게 요구하는 자료도 아니고 이미 지난주에 벌써 요청을 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감을 하라는 겁니까? 그냥 여기 앉아서 얼굴 보고 업무보고 듣고 법무부장관 설명이나 듣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대법원 국감 할 때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국감이 오늘 두 번째 날인데, 거기다가 법사위 국감의 가장 핵심이 법무부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장관에게 경위를 확인해 주시고 오전 중에 모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은) 여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그리고 자료제출의 불성실성 문제까지 지적을 하시는데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법무부장관님께서 여야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충실히 응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시는 약식명령 제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그리고 소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장동 사건 관련 출국금지 신청내용은 현재 수사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자평) 이번 국감은 이번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자 최장수 경제부총리이신 홍남기 장관님과 여러 기관장을 모시고 종합 국정감사라는 첫날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수준 높은 정책 대안 제시가 빛나는 국감이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합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2021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과연 제대로 된 국정감사였나 되돌아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대장동 관련 자료 제출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 채택 등 야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야당 간사께서 그렇게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욱이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묵묵 부답이었습니다.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유감입니다.

헌법 제61조제1항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들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료제출요구를 제대로 관철하지 않은 것과 증인·참고인을 제대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국정감사의 임무를 방기하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회를 질타하고 특검을 더욱 요구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는 각별히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국민 앞에 반성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서두에서 2021.10.20.>

2. 국정감사 질의 횟수 및 질의응답 시간

(‘국민의힘’ 이 ‘더불어민주당’ 보다 국회의원당 평균 1.5회, 12분 정도 많아
질의총량은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450시간으로 국민의힘 311시간보다 많아)

(1) 총괄 : 질의횟수 총 5,934회, 질의응답 총 698시간 22분 46초

개별 국회의원의 질의응답 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국정감사 진행도중 국회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및 자료요구 발언, 그리고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제외한 감사위원이 실제 국정감사를 한 질의응답(증인신문 포함)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속기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을 비교·확인작업에 질의의원이 달리 표시된 경우 등 3군데 차이점이 있어서, 발견한 내용은 일부 보정하였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총 질의횟수는 5,934회였으며, 국회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하면 5,781회였고, 질의응답 총시간은 681시간 3분 35초였다.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한 감사위원당 평균 질의횟수는 19.5회였으며, 질의응답시간은 약 2시간 18분 58초로 잠정 조사되었다.

지난해(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한 감사위원당 평균 질의횟수는 24.3회였으며, 질의응답시간은 약 2시간 45분 41초였다.

수치상으로는 지난해 보다 질의횟수 및 질의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가 및 결석으로 한 번도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한정에** 환경노동부장관(행정안전, 정무-사·보임), **이인영** 통일부 장관(기획재정위원회),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위원회),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토교통위원회), **박범계** 법무부장관(환경노동위원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곽상도** 의원(교육위원회), **정찬민** 의원(교육위원회) 이상직 의원(국방위) 등과 일부 여야당 경선 후보나, 국정감사기간중 구두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상임 위원장과 청가 및 결석 위원을 제외한 수치였음.>>

《2021년도 국정감사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 현황》

위원회	위원수	질의횟수	질의응답시간	의원당 평균질의 횟수	의원당 평균질의응답시간
국 회 운 영	28	111	12:09:13	4.0	0:26:03
법 제 사 법	18	421	56:57:02	23.4	3:09:50
정 무	24	526	61:52:41	21.9	2:34:42
기 획 재 정	25	538	62:31:56	21.5	2:30:05
교 육	16	336	41:06:53	21.0	2:34: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509	52:22:20	25.5	2:37:07
외 교 통 일	20	160	18:39:56	8.0	0:56:00
국 방	17	255	30:56:31	15.0	1:49:12
행 정 안 전	22	584	59:34:21	23.4	2:22:58
문화체육관광	16	289	36:21:44	18.1	2:16: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412	47:37:47	21.7	2:30: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9	461	60:40:12	15.9	2:05:31
보 건 복 지	24	386	48:55:57	16.1	2:02:20
환 경 노 동	16	397	49:19:11	24.8	3:04:57
국 토 교 통	29	507	54:07:04	17.5	1:51:58
여 성 가 족	17	42	5:09:58	2.5	0:18:14
총계/평균		5781	681:03:35	19.5	2:18:58
검임포함 총계/평균		5934	698:22:46		

※ 외교위는 국내에서 진행된 것만 통계함 (국방위의 경우 합참 국감 제외)

(2) 질의횟수 최고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저는 국방위원회

의원의 질의횟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로 한 감사위원회당 평균 25.25회 질의하였고, 가장 저조한 위원회는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로 15회에 불과했다.《참고로, 국내반만 통계한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에는 8회임》

(3) 질의응답시간 최고는 법제사법위원회, 저조한 위원회는 국방위원회

의원들의 질의 및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을 통계한 결과 평균 질의응답시간인 가장 긴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로 3시간 9분 50초였고, 그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로 3시간 4분 57초였다.

질의응답 시간이 가장 저조한 위원회는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로 1시

49분 12초에 불과했고, 그 다음으로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현승)로 질의응답 평균시간은 1시간 51분 58초에 불과했다.

(4) 국회운영, 여성가족위 등 검임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를 살펴 보면, 전체 의원의 질의횟수는 평균 4회(지난해 4.3회)였고, 질의응답시간은 26분 03초(지난해 26분 11초)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횟수는 3.8회(지난해 3.93회)였고, 질의응답시간은 24시간 49분(지난해 23분 54초)인 반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횟수는 4.4회(지난해 4.6회)였고, 질의응답시간은 29분 23초(지난해 28분 21초)였다.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일 위원당 평균질의횟수는 2.5회(지난해 3.1회), 평균 질의응답시간은 18분 14초(지난해 19분 26초)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의 질의응답평균횟수는 2.7회로 19분이었고, 국민의힘 의원 역시 2.7회로 20분 46분초였다.

(5) 질의시간 총량 :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우세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응답시간 총량은 14개 상임위원회에서만 살펴보더라도 대략 373시간35분(지난해 449시간 55분)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응답시간 241시간 59분(지난해 311시간 21분)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1년도 교섭단체 감사위원의 질의총횟수 및 질의응답총시간 현황》

위원회	전체의원(위원장 포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 제외)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 제외)		
	위원	총질의횟수	총질의시간	위원	총질의횟수	총질의시간	위원	총질의횟수	총질의시간
법 제 사 법	18	421.0	56:57:02	10	253.0	34:34:10	6	137.0	18:42:07
정 무	24	526.0	61:52:41	14	308.0	35:45:34	7	160.0	19:36:41
기 획 재 정	25	538.0	62:31:56	13	249.0	28:49:57	8	214.0	24:57:20
교 육	16	336.0	41:06:53	9	226.0	27:28:35	4	81.0	9:47: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509.0	52:22:20	11	251.0	26:36:50	7	224.0	23:00:26
외 교 통 일	20	160.0	18:39:56	9	74.0	8:26:19	8	65.0	7:45:40

위원회	전체의원(위원장 포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 제외)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 제외)		
	위원	총질의횟수	총질의시간	위원	총질의횟수	총질의시간	위원	총질의횟수	총질의시간
국 방	17	255.0	30:56:31	9	147.0	17:50:45	6	92.0	12:02:36
행 정 안 전	22	584.0	59:34:21	12	294.0	30:02:25	8	221.0	22:54:18
문 화 체 육	16	289.0	36:21:44	8	154.0	18:31:04	6	98.0	12:5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412.0	47:37:47	11	235.0	27:35:05	6	152.0	17:52: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9	461.0	60:40:12	15	242.0	32:05:22	11	175.0	22:55:33
보 건 복 지	24	386.0	48:55:57	14	221.0	27:21:33	6	111.0	14:50:28
환 경 노 동	16	397.0	49:19:11	8	198.0	24:44:02	5	133.0	16:10:34
국 토 교 통	29	507.0	54:07:04	18	313.0	33:43:29	9	179.0	18:28:23
계	295	5781	681:03:35	161	3165	373:35:10	97	2042	241:59:02
주의	1.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실시한 경우만 산정하였음. 2. 국방위의 경우에는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제외된 수치임. 3. 전체위원 평균은 위원장과 비교섭 단체의원까지 포함한 평균수치임.								

(6) 교섭단체 상임위별 평균질의 응답시간 및 평균질의횟수 비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소속의원의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에 가장 많은 격차가 있었던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8회 질의를 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32회 질의를 하였다. 이것은 10월 21일 종합감사시에 나로호 발사참관으로 위원장 포함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빠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많이 한 것임을 나타낸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역시 평균 질의횟수가 저조한 데, 이는 상임위원회에 장관 겸임인 이인영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보다 평균질의횟수가 많아 차이가 나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으로 교육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균 25.1회 질의를 하였고, 국민의힘 의원은 20.3회 질의를 하였다. 2021. 9. 29.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찬민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하

였기 때문에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무소속의 광상도 의원 역시 불출석하여 비교섭단체의 평균질의횟수도 저조하였다.

그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균 19.3회 질의를 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16.3회였다.

《2021년도 교섭단체 감사위원의 평균질의횟수 및 평균질의응답시간 현황》

위원회	전체의원(위원장 포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 제외)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 제외)		
	위원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위원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위원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법 제 사 법	18	23.4	3:09:50	10	25.3	3:27:25	6	22.8	3:07:01
정 무	24	21.9	2:34:42	14	22.0	2:33:15	7	22.9	2:48:06
기 획 재 정	25	21.5	2:30:05	13	19.2	2:13:04	8	26.8	3:07:10
교 육	16	21.0	2:34:11	9	25.1	3:03:11	4	20.3	2:26:5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25.5	2:37:07	11	22.8	2:25:10	7	32.0	3:17:12
외 교 통 일	20	8.0	0:56:00	9	8.2	0:56:15	8	8.1	0:58:12
국 방	17	15.0	1:49:12	9	16.3	1:58:58	6	15.3	2:00:26
행 정 안 전	22	23.4	2:22:58	12	21.0	2:08:45	8	24.6	2:32:42
문 화 체 육	16	18.1	2:16:21	8	19.3	2:18:53	6	16.3	2:09: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21.7	2:30:25	11	21.4	2:30:28	6	25.3	2:58:4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9	16	2:05:31	15	16.1	2:08:21	11	15.9	2:05:03
보 건 복 지	24	16.1	2:02:20	14	15.8	1:57:15	6	18.5	2:28:25
환 경 노 동	16	24.8	3:04:57	8	24.8	3:05:30	5	26.6	3:14:07
국 토 교 통	29	17.5	1:51:58	18	17.4	1:52:25	9	19.9	2:03:09
계	295	19.6	2:18:58	161	19.6	2:19:55	97	21.1	2:31:10
주의	1.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실시한 경우만 산정하였음. 2. 국방위의 경우에는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제외된 수치임. 3. 전체위원 평균은 위원장과 비교섭 단체의원까지 포함한 평균수치임.								

《참고 2020년도 감사위원의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 현황》

위원회	전체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위원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위원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위원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법 제 사 법	17(18)	24.4	2:59:22	10(11)	22.9	2:50:02	6	26.2	3:12:42
정 무	23(24)	27.57	3:04:17	13(14)	25.54	2:51:59	8	29.63	3:16:12
기 획 재 정	25(26)	21.8	2:36:46	14(15)	20.9	2:29:15	9	22.8	2:48:50
교 육	15(16)	27.1	2:56:50	8(9)	27.0	2:52:09	6	27.3	3:02: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9(20)	29.2	2:50:54	11(12)	24.9	2:26:36	7	35.6	3:25:37
외 교 통 일	20(21)	21.3	2:30:35	10(11)	18.8	2:14:07	7	25.9	3:01:49
국 방	16(17)	21.9	2:40:56	9(10)	19.8	2:23:26	6	26.8	3:19:16
행 정 안 전	21(22)	26.0	2:39:15	12(13)	24.5	2:30:51	8	27.4	2:48:38

위원회	전체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위원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위원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위원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문화체육	14(16)	23.9	2:40:29	7(8)	22.1	2:30:29	6	28.2	3:03: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8(19)	26.7	3:07:09	10(11)	23.0	2:41:16	8	31.4	3:39: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8(30)	19.3	2:20:04	16(18)	18.1	2:11:45	10	21.1	2:31:33
보건복지	23(24)	18.7	2:12:05	14(15)	18.2	2:09:24	7	19.9	2:20:55
환경노동	14(16)	32.2	3:59:05	8(9)	32.9	4:07:13	5	30.4	3:35:14
국토교통	29(30)	20.0	2:01:54	17(18)	18.5	1:53:33	10	22.1	2:13:41
계	282 (299)	24.3	2:45:41	159 (174)	22.7	2:35:09	103	26.7	3:01:22
주의	1. 전체의원과 민주당의 숫자는 위원장과 전일정 국감불참의원수를 뺀 위원수로 이번 통계를 한 의원이며, 위원수의 ()안은 정원임 2. 법사위는 10월 23일 오후 군사법원 국정감사를 제외한 수치임								

3.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과 상임위 국감 요약

지난해(2020) 국감에서는 여러 위원회에서 국감 끝 날까지 라인·오퍼머 스사태가 크게 이슈화되었다.

올해(2021)국정감사에서는 10월 1일 손팻말 시위부터 10월 26일 국회운영 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 국정감사까지 **대장동 게이트 관련 내용**이 크게 이슈화되었다.

(1)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 대장동과 고발사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0월 1일부터 20일간 78개 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매일매일 국정감사 상황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주었다. 법사위 핵심쟁점은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게이트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주심 대법관의 부절적인 행보가 논란이 되었다.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는 자와 수차례 만나는 등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각각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으로 1명의 대법관이 재판결과를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 검찰총장 장모 대응문건 작성 의혹 사건,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내부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문제 지적, 대장동 개발 의혹,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감사위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하여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 필요성, 감사원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직무감사 등에 대하여 여러 지적을 하였다.

전국 고등·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재판이 신속하게 처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법관의 권위적인 재판 진행(고압적인 말투·태도, 면박 등), 공정성 저하(증거 신청 과도한 제한·예단 등), 하위 법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꼬집었다.

같은 날 13개 고등·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정환 지검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권고 수준으로 최종 의사 결정권은 검찰에게 있다”며 “검찰총장이 백 전 장관에 대해 수사지휘를 내린 만큼 이에 맞춰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고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기소 여부 시점에 대해서는 “지휘에 맞춰 처리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관 탄핵심판 사건이 이슈가 되었고, 사건처리 지연, 장기미제사건 등으로 침해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지연보상법 제정, 국회에 대한 미제사건 보고 절차 마련 등 사건처리 신속화를 위한 적극적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처음 실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김학의 불법출금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수사 중인데 김만배씨가 4차례 정도 당시 권 대법관실에 출입했다” 며 “김씨와 권 전 대법관이 친분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경로로 확인되는데 (권 전 대법관이) 성남의뜰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김씨가) 화천대유 관계자인 것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고검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진 것 등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등이 쟁점이었고, 열기도 뜨거웠다.

(2)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 대장동 사건 vs 도이치 증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기관, 권익위 등에 대해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국민의 관심사인 대장동 관련 증인은 여야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이 여야의 쟁점이었다.

성남시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질의를 집중했고,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가 많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담긴 가계부채 대책을 비롯해 빅테크(Big Tech) 규제 방안, 암호화폐 업권법 논의 등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화천대유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등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금융당국 국감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주목받았다. 여야 모두 1,800조 원을 넘어서며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대책의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가계대출 한파를 초래한 금융당국의 총량규제에 대해선 반론이 쏟아졌다. 여야는 금융당국이 10월 중순에 발표할 가계부채관리 대책에 실수요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한 자금 흐름 등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에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과 SK증권 등에 대한 검사도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도 받았다.

떡튀 논란이 일었던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의 수용률 상향과 은행 간 편차 축소,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하향 조치, 광주은행 채용 비리 후속 조치 점검 등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권익위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인 출신 대표의 김영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촉구가 있었다.

(3)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 가상자산 과세,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공과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첫날부터 대장동 손팻말 논란으로 파행하다가 오후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기획재정위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매일 매일 하루치 국감내용을 국민들에게 정리·공개하였다.

기획재정부 1일차 국감에서는 국가재정 규모 및 국가채무와 관련하여 이

번 정부 기간 동안 약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하여 2022년 예산안 기준 1,000조원이 넘는 규모로 증가한 국가채무의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불용예산·여유자금 관리 강화 및 예산의 제로베이스 편성 방안의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와 ‘세수추계 정확성’에 대한 집중 점검, 가상자산 과세여건의 미흡 등을 고려한 과세유예 필요성 및 과세체계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큰 폭의 세수추계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등 세수추계 정확성 문제 개선 필요, 세법 개정안의 조세지출 효과가 대기업 및 수도권 등 특정대상에 집중될 우려, 부동산 관련 세제의 지나친 복잡성 문제 등 개선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철저한 세무조사 및 자금추적 필요성,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제도 도입 재검토 필요성, 「국세기본법」상 관련 정보 공개 가능성에 대한 지적 및 질타가 있었다.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통계청이 공표 전 청와대에 사전 제공한 통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청 통계의 신뢰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세관 직원이 지인들에게 암호화폐(코인) 채굴업체 투자를 알선하고 약 7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디지털화폐 발행 문제가 거론했다. 총재는 “내년 중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한국은행의 정책수행에 미칠 영향을 비롯한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해 CBDC 도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 : 대학역량평가와 학력격차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는 7차례의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와 교육부 소관기관 그리고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였다. 첫날부터 파행이 이루어져서 오후에 국감이 진행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교육회복 촉진 관련 현장소통 강화, AI교육 진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 기획 과정 내실화, 노동인권교육, 고교학점제 도입보완, 탈북학생 대안학교 운영 지원, 학교 신설 관련 중앙투자심사의 제도개선, 대학 평가제도의 근본적 개선, 대학별 특별장학금 집행 현황 및 등록금 반환,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등 감사, 대학 연구윤리 강화 방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개편과 전문대학·국립대학 지원 방안,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 가천대 이재명 지사 논문 검증, 진주교대 종합감사 실시 요구, 홍익대 특정감사 요구, 강원대 한국어 강사 등의 처우 개선, 예술대학 교육 활성화 지원 방향 및 추진, 대학의 임의협약체 관리, 특성화고 관련 대책, 여수 특성화고 학생 사망사고 문제, 공자학원에 대한 대응방안.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불시점검의 실효성 문제, 장애대학생 지원사업 연계방안,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교체 예산확보 방안과 조리종사원 산재 신청 관련 대책,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 및 학생부 기재 제도개선, 기숙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교육부의 교육전문직 선발 등에 대한 정책점검과 제안이 있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초중등 분야는 고교학점제, 과밀학급 해소, 교육회복지원, 학력격차 및 기초학력 보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립, 초중고교원격수업, 초등돌봄교실, 미인가 대안학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2022 교육과정 개정 등이 쟁점이 되었고, 2학기 전면등교와 학교방역 실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등 코로나 현안도 작년 이어 집중 논의되어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교육격차 심화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교육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조국 교수의 딸 조민 관련된 질의도 나왔으며, 윤석열 전검찰총장의 부인

논문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동북아 역사재단 등 국정감사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시정, 사학 연금재단 재정, 교원처벌문제 등이 주로 질의 되었다.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고, 윤석열 전 대검찰청장 부인의 고등학교 교사 이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전패해 소송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제기되었다. 학부모 반대에 부딪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코로나19속 학력격차 해소 방안 등도 조명되었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에 대한 교육감협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지난 6월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도와달라는 쪽지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타도 있었다 12일 2일차 지방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현장학습도중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과 대책이 많이 조명되었다.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이원욱) : 플랫폼, 탈원전, 방송공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0월 21일 감사 1반이 누리호발사 관련 현장시찰을 실시하였고,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BS 등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영상 국감으로 이루어졌다.

구글 갑질 방지법 등 주로 플랫폼 기업관련 증인신문이 많이 보도되었다. 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부처별 연계를 위한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정보통신 분야 규제·진흥 기능의 통합, 민간중심 공공클라우드 구축,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데이터월제 도입, 성과가 부실한 5G 및 6G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 한국지능정보원의 불법적인 직원 사찰과 과

기정통부의 미흡한 대응, 줄기세포 기초연구 역량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 과학기술분야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부실한 평가 및 사후 관리, 보이스피싱 범죄를 야기하는 부실한 선불폰 가입절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스피밍 발신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한 이용정지 필요 문제, 집배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과적 해소 대책, 대구과학관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및 채용비리, 인지공학을 이용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완화 문제, 기술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전략화 방안, 5G 품질개선 및 불법보조금 근절과 합리적 요금제 도입, 5G 기지국 설치를 통한 통신서비스 확대와 28GHz 기지국 확대 및 단말기 출시 대책 등의 지적이 있었다.

방송통신분야에서는 독과점적 대형 플랫폼과 중소 사업자의 상생 방안,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방송통신위의 언론사 평가 기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대책,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쿠팡의 자급제품 판매,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는 카카오의 위치정보 활용, 국내외 대형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공유 방안, 연계 편성 등 과도한 방송 상업화의 문제, 플랫폼 뉴스 편성에 있어 지역언론사에 대한 배려 필요, SNS상의 마약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 차단 필요, 포털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 방안, 대형 포털의 미디어랩 지분 보유 문제, 팩트체크사업 주체의 편향성, 상품 추천 알고리즘 검증 시 중소 상공인 참여 방안 등이 제기 되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미흡한 처벌, 한국수력원자력의 위험업무 외주화, 원자력 규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편,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한 관리 필요,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해양 감시 강화 필요성,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에 따른 지역경제의 피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발전 확대 등의 정책제안이 있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월성 원전

부지의 방사성 물질 유출 조사와 관련된 여야 의원과 피감기관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질의하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했다. 월성 원전 1호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문제 삼는 주장도 나왔고,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조사와 관련해 한수원이 현장 검증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 재개,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KBS 국정감사에서는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와 여권 편파보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 KBS는 기존 2500원이었던 수신료를 52%나 인상해 38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해 국민의 공분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조차도 양승동 사장의 임기 만료 시기이고 여권이 안 좋은 시기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6)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 : 종전선언 논란과 남북교류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국외출장으로 외교부 소관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외교분야 국감은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외교부 본부 감사(한차례 추가 감사)와 10월 6일 주중·주일대사관과의 화상 국감, 10월 7일부터 약 열흘간 총 2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현지 국감이 실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에서도 재외공관 현지 국감을 2년 만에 재개해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통일분야는 10월 18일과 10월 21일에 걸쳐 통일부의 대북 통일 정책의 난맥상을 점검하고, 통일부가 추진했던 업무 전반에 평가를 하였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남북대화 재개와 또 남북 교류·인도 협력 그리고 북한 인권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통일부 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점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6일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외교통일위의 주일한국대사관 국감에서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과 관련, “한일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강 대사는 “우리 정부는 신내각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종전선언의 의미를 적극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없는 종전선언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7)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 :국감무산, 군인공제회 투자실패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첫날 국정감사 무산 등 중간중간 여러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많은 위원회였다.

북한의 국정감사 도중(10월 19일) 신형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등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엄중한 상황에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대장동 게이트 관련 유탄으로 매번 파행을 지속하기도 하였으며, 여야당의 대선후보 선거로 인해서 감사위원의 국정감사장 출석도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저조하였다.

국방위의 국정감사는 종합감사 및 국회에서 실시하던 감사 외에는 대부분 현지에서 하였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제한이 있었다.

현지에서 한 10월 6일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무산됐던 국방위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원인철 합참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감시·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 6명이 불참했다. 개인 일정, 당사정 등의 이유로 국방위 위원 6명은 2년 만의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불참한 의원은 국민의힘 3명과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었다. 2작사 국감 시각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대선경선 최종 대진표가 발표되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석이 많았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드론공격 대비 태세 미흡과 장비 노후화 문제 등을 일제히 지적했다. 북한과 테러단체 등에 의한 드론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제2작전사령부의 드론대비 태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우리측에 미납해온 사업비 분담금 문제가 다음 달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야당은 7,041억원에 이르는 미납액을 두고 ‘버티기’로 일관해온 인도네시아 당국과 우리 정부의 저자세 협상 태도를 지적했다.

군인공제회 국정감사는 오전 한때 손팻말 관련하여 파행을 빚기도 하는 등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8)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 대장동 게이트와 공정선거관리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월 1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6일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관 경찰청, 공공기관 등 총 33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해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해외 국정감사 실시 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최다일수의 국정감사를 실시하였고 별도 일자를 잡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가장 늦은 날까지 종합국감을 실시했다.

하이라이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감한 경기도 국정감사였고, 하루 중

일 대장동사건 관련 질문이 이어졌고, 조폭 연루 의혹제기와 관련해 소란스러웠다. 또한 서울시 국정감사 역시 대장동 사건에 파문혀 서울시정에 대한 감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피감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10월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감사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고 증인채택에 있어서 여야간의 입장차로 난항을 겪었다.

특히, 경기도 국정감사와 서울시 국정감사는 대장동 게이트 의혹과 관련하여 여야간의 정쟁이 있었으며, 김용관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후보와 조폭연루설 관련 질의에 대해 여당은 김용관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 의혹을 5개월간 내사(입건 전 조사)만 진행했다며, 이 기간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피의자로 한 명도 입건하지 않았다는 수사지연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화천대유 의혹에는 여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돼 이목이 집중됐지만 수사 전환 후에도 경찰의 소환조사 등이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이 이달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잇달아 진행하자 경찰이 그제서야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고문을 맡는 과정에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제도의 허점을 집중 추궁했다(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화천대유가 취업 심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걸림돌 없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 서범수 의원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빠져나간다. 정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만 법에 걸렸지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자꾸 빠져나간다” 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때 심리에 관여했다. 그는 이 지사의 전원합의체 사건에 참여해 무죄 의견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특히 화천대유의 최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선고가 이뤄지기 전 5차례 권 전 대법관이 있는 곳을 방문해 대장동 인허권자인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찾아 사실상 '재판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선거부정 의혹과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우편투표에 질의가 집중됐다.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 : 플랫폼, 코로나19와 문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일곱차례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견희 컬렉션 국립현대미술관 현장시찰, 국가대표 선수촌의 주요시설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충북 및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진천·이천 국가대표 선수촌 현장시찰, 문화재 발굴 현장을 위한 경주 월성 문화재 발굴 현장시찰, 내년에 개최가 예정된 울산 전국체전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울산 전국체전 준비기획단 시찰 그리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성 주변 정비현황 점검을 위한 언양읍성 현장시찰 등 4회에 걸쳐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현장시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국감 후에는 이견희 컬렉션 관람을 하였다가 언론으로부터 특혜 관람과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관광업계에 대한 실질적 손실보상 방안 마련,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IP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문제 또한 BTS의 유엔총회 동행 관련 문화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의 필요성,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예술·체육요원 제도 도입 문제, 한복산업 진흥·지원 및 정부기관의 정부광고법 위반 실태조사 필요성 등 질의와 정책제언이 있었다. 또한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립의 시급성도 제기했다.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체육회 관련 정치와 체육의 분리 필요성 문제,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개선 문제, 청소년과 노인 등 국민 체력 증진 정책 강화 문제 또한 양궁센터 및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적극적 지원, 또한 학생선수들에 대한 골프장 사용료 인하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의 불법채용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삼포공장 이전 문제, 사찰의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 관련 문화재청 행정 처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문화체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대북 지원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배현진 의원이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의향서 관련 질의를 하였고, 김승수 의원은 북한작가의 그림을 전시한 광주비엔나레의 문제점을 질타하였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향해 이해충돌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2017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자, 당시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에 속했던 곽 의원이 문화재청에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구하며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었다.

증인신문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업 헬스업 등의 피해 상태를 조명하였다. 참고인으로 선 김동훈 웹툰작가노동조합위원장은 “1000만원의 수익이 나면 거대 플랫폼이 30~50%를 떼어간다. 30%라고 가정했을 때 남은 700만원은 메인작가와 제작사가 다시 나누는데, 메인 작가는 글작가, 보조작가와 또 나뉘야 해서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저작권에 대해서도 작가들이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날 '건강

한 웹툰 창작 생태계를 위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이들은 플랫폼이 콘텐츠 생태계를 키우고 있는 시점에서, ‘생존’을 위해 수수료 부과는 부득이하다고 항변했다.

실제 ‘편의성’을 내세워 일상에 자리 잡은 플랫폼을 무작정 내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주요 수익모델인 플랫폼 기업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의 심석희-최민정의 고의 충돌 의혹과 학교 폭력 논란이후 해외 진출을 추진한 여자배구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의 논란 등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다.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 쌀값과 해양쓰레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0월 20일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에 대한 상황대응을 하면서 해양수산분야와 농림축산식품분야로 나뉘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정감사 진행이 처음에는 조금 난항을 하였으나 대체로 순조로웠으나, 홍문표 의원의 ‘여당 의원 철없다’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국정감사 내용을 정리하여 보도자료 형식으로 알렸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는 오전에 파행을 하다가 오후에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쌀수급 균형문제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이 생겨 농어촌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였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해상 풍력·수산공익직불제·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수산업·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여야위원들은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재활용을 강화하고,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 등에 대해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청취를 강화하며, 어업인·인근주민 등이 만족할 수 있으면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 공급 의무 비율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농촌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야 할 농촌진흥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농촌진흥청의 성과 미흡, 연구 부실 등에 대해 질타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불법 농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도 농촌진흥청이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현상으로 밭농업기계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한 상황인데 관련 성과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농진청의 직장 내 갑질, 폭행 문제를 비롯해 내부평가 허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산림·임업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태양광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지, 산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국내 탄소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산림 탄소 흡수량이 감소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기상이변 등으로 증가하는 산사태, 산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와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해운업계 공동행위 과징금 관련 문제 해결, 어촌 고령화 및 어업인구 감소에 따른 수산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등을 촉구하였다.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학영): 에너지전환과 상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쟁점이었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 내지 골목상권의 상생협력방안이 핵심사안이었다. 그 외 한전의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월 5일부터 실시된 산업부 및 소관 기관 감사에서 뿌리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증가,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해외 자원개발의 문제점 및 자원안보의 중요성, 수출기업에 대한 중장기 수출 금융 지원 및 해외 물류센터 등 물류 지원 확대, 스마트그린산단의 사업 활성화 및 로봇 관련 연구개발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요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정책 대안도 제기되었다.

10월 7일과 14일 실시된 중기부 및 특허청과 소관 기관 감사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상생협력 방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책 마련,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맞춰 중기부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대책 강구,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책 마련, 정책자금의 사후 관리 강화 등 정책 집행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도 제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늘었다는 취지로 압박에 나섰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연료비 연동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탄소중립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외에 미국의 반도체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 대응 주문, 박기영

산업부 2차관(에너지차관)의 금품·향응 수수 의혹 제기 등도 도마에 올랐다.

반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권명호 의원은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2020년 130조4,700억원에서 2025년 164조4,797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자체 전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탄소중립,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에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산업부의 업무 현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앞서 여야는 국감 시작 전에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국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 논란의 조성은씨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7천만원,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1억원 등 연체이자까지 2억4350만원의 빚이 있는데 875만원만 추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질의하자 장관은 “답변하기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감에서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 문제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비판하고 있고, 여당은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인상이라고 하였다. 또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재정 상황에 대한 질책도 잇따랐고, 6월 취임한 정승일 한전 사장을 비롯해 올해 새로 취임한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낙하산·보은인사'에 대해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쟁점이 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채희봉 사장을 바지사장으로 실무를 맡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3인방이 관여한 사건”이라며 “(대장동 사건의) 실질적인 주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바지사장으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내세운 것과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12)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위드 코로나와 백신 부작용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4개 본 상임위원회 중 가장 늦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와 그를 위한 공공의료 체계 정립 등이 많이 등장했다.

복지에 있어서는 연금 개혁 문제 등 개혁아젠다와, 아동학대 문제, 탈시설의 문제, 식품 건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바이오 산업 진흥문제 등이 집중 질의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감은 피감기관장이 10월 5일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다는 국민의힘의 항의로 초반에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 내용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10월 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보상·지원을 촉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과 객관적·독립적 심사기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고강도 방역조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연계한 재택치료 시스템의 준비, 접종완료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백신패스 도입 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코로나 치료제 구매를 위한 적정예산의 확보와 국내 백신개발 역량 강화를 대책 마련 등도 주문되었다.

허중식 민주당 의원은 '위드 코로나'에 따른 일상회복 시점을 질문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말이면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땀 수 있다" 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순화하고, 지킬 수 있도록, 현실 가능한 쪽으로 하겠다" 고도 했다.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백신 접종 후의 부작용·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보상·지원을 촉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방역수칙 준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10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 대비 실익이 적다는 우려, 여성 하혈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코로나19 경구형 치료제 신속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00제약의 말라리아치료제 '피라맥스'를 처방받거나 임의로 복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전환이 쟁점이 됐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내년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시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시된다" 면서 "다만 연구 검토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대응시스템 보완 및 개선 촉구와 입양인 친가족 찾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익성과 수익성에 관한 다수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투자의 일관된 기준 마련과 적용 강화, 석탄, 대량살상무기, 주류·도박 등 최악주, 강제동원·반인권·제재대상 기업·국가 등에 대한 투자 배제 기준 마련을 통한 책임투자 강화, 해외 투자 증대와 이를 위한 역량 제고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13)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 광상도와 탄소중립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10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루 현장시찰을 하였으며, 첫날 환경부 국정감사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하였다.

감사기간 동안 환경부와 기상청을 포함해 50개 환경 관련 기관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육류 포장재 흡수패드의 미세플라스틱 문제, 환경부의 탄소흡수량 추산 근거 미흡,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환경 전문성 결여, 가스히트펌프 배출허용기준 재조정 필요, 재활용 가능 가짜 쓰레기의 감축 대책 필요,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문제, 기상장비의 통합·활용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25개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 악화,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유지 성과 미흡, 산재 발생현황 통계의 부정확성 문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개선 필요,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방문 저조 및 재해예방 성과 미흡,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된 환경부 국정 감사에서 한정에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국가온

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는 작업도 마무리하겠다” 고 밝혔다.

환경부 국감에서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실효성 여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사업장 내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관련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다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시작과 함께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본격적인 질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화천대유 '퇴직금' 의혹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조사 요구로 후끈 달아올랐다. 증인대에 선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직원의 극단적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광주 붕괴참사 등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정부의 대책이 무위에 그쳤기에 노동자가 허망하게 숨지는 일이 반복된다는 뼈아픈 질타였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는 앞서 광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 중 43억7천만원이 산재 위로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가 최근 5년간 관할 노동청에 산재를 보고한 기록은 없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의 아마추어 일자리 정책으로 ‘참참참’이다. 국민들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참담하다는 뜻”이라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9월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하셨다. 국민이 보기에 문 대통령은 지금 별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비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에서의 낙하산 인사와 갑질 논란도 제기되었다.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예보 정확도 문제와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낮은 활용률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감 당일마저 강수 예보가 빗나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당 500억~600억원대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5~6년마다 버려지는 사실도 지적을 받았다. 예보 용어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감장에서는 인사 문제도 거론됐다. 최근 취임한 안영인 기상산업기술원장이 최종 후보 3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도 더불어민주당 캠프 관계자로부

터 높은 점수를 받아 발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현승) 대장동 게이트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현승)는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첫날 파행을 하였고, 대장동게이트로 인해 여야간 입장차가 컸다. 위원장은 “우리 국정감사장은 국토위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곳이지 재판을 하는 법정이 아니며 또 피감기관은 증인입니다. 가끔 고압적으로 증인을 압박지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역지사지해서 여당은 야당의 입장에서, 야당은 여당의 입장에서 상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이야기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번 상임위 회의 때에는 한층 더 성숙하게 치우침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가 크게 이슈화되었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공급 확대, 세대별 당침률과 특별공급 유형별 미달률 등을 고려한 주택청약제도 개선, 공공주택 분양 전환 시 입주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 산정,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항공업계 지원 강화, 전기차 보급 확대를 고려하여 안전문제 발생 전기차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택시·배달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플랫폼기업과 기존 업계와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가 있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도시철도 운영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국토 분야에서는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개선, 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조치, 입찰 및 낙찰제도 개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의 적극적인 수행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및 대안 제시가 있었고,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및 도로 안전관리 강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택배 배송기사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질의 및 대안 제시가 있었다.

국정감사 단골메뉴인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의 경영 부실 문제, 부당 인사행위, 전관특혜 및 이해충돌 등에 대한 다수의 지적이 있었다.

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여야 간 고성도 오가기도 했다.

10월 20일 1반과 2반으로 나눠서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와 서울시 국정감사는 여야간의 열전으로 파행 등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공히 ‘대장동 관련’ 내용이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의 ‘대장동 사업’ 관련 판넬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 여당의원들의 항의를 하여 정회를 하기도 하였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문제 관련 고성도 오가기도 하였다.

(15)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 : 대장동 근조리본과 무료변론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0월 26일 대통령 비서실 등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일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첫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간의 근조리본과 마스크 문구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다가 파행을 하였으며, 오후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대장동, 고발사주 관련 질의가 많았다. 자정을 넘겨서 국정감사를 하였으며, 여당은 질의를 하지 않고 야당만 질의시간을 제한해 질의를 하기도 하였다.

10월 27일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에게 대한 국가인권위원장의 무료변론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국회사무처 등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직전에 있었던 검찰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국회사무처의 대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국회방송 관

런 문제가 SBS 뉴스에 보도되는 등 큰 파장을 야기하기도 했다.

28명 의원이 결석없이 출석하였으며, 공히 정책국감을 표방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짚기도 하였다.

(16)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 :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0월 22일 여성가족부 등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주장이 되었고, 국고보조금 횡령·사기의혹 관련한 윤모 의원 사건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보호 등에 대한 조명이 있었다.

부성원칙을 개정하는 민법개정안과 관련된 질의,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심화 대책,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하여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아동돌봄 서비스 자기 부담액 축소 및 장애아동 등 맞춤형 아이돌봄을 위한 지원대책, 청소년쉼터 확대 등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4. 마구잡이 피감기관 선정,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국감 여전

제21대 국회 2차년도에는 무려 745개(지난해 705개, 2019년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전문성 있는 질의보다는 나열식 질의가 주종을 이루었다. 상대방 의원에게 대한 질의도중 끼어들기 등의 구태가 답습되기도 하였다.

특히, 여야당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듯이 상대당 의원이 자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나서서 장내소란 등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 2021년 10월 8일 국토교통위원회의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위원) 지금 바로 이 대장동 개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 도시개발법입니다. (「아니, 그게 도로공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소?」 하는 위원 있음) 바로 그 당시에 도시개발법을 처음 기안하고 입안을 하셔서 제정안을 만드셨던 당시 기억이 있는 김진숙 사장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도시개발법 혹시 제정 취지, 어떤 목적으로 제정을 했는지…… (「아니, 도로공사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좀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천 위원) 도로공사 업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송석준 위원) 아니, 조용천 위원님! 동료 간사로서 예의를 지킵시다!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공사 국정감사 2021.10.8.>

5.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인해 의사진행 발언만 풍성 여전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는 10월 1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물론, 10월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문제로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다. 여야당은 대장동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했다. 10월 12일 국민권익위 등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여러 차례 야당 간사에게 요청했지만, 아직도 확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김희곤 의원은 “애초 증인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 건 대장동 게이트 관련 증인 40여 명을 (여당이) 한 명도 안 받아준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로 확정될 경우 지사직을 사퇴하고 행안위·국토위 증인을 회피할 수 있으니 오늘 권익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현승)의 10월 12일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

반증인 채택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후보가 설계한 사업”이라며 “지주들에게 손해를 엄청 입히고, 지인들에게 돈벼락 안긴 설계자가 이재명 후보”라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 후보가 반드시 국감 출석해야 한다”며 “이 후보 국감장 나와서 혹시나 허위나 위증할 경우 대비해 그게 두렵고 피하고 싶겠지만, 온 국민 관심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후보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교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성민 의원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설만 가지고 게이트라고 표현 하느냐”며 “상대 당 정식 후보가 된 사람에게 게이트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과하라”고 맞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이재명 지사가 국감 돌파하겠다는 의지 내비쳐서 이대로 사퇴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일반 증인으로 요청하는 걸로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평택 현덕, 포천, 구리처럼 제2대장동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실상을 아는 경기도 이용철 행정1부지사가 국감 직전에 교체됐고, 대장동 사태에 대한 고의적인 증언 회피로 보일 수 있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여야 협의를 통해 이용철 부지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LH 사장, 신영수 국회의원과 신영수 의원의 동생 신모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의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동 중인 원전 13기의 부실시공 등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연구원의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

해 유감을 표명했다. 양의원영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KINS 연구원이 월성원전 SFV 차수벽 시공 과정에서 차수막이 파괴돼 방사성물질이 유출됐다고 문제제기를 했다”며 “월성원전은 그간 매년 700~14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는데 안전성마저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증인 채택을 끝까지 반대해 결국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됐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양의원영 의원 말씀에 그냥 넘어가면 국민의 오해가 있을 것 같다”며 “원전을 괴물인 양 왜곡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오히려 야당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과정을 드러내 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증인 신청했는데 여당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며 “오는 산업부 종합감사에서 반드시 최 전 원장을 증인으로 내세우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여당은 대장동 게이트가 우리 야당이 연루된 게이트라고 주장해 왔다”라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밝히면 될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경기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원천 봉쇄한 여당은 과연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며 증인 채택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은 이번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며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포함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6일 경기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으로 51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건도 채택은 되지 않았다.

“여당은 협의를 피하며 대장동 관련 증인·참고인은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 등은 제외하고 정쟁을 최소화해 지역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에 대해 책

입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인·참고인만이라도 불러서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서자고 요청했으나, 여당은 이 같은 제안마저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요청한 약 100건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경기도는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며 “여기에 증인 채택까지 거부해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의 중요한 권한인 국정감사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증인채택 불발 사례

- 행안위 : 대장동 관련 증인 (대장동 사태)
- 기재위 : 백복인 KT&G 사장(장점마을 참사와 관련)
- 산업위 :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 정무위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 정무위 : 이석우 업비트 대표(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
- 환노위 : 자동차환경협회(배출가스저감장치 관련)
- 정무위 : 최기원 행복나눔 이사장(화천대유 소유 관련)
- 정무위 : 이재명, 유동규, 이화영, 이한성, 정진상, 곽상도, 곽병채 등(대장동 관련)
- 산업위 : 최재형 전 감사원장(월성원전 관련)
- 기재위 : 면세점 대표(비정규직 근로자 대량해고 관련)
- 기재위 : 콜린 클락 씨브웨이코리아 대표 (씨브웨이 본사의 갑질 관련)

■ 증인과 참고인 인사들의 불출석(사유서 제출) 사례

- 정무위 :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국정감사 불출석(해외 체류)
- 환경노동위 : 이태권 바로고 대표의 고용노동부 국감 불출석(다리 수술)
- 문화체육관광위 : 전두환 씨 아들인 전재국 성강문화재단 이사장 (신규 서점 오픈 등 생업 이유)
- 정무위 :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일신상의 이유)
- 산업위 : 최정우 포스코 회장(김학동 포스코 사장으로 증인 변경신청)

6. 국회사무처의 코로나 방역 가이드라인은 옳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시작 전에 위원장의 고정적인 멘트가 있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감사장 입장 인원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증

인은 필수 인원만 감사장에 현장 출석하고 있습니다. 감사장 입장이 제한되는 기관증인은 화상으로 출석하여 선서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화상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에 현장 출석하지 않은 기관증인으로부터 화상 답변이 아니라 직접 답변을 듣기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 질의 전에 사전 신청을 하시면 위원님 질의 시에 해당 증인을 감사장에 입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은 국정감사 시작 전 “다음은 국정감사에 앞서 방역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발언하실 때를 포함하여 마스크를 항상 바르게 착용하시는 등 국정감사 종료시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석해 계신 여러분들도 감사장 내부 인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관계 직원들의 안내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코로나 예방 방역수칙에 따라 국정감사장 내 참석 인원을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감사 실시 전에 매일 방역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잘 협조해 주셨듯이 국정감사 종료시까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 주시고,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국정감사가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실시될 수 있게 각 당 위원님들과 잘 협의하셔서 국정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월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위원장은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 간 협의에 따라 오후 주질의 종료 후에 일반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에서 녹화 중계된다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아침 회의장 방역을 실시한 바 있고, 회의장 입장 시에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감장에 출석한 피감기관 증인들은 총

열여덟 분에 달합니다. 따라서 강화된 국회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해당 질의 위원님과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좌진 그리고 간사 위원 보좌진 등 총 4명의 보좌진을 제외한 나머지 보좌진들께서는 소회의실 등 회의장 밖에서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감장 밖으로 일시 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2년 동안 국민의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이러한 방역지침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7. 제21대 국회 3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반드시 준수하고 개선돼야

(1)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 ‘붕어빵’ 국감이 되지않게 해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질의한 의원이 그 내용이 시정되었는지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실명제’를 도입하고, 복합적 이슈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시정조치팀’ 가동, 국회내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시정조치 사항 이행을 ‘실효적으로 평가하는 조직 구성’ 등 국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국감지적사항을 묵살해온 국정감사의 적폐를 근절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지난해 자신이 지적한 내용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

주호영 위원) 장관님, 지난번 감사 시에 국정과제 추진상황 그다음에 화웨이 보안, 슈퍼컴 개발, 기초과학 R&D 경쟁력 강화 이 부분에 관해서 시간 제약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히 알려 달라고 했는데 이 보고서를 받아 봤거든요. 이 보고서 장관님께서 직접 보고 준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저는 검토만 했습니다만.

주호영 위원) 직접 다 검토한 겁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초고 보고받았습니다. 먼저 드리고 나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호영 위원) 부실하기 짝이 없고 이런 보고서를 왜 만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국정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좀 성실하게 최선을, 최대한 진지하게 자세히 답변해야지 무슨 귀찮

은 민원인 그냥 형식적으로 답변하고 떼 내듯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대통령 공약과 관련 연계된 국정과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면 모두 정상 추진 중이고 심지어 세부 실천과제 27개도 모두 임기 내 완료라고 이렇게 근거 없는 자화자찬을 해 놨어. 여기는 과기부 아닙니까, 과기부? 과기부는 정확한 수치, 정확한 데이터가 생명인데 이렇게 부실하게 하면 나머지 연구나 내용 자체도 다 부정되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국감만 때우고 넘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구나 장관께서는 임명 과정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정권교체기에 그냥 얼렁뚱땅 때우고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보고서의 미비한 부분은 다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성의를 가지고 했다 안 했다는 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데이터댐은 데이터 구축이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게 이 국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됐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도 코어인력 개발보다 하드코딩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PBS를 비판하는 목소리조차 이런 것도 다 잘 되고 있다는 거야. 사이버보안 강화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 데이터 활용 기반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이것도 전부 자화자찬이야.**

특히 5G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 위원 할 것 없이 질타를 했는데 대통령이 LTE보다 20배 빠른 서비스라고 과대광고하고 했던 건데 이것 **다 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들이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2021.10.20.>

시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반복된 ‘붕어빵’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은 피감기관이 국정감사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 종합감사에서 도종환 위원장이 하였고, 올해에는 이채익 위원장이 하였으나, 5분 내로 시간을 제한하였다.

교육위원회에서 조해진 의원이 종합국감 시작 전에 유은혜 장관의 후속 조치 현황보고를 들었다.

조해진 위원장 :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의 교육부 국정감사 2021.10.21.>

이제 국회가 제도적으로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실명제(질의한 의원표기) 및 위원회별로 평가팀을 만들고, 국정감사 전에 시정요구처리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매년 중복질의 되는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감사 중 질타를 통해 허위 시정처리보고를 발본색원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시정조치에 대해 질의한 의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보니, 정부의 시정조치 보고에 대해 질의한 의원도 관심이 없고,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더욱 관심이 없고, 상임위에는 담당하는 사람도 없다보니, 시정조치 허위보고가 무책임하게 다음해에 다시 질의되는 현상이 없어지질 않고 있어 국감이 부정부패 면죄부가 되는 오·남용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2)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국회 전 30일), 못 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라고 하고 있는바, ‘정기 집회일 이전에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칙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면 국회부터 원칙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지키지 못할 조항이면 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1년 10월 27일 국회사무처 등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국정감사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법을 언급하면서 개정후 한번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대책을 질의하였고,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유럽의회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충실하게 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 국정감사 부분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럽의회를 가 보니까 유럽의회는 정확히 1년 전에 다음 해의 상임위를 열 날, 본회의를 열 날, 의원들이 지역활동을 하는 날, 정당활동을 하는 날을 해서 달력이 나옵니다, 정확히. 그러면 딱 그거 100% 정확히 지켜지는 겁니다. 이때는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는 지역활동으로 지역에 가 있고 이때는 상임위를 열어서 브뤼셀에 가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조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한번 정도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 국정감사 2021.10.27.>

(3)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일본대사관과 중국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화상국정감사를 실시해 아주 효율적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잘 보장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는 코로나 19 팬데믹 중에 해외 현지 국감을 실시했다. 다음에라도 이렇게 해외현지 국정감사가 아닌 화상 국정감사를 통해 지금껏 문제가 되고 있는 비용 낭비, 국감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4)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서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주무장관에게 해명요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거부, 부실, 지연이 여전한 것은 문제이다.

매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에 거부나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하기 전까지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입법자인 국회의원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헌법 제61조 제1항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들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요구를 제대로 관철하지 않은 것과 증인·참고인을 제대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황보승희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KBS가 국정감사의 자료 제출을 하면서 다른 기관과는 다르게 자료에 업무담당자의 연락처 또 업무담당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 10년여 전에 KBS 간부가 국회가 KBS 담당 부서로 직접전화하지 못하게 하라 지시한 이후에 이와 같은 잘못된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받고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문의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대외협력관을 통해서 연락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즉각적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BS에 역시 자료 제출 문제로 제가 사장님께 사과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자료를 계속 요청을 하니 직원의 답변이 내부 회의가 끝난 뒤에 쉬는 시간에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감사자료 청구한 것이 쉬는 시간에 놀기 삼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사장님은 이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등 국정감사 2021.10.12.>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이 문제된 사례(예시)》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위원명	문제제기 발언
10월5일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배준영	국민적 관심사이자 최대 현안인 화천대유 종속기업, 관계기업 등 현재까지 국세 신고 납부내역,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부속 명세서 등 자료와 세무조사 실시 등을 요청했으나 아무것도 제출한 것이 없습니다.
10 20	기획재정	종합감사	배준영	대장동 관련 자료 제출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 채택 등 야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야당 간사께서 그렇게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욱이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유감입니다.
10월 21일	기획재정	종합감사	우원식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한국투자공사의 투자내역 미제출 관행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10월 14일	법제사법	서울고검 등	윤한홍	아니, 그 자료를 이름을 가려서라도 출국금지가 몇 명이 되었고 언제 됐는지 그거라도 주세요.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정보보호 때문에 못 준다면 이름을 가려서라도 언제 누가, 누구까지는 빼도 돼요, 언제 몇 명이 되었다 그것은 제출해 주세요.
10월 20일	정 무	국무총리비서실 등 종합감사	강민국	본 위원이 지난 10월 12일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만배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종감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밝혀진 것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검토해 달라는 건데 이조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지금 홈페이지에 나오는 법안 내용하고 신고 절차 A4용지 두 장짜리 달랑 준다는 것은 정말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든지, 아니면 국민권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위원명	문제제기 발언
				익위원회가 스스로, 지금 김만배 보호위원회도 아니고 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19일	국토교통	경기도	박성민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자료가 사실은 꼭 제출해야 되는 자료임에도 전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꼭 필요한 자료는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광역교통부담금 현황 및 납부내역 그다음에 감면액 현황 그 자료를 감사 오전 중에, 이걸 충분히 뚫 수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10일	국토교통	경기도	이종배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시장 결재직인이 찍혔거나 결재·서명된 서류를 요구했는데 일부만 제출하고 또 주주협약서 요구에 대해서는 표지하고 14페이지, 15페이지만 발체해서 제출하는 등 이런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10월6일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이종성	9월 6일 날 백신접종 사망자 인과성 검토 현황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게 지금 한 달 넘게 안 오고 있어요. 지자체 역학조사 결과 그리고 신속대응팀이 인과관계 검토한 결과 그리고 또 질병청의 이상반응 피해조사반의 결과를 각각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10월 1일	정 무	국무총리비서실 등	윤두현	증인도 문제지만 자료도 문제입니다. 자료도 안 옵니다. 하나은행, 메리츠증권, 산업은행 각각 만든 컨소시엄 제안서를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안 오거든요. 위원장께서 좀 엄하게 이야기해서 꼭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26일	국회운영	대통령비서실 등	성일종	10월 5일을 전후로 해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서 9월 26일부터인가요 이렇게 해서 장차관들, 청장 포함해서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5)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 겉 핥기’ 식 국감 종식

코로나 19위기 속에서 745개(2020년 705개, 2019년 788개) 기관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제21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이지만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정감사의 위세를 보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과도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53개 대상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0월 18일 대전 국정감사에서는 53개 피감기관 중 18개 피감기관의 장만 질의를 받았고, 35개 기관의 장은 질의를 받지 못했다.

제21대 국회 3차년도에서는 피감기관 선정과정에서부터 신중하고, 저인망식 피감기관 선정보다는 문제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과 선택의 관점에서 피감기관을 선정해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 2021년도 국정감사위원 활동평가

1.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모범의원)

(1) 선정근거와 연혁

지난 제15대 국회 이전에는 정당의 핵심당직자, 국회부의장, 대선후보자 등은 정치활동, 당직 등을 병자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기능, 재정통제기능 등 국회 4대 기능을 집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정감사에 대부분 불참(不參)하거나 매우 소홀하였으나,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구체적인 의정감시와 강직·엄정한 의정평가의 신인도가 높아져 영향력(총선 후보의 공천기준 등)이 커지면서 이 같은 관행이 점차 감소하였다. 제17대 국회이후로는 국감을 등한시하는 관행이 불식되도록, 매년 국회직, 주요당직, 다선의원 등을 대상으로, 모범의원상을 신설하고, 매년 선정·시상한 바, 교섭단체 정당 당직자의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져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의 놀라운 효과가 발휘되었다.

제18대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국회 부의장을 비롯하여 교섭단체 당직자, 다선의원들의 국감참여도가 여타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서, 특히 국감 NGO모니터단에서는 국정감사의 맥을 짚어 정책국감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원들을 국감우수의원과 다름없는 예우로써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해 오고 있다. 다만, 제20대 국회 1차년도(2016년)에는 국감 보이콧 등 F학점 국정감사로 선정을 하지 않았으나 2, 3, 4차년도에는 선정하였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다선 중진 의원 중 정쟁적 요소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조명을 하고, 모범적인 성실성을 보여 준 **변재일** 5선 의원(과방위), 현장감있는 정책국감을 전개했다고 평가된 **서병수** 의원(기획재정위), 국정감사 기간 중 상임위원장으로 매 피감기관마다 정책질의를 하여 국정감사 활성화에 기여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매 국정감사마다 정책질의를 하여 타의모범이 되었던 행정안전위 **이명수** 의원을 선정하여 국리민복(國利民福)의 표본으로 삼고자 하였다.

(2) 선정결과와 선정사유를 약술함 (가나다 순)

(가) 변재일 의원(5선,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변재일(卞在日) 의원(5선)은 정보통신부차관 등을 역임한 관록과 다년간 과학기술분야 의원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후한 정책질의와 함께, 정부여당의 중진이면서도 과학기술정책의 난맥상을 찾아 개선을 촉구하면서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전문성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를 점검하는 국감을 전개하였으며, 심야 국정감사까지 모범적으로 자리지키면서 열정적으로 모범적인 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과방위 위원장으로부터도 후배 국회의원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 과학기술 R&D 분야에서는 금액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논의됐던 것들이 진행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드론산업, LED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진입 규제에 난맥상도 점검했으며, 인재양성관련 반도체 분야 등 첨단분야의 고급 학위 인력 부족현상과 교육기관의 인재초빙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제도와 관련해 연구원과 교수까지 장애인 고용제도의 산술적인 평균만 드러내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R&D 역량을 확대하기에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데이터고속도로와 관련해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정책을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과기정통부가 5G투자 독려를 위해 쓴 예산이 2114억 원이라고 하는데 비효율적인 정책을 계속 추진할 할 것인지 점검했다.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사업자들에게 기금을 내도록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했으며, 데이터센터 관련 입법개선을 주문했다.

인공지능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CPU관련 기술개발 정부의 관심제고를 촉구했다.

디지털산업의 일자리창출 관련 통계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느 기관에서 무슨 근거를 갖고 무슨 수식을 갖고 계산했느냐를 정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통신사업자의 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정책질의를 하면서 원인 분석을 하였다.

플로팅 광고 조사와 관련해서 난맥상을 점검하면서 소규모의 6200만 원 예산이지만 문제제기를 했고,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과 관련해서 시행령 등의 정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를 점검하면서 제대로 할 것을 촉구했다.

구글코리아 대표에게는 ‘한국 국내법을 존중하겠다’고 하면 인앱 결제 강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구글코리아의 홈페이지에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코리아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의 접속장애와 관련하여 페이스북 서비스라는 것이 무료 서비스라, 무료 서비스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고지를 이용자한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자력분야관련해서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예산 확보 등을 점검하면서 생활방사선관련 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개정안 처리를 주문했다.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이든 최종처분시설이든 계획을 점검하면서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관련 고준위 폐기물의 중간

저장시설이나 최종처분시설에 대한 확실한 계획과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AI바우처사업, NIPA의 클라우드바우처사업 등의 성과를 점검했다. 많은 돈을 사용하는 바우처 사업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느냐에 대한 성과평가가 없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핵심인 데이터댐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질타했고, 아울러서 IoT 보안 인증 의무화 관련 행정입법의 개선을 주문했다.

한국방송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수신료 인상 논란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KBS 사우회에 대해서 5년간 한 5억 원 정도 지원을 KBS 수신료로 지원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다른 공공기관의 퇴직자 친목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KBS가 비난을 하면서 KBS가 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공영방송이 되고 공정한 보도를 한다면 스스로가 좀 정확하기를 주문했으며, KBS 주시청시간대 공익광고 편성 비율, 공익광고 편성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디지털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서 아마존 웹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다며, 국산 클라우드를 안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점검했다.

방송문화진흥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는 MBC가 방송광고 협찬고지 위반이 지상파 3사 중에서 가장 많으면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지상파플랫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주문했고, 과기부 산하연구기관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교원 지위법 관련 정책점검을 하였다.

종합국감에서는 양자정보통신 기술 등 양자기술·산업육성에 대한 정책 질의를 하였으며, 유선인터넷 속도저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 서병수 의원(5선,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서병수(徐秉洙) 의원(5선, 부산진구갑)은 제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역임을 비롯해 다년간 기획재정위원으로서의 활동과 부산민선시장 등 지방행정의 관록으로 재정분야의 실정에 대해 날카로운 정책질의와 점검을 하였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서 부동산정책의 난맥상을 파헤치고, 재정개혁에 대한 청사진 제시 등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전개했다는 평가이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난맥상을 점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563만 6000명에 달했던 자영업자가 2019년 12월 달에 560만 3000명으로 3만 3000명이 감소를 했고, 코로나 이후에 11만 4000명이 추가로 감소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 출범 때보다 14만 7000명이 감소했다며, 자영업 피해 문제와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문제를 제기했다. 물가·집값 고공행진과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고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부총리의 입장을 점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물가관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2일차에서는 선거 전략이 된 부동산세제, 논란이 된 종부세 개정에 대해 점검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청무피사’ (청약은 무슨? 피(P, 프리미엄) 주고사), ‘손피’ (아파트 분양권을 팔 때 세금 같은 부대 비용 다 제외하고 내 손에 떨어지는 피(P) 등 현장의 현실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한 전문적 조명을 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재정개혁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또 개혁에 대한 의지를 많이 읽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평원(관세평가분류원) 세종시 청사의 신축 그리고 특공 문제에 대해 조명하면서 감시정의 운영 관련 조명을 하였다.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정권의 입맛에 의해 가지고 변질된 통계 자료문제를 점검했고, 문재인 정권은 인구가 감소한 첫 번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지난 4년간 합계 출산율이 1.17명에서 0.84명으로 28%가 감소했다면서, 통계 추계를 예측해 내느냐 하는 데에 성패가 갈려 있다면서, 인구 추계 등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조했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화와 관련해서 세밀한 정책집행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와 보유세를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것의 난맥상을 점검하면서 부동산 증여가 늘어나고 부동산 세수가 증가하는데 또 다른 증여세 폭탄의 관행을 국세청이 이렇게 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조폐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는 불리온 메달 사건 관련해서 대손충당금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한국투자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의 운영과 관련해서 5년 이상의 전문인력들이 퇴직자의 한 30%가 넘는다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해서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인원이 급증한 증원이유를 점검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정책조명을 하면서, 물가 인상이라든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시중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그 어떤 수단으로써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점검했다.

종합감사에서는 원유가 문제에 조명하면서 국내유가에 대한 전망과 대책을 주문했으며, 유류가 인하관련 난맥상을 점검했고,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알뜰주유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점검했다.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고용보험관련 국세청이 전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

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진척상황을 점검하기도 하였고, 사회보험 징수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것을 주문했다.

대외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외환보유액과 통화스왑 관련해서 외환보유액이 대외적인 어떤 급격한 경제적 리스크가 왔을 때도 버틸만한 적절한 수준인지 점검했다.

공공시설물 건설사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쟁입찰에 낙찰선정 기준을 두고 있다면서 공공시설 건설사업 공공조달 입찰 기준 중에 종합심사낙찰제의 경우 당초 국가계약법상의 경쟁입찰의 취지와는 달리 비경쟁적인 요소로 사업자가 수주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안제시형 낙찰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진척방안을 영상으로 기재부 국고국장에게 질의하기도 하는 등 세밀한 분야까지 정책점검을 하였다.

(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서울 중랑구갑)

서영교(徐瑛敎)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서울 중랑구갑)은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국정감사기간동안 거의 빠짐없이 매 피감기관마다 구두질의를 통해 안전, 인권문제에 대해 조명하고, 정책의 난맥상을 점검하였으며, 위원장의 국정감사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제공해 위원장의 활동사항을 신속하게 알리는 열린 국정감사활동으로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1호 담당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정책조명을 하면서 과거의 발생한 사건이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명확한 진실규명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책의 난맥상을 점검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대책을 주문했고, 행안부 산하기관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근절할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악성민원과 관련해 민원공무원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악성 민원대책을 주문했으며, 영국에서는 고질적인 민원인에 대해서는 특정한 시간대에만 전화상담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악성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사법절차를 통해 민원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등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재난안전본부에 대해서는 결혼식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점검했으며,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고,상공인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수사본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조명을 하였으며, 경찰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를 주문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는 산하공단 등 기관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문하면서,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 정부와 관련해서 OECD국가 중 1위이고, 유엔 전자정부 발전 부분도 종합 2위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거론하면서 청년 공공데이터 인턴일자리 마련과 관련해서 인턴들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화기념사업회와 관련해서는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게 제대로 보살펴 달라고 주문했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관련해 기관 평가가 5년동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사이트를 보니 보도자료도 하나밖에 없다면서 확인을 거친 질문을 하였다.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자유와 민주주의,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이념적 중심이 잡힌 활동을 당부했고,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나 새마을중앙회에 대해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에 가장 선봉에 서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념적인 편향이 없이 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오작동률이 높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촉구했다.

화재의 원인과 관련해 원인미상 화재가 연 3200여 건으로 3년 동안 1만 1000건 정도라며, 화재조사법에 따라 원인추적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면서, 보험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애매함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원인을 확실하게 분석해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관 구하라법 통과와 관련해 트라우마 자살 소방관에 연금보상이 나오는데, 한 살 때 버리고 간 엄마가 그 반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책을 주문하고, 소방공무원 자살율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특유 암발생과 관련해서 혈액암 등의 공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는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선관위의 의혹해소를 위한 설명을 주문하였고, 투표용지 발급기와 관련해서 겹쳐서 나온 경우가 인천 연수구에서 1건 나왔다는 선관위 사무총장의 답변에 대해 1장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해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선거운동행위와 SNS의 상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질의를 했다. 재외국민 투표용지 분실률과 관련해 분실률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제일 많은 재외국민이 있는 곳에 대해 우편 관련제도가 안정적인지 점검했고, 현재 4만 명당 투표함 1개 소인데 그것을 3만 명당으로 하면 현재 몇 개의 재외공관 투표소가 몇 개로 늘어나게 되는지 점검했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공상추정제도를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인천시, 충남 국정감사에서는 화재시 양방향 자동차와 관련해서 점검을 하면서 ‘인천을 아시아 백신의 허브로 만들겠다’ 라는 박남춘 시장의 말을

인용해 세계 백신의 허브 또 아시아 백신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위한 기업 유치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지방부채 등 지방재정 건전화와 균형발전 등에 대해 정책조명을 하였다.

충남은 어른들의 자살률이 다른 시도 보다 평균 10명 정도는 더 많고, OECD 국가에 비해서는 30명은 더 많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대구광역시와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균형발전 관련해 메가시티 등 관련한 회의에 대해 점검했다.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예방을 주문하면서 섬의 아름다움 보전을 강조했다. 광양 산사태와 관련해 산사태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원룸에 있는데 재산세 내라고 하는 사례를 들면서 제대로 살피는 행정을 하라고 주문했고, 층간소음 대책도 좀 세밀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 문제, 귀농·귀촌·귀어 관련 정책을 점검했고, 섬진흥법안과 관련해서 공동노력을 강조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사태 박영수 특별검사와 관련해서 팩트확인을 하면서 개발이익의 공공환수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그리고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에 대해 조명하였다.

경기남부 및 북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화천대유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할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 백신 예약 인증 확인, 행안부 지원금 신청 안내, 국가건강검진 진단결과 보기 등 보이싱 피싱, 스미싱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함께 범죄수사와 피해대책을 주문했다.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는 시민단체 지원문제와 관련해 정책조명을 하면서, 공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예산이 다시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일 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공급 위주로 정책이 변경되고 있다면서 공공개

발 진행상황을 점검했고, 공공기여금의 소외받는 지역에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해 정책제안을 하였다.

서울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고층아파트 생활소음 문제를 지적하면서 오토바이 폭주족 소음, 불법개조를 예로 들면서 이에 대한 단속문제를 제기 하기도 하였다.

종합감사에서는 해외 경찰과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회, 민변과 같이 토론회를 했다며, 민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현장은 어떤가에 대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제시했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확보 문제, 지원금 사칭 보이스 피싱 문제 등에 대한 정책 조명을 하였다.

(라) 이명수 의원(4선,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이명수(李明洙)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4선 중진이면서도 날카로운 정책질의와 품격있는 국정감사로 피감기관을 압도하면서, 대장동 사건으로 여야간 날카로운 대립 중에서도 생활밀착형 국정감사를 전개하는데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질보다 양을 우선시하는 무분별한 공공부문 인력 증원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국민 수가 55만 명 증가할 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부문 인력은 약 19만 명이나 증가했다며 주민센터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실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무분별한 지급경쟁 우려하며, 행안부의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설정 논란으로, 지자체 지역간·주민간 갈등을 부추기고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지만, 지자체의 재량이라며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문제를 질타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조직개편

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대부분 신중검토·종합적 검토 필요 등 반대의사만 하면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행정안전부의 소극적·수동적 대응을 지적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오징어 게임’ 속 실종자 수보다 더 많은 실종자 미발견 건수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며, 실종 성인(가출인) 미발견 건수가 5년간 총 3,073건이나 되어 실종아동 미발견보다 10.8배 수준이라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사기범죄 발생 5년간 총 933,510건으로 피해금액 약 120.8조원으로 회수금액은 5.3%수준이라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주문했다.

사이버 성폭력은 발생 건수 2017년 대비 83%, 사이버 금융범죄는 233% 증가하고 있다며,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촉구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수법”이 급증하고 있어 날로 대담해지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시대 배달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륜차 교통위반 부과금액이 총 94.5억원 이라면서, 2018년 대비 27.2%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화재 사망자 수 10배 차이가 스프링클러 설치 효과에 있다면서 공동주택의 64.1%가 스프링클러가 없으며, 잇달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무늬만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신분 전환이 2년차지만 개선과제가 산더미처럼 많다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주문하고, 소방학교 교육훈련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방용품 내용연수 기준의 확대와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는 공직사회 내 MZ세대가 40%를 넘어서고 있다며, 세대 간 소통 한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급성을 강조했다.

공직사회에서의 여성진급 유리천장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직무 전

문성 갖춘 이공계 여성 고위공무원 ‘0명’ 인 곳이 31곳(63.3%)에 달하다고 현실진단을 하였다.

코로나19 재택 근무와 관련해서 중앙행정기관 소속 원격근무 공무원은 34.8% 그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택근무 지침 관련 전시행정성을 질타했다.

2022년 선거 해를 맞이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핑계로 유권자에게 합법적으로 돈 뿌리는 판도라 상자 열리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한 달 평균 66개인 우후죽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여론 왜곡을 우려했다.

이명수 의원은 충남 쪽파 농가의 피해 심각하다며, 정확한 조사와 정부 지원 시급하다는 것도 강조하면서 지방자치 단체 국감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를 하였다.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및 신공항 건립 관련 시도민 의견 수렴을 강조했고, 그린시티 대구로의 도약 위해서 전기 택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대구 청년벤처밸리 재활성화하여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 등 긍정 효과 모색을 주문했다.

전라북도에서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사실상 2022년 준비완료 목표로 철저한 준비 속 성공적 행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전국 최대 곡창지대 전북 벼 도열병 등 병충해 관련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고리원전 해체에 따른 지역경제 악영향 최소화 위해 대책 마련해야 주문하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국민인지도가 32.3%에 불과하다면서, 범국가적 유치 대응위해 대국민홍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주차장 방불케 하는 동부산권 교통체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아울러 사보임한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통일부가 경

문협 관련 탈북국군포로 위자료 문제 해결 및 꿈수 운영에 대한 감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탈주민 22%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통일부 업무 전반의 성과가 미흡하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위해 통일부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해야 하고,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해결과제가 산적하다며, 남북통신선 재개에 의미부여 할 것이 아니라 논의과제에 중점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

(1) 평가기준 및 방법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평가에서는

1) 먼저 내용적 측면으로 ① 우리 모니터단이 예년과 같이 사용해 온 국민의 의혹사항에 대하여 규명이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주요현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의가 많이 나왔는지 여부, ③ 피감기관의 예산낭비사태가 잘 지적되었는지 여부, ④ 피감기관의 불법·부당한 업무방법에 대한 시정조치요구가 많았는지 여부, ⑤ 잘못된 정책과 그 집행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는지 여부, ⑥ 잘못된 법과 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많았는지 여부, ⑦ 국정을 감사함에 있어서 국가적·사회적 이슈를 탁월하게 발굴·지적하는 의원들이 많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2) 절차적 측면으로 ① 철저한 국감공개원칙의 준수 ② 전략적 투쟁의 장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감사를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과행을 예방·조기 수습한 점) ③ 의원 전원이 출석하였는지 여부(국무위원 등 제외), ④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⑤ 무리 없이 국정감사 시간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⑥ 불필요한 정회 등이 많았는지 여부(감점) ⑦ 국정감사 일수가 적정했는지, 시찰 등이

적었는지 여부와,

3)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위원장의 리더십도 국정감사 성패의 주요 관건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2) 선정결과 및 사유, 활동을 약술함 (국회법 제37조에 의한 순)

(가) 박광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3선)

박광은(朴洸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은 3선의 집권 여당 중진 위원장으로서 강한 리더십으로 2021년도 국정감사를 정책감사가 되도록 이끌었고, 대장동 사태와 고발사주 등 이번 국감의 여야 쟁점이슈로 인한 여야 간의 날카로운 대립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법사위에 비해 크게 원만한 진행으로 감사다운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평가이다. 특히 위원장은 감사위원의 질문시간을 최대한 보장하여 다양한 정책질의와 현안 이슈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정감사 종료시에는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당일 국감내용을 국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질의가 많았다. 대법관이 퇴임 직후에 부동산 개발회사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사법농단과 관련된 판사가 퇴임 후 아무런 제약 없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신뢰회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헌법에 따라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법원의 재판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법관 증원 등 인적·물적 자원을 확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저조하고, 불명확한 사유로 배제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 검찰총장 장모 대응문건 작성 의혹 사건,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내부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하여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 필요성, 감사원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직무감사 등에 대하여 여러 지적을 하였다.

대전고법 등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전 대법관 연루 의혹에 대한 우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정위원의 선정이 필요하다는 점,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 판결문 공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법원 영장 발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법관의 재판 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법관의 고압적인 언행, 예단에 의한 합의 종용, 이유 없는 소송지연, 변론기회 미제공 사례 등도 지적되었다.

대전고검 등 지역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법관으로서의 검사 역할 강조와 함께 엘시티 사건, 이스타 사건, 월성 원전 관련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헌법재판소 등 국정감사에서는 사건처리 지연, 장기미제사건 등으로 침해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지연 보상법 제정, 국회에 대한 미제사건 보고 절차 마련 등 사건처리 신속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처음으로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김학의 불법출금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공수처에 대한 외부감시 및 견제

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과천청사에 입주해 있고 외부 파견인력을 운영함에 따라 보안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울고검 등 재경지역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촉구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하여서는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휴대전화 미확보 및 부실해명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판결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권 확립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당부도 있었다.

서울고법 등 16개 재경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관 및 재판운영에 관한 사항, 법원의 보호적·후견적 조치 및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현안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적 등과 함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주요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되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동 사건 및 부실수사 의혹이 있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경우 상당수의 검찰 전관들이 연루되어 있으므로 제식구 감싸기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사과정에서 부실 압수수색, 수사지연 우려, 수사팀 구성의 적정성, 경찰과의 수사협조 미비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성남시 고문변호사 전력이 있는 검찰총장의 회피 의사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입법 총괄 및 법령정비 업무와 관련하여

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부처간 이견조정 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전시한 준수를 위하여 법제처가 선제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고,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한 사전검토 활성화 및 사후검토에 대한 부처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과 비공개 행정규칙 중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한 질책과 함께 사건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여 군 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고, 매뉴얼을 마련하여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 내 성폭력 사건은 별도의 전문조직에서 수사·재판을 담당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종합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재판거래 의혹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 검사 전관 연루 사건 수사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더욱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하여서는 수사과정에서의 부실·지연수사에 대한 의견, 수사 우선순위에 있어 사업구조의 설계과정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견, 현직 의원 아들 퇴직금 등 자금의 흐름 파악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나) 윤재옥 정무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3선)

윤재옥(尹在玉) 정무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경찰출신 전문가답게 리더십으로 국정감사활동을 주도하면서 국정감사 일정동안 원만히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소관부처의 ‘지난해 시정조치 내역을 일일이 집어 가면서 시정조치가 늦어진 이유’ 등을 조목조

목 지적하는 등 실효성있는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대장동 사건 등 여야간의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원만한 진행으로 정책감사를 구현했다는 평가이다.

정무위원회는 10월 1일부터 21일간 총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의 허실(虛實)을 점검하고, 금융 및 공정거래 등 금융분야와 비금융분야 제도개선에 노력하였다.

정무위원회는 피감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종합감사에서는 국회에서 진행하면서도 피감기관 증인을 세종시 영상회의실과 부산에 분산해 모여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등 배려도 아끼지 않아 호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소관 국정 전반에 걸쳐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 국무조정실의 국정 조율 미흡, 기후변화 대응, 청년 주거 및 취업 정책, 가상자산 과세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해운사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 논란, 머지포인트 사건 관련 피해구제, 하도급 기술유평행위 감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문제 등 문제 제기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윤 위원장은 직접 정책질의에 나서 공정거래위 비상임위원제도의 난맥상을 적절히 짚어 호평을 받기도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성과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보다 진지하게 고민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및 실수요자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 중도상환수수료 폐지·인하의 필요성, 가상자산의 상장 기준 및 절차 마련, 가상자산 관련 보이스피싱 예방 필요성, FIU의 의심거래 통

보 후 사후 역할 미흡, 실손보험금 환수액 과다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리 인하 실적 편차 및 보험모집 질서 문란에 대한 개선 방안,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회사의 부당행위 방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금감원의 역할과 필요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하여 금감원의 협조 필요성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및 88관광개발(주)에 대한 감사에서는 국민권익과 국가보훈 전반에 걸쳐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보완 방안 마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권익위 역할,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노력, 보훈대상자 등록 및 관리 철저, 인명사전 발간 사업 표절·대필 근절, 보훈병원 채용 비리 감사 필요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다크 웹,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 강화,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의 처리 기간 단축, 한국개인정보원 설립 및 청년 정책 관련 종합적 연구기관 필요, 수탁사업 과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지정수탁제 도입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의 폭발적 생산과 유통에 대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 경인사와 과기연의 융합 연구를 통해 국가사회 현안의 종합적 해결 방안 모색 역시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서 신용회복 채무조정 입법화 필요 또 맞춤형 채무 상담 등 채무조정 대응 방안 마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문제 및 대우조선해양 피해 하청업체 구제 방안 마련, P-CBO 및 보

증권계투자 제도 개선 필요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지원 및 안정을 위한 업무 전반에 걸쳐서 저소득층 및 저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 확대, 미회수 채권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노력 미흡,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실적 저조 및 간편송금 개선방안 마련, 전자투표 위탁계약 주주권 행사 실적 저조 및 전자주주총회 활성화 필요 등의 문제 제기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제시되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과 세종시 경인사 회의실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 국무분야 종합감사에서는 기후 변화 대응, 청년 주거 및 취업 정책, 온라인플랫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개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보완,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주요업무와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활발한 국정 조정·조율을 통한 정부 신뢰 회복, 공정한 경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사회 구현, 국가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훈,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보체제 구축 등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이 주문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과 부산 주택금융공사 회의실을 연결하여 비대면 화상으로 실시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 분야 감사에서 가계대출 총량관리 및 실수요자 피해방지 대책, 가상자산 상장기준 및 절차 마련, 금리인하 실적 편차 및 보험모집 질서문란 개선 방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코로나 인한 취약계층의 금융 보장 등 금융시장의 시급한 현안 해결은 물론 전자금융, 가상자산 등 금융의 디지털 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감으로써 국민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금융과 실물경제가 건전한 선순환 구조를 이

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다)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국민의힘, 3선)

박대출(朴大出)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은 3선의 의정경험과 포용적 리더십으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이끌면서 여야간의 정쟁적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진행으로 모범이 되었으며, 탄소중립 문제, 플랫폼 기업 갑질문제 등 국정감사 현안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하면서도, 대장동 사건 피켓팅 관련 파행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는 평가이다.

박 위원장은 “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301만 원인데,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7734만 원, 전세만 해도 6억 4345만 원에 이른다”며 “회사원이 월급으로 집을 사려면 통째로 꼬박 33년을 모아야 하고 전세라도 얻으려면 꼬박 18년을 모아야 가능한 실정이다.” 라면서 부동산 폭등 속에 소외되고 있는 노동자의 현실을 지적하기도 하고, 기상청 예보와 관련하여 예보의 정밀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여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관련 구체적 로드맵 부재 및 엄격한 배출권 할당 필요성, 청주·남해·천안 건강영향조사 결과의 주민 수용성 문제, 2020년 홍수피해 원인조사 연구용역 과정의 문제와 신속한 보상 필요성, 소각장 TMS 미설치 문제, 환경책임보험의 민간 운영과 지급 실적 저조, 담배꽂초 내 미세플라스틱 문제, 투명 페트병의 분리수거 후 선별 미흡,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양성 반응 후 관리 문제 등 정책조명이 있었다.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화천대유의 산재위로 금 지급에 관한 조사 필요성 문제가 제기되었고 판교 대장동 게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실제적 진실 파악을 위한 특검 요구가 있었다.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예방조치 강화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부

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치 필요, 네이버 등 IT업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측의 노조 해산 및 탈퇴 유도 행위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기상청 및 그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예보관 충원 및 전문성 강화 필요, 라디오존데 기술개발·고도화 및 국산화율 제고, 기상관측장비 관리체계 개선 및 기상정보의 체계적 관리 필요, 인공강우 기술개발 지원 확대, 기상청 이전에 대한 대비 부족, 기관 내부청렴도 개선 필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선임 과정의 부적절성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사망 관련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택배노조 교섭 관련 중노위 판정 및 교섭절차 개선 필요, 노동위원회 및 산재재심사 위원회의 사건 처리기간 단축 필요, 부당해고 구제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 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필요, 쿠팡의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성남 판교 대장동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확보 노력 필요,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의 반복적인 법률 위반 문제, 새만금호 수질개선 착시통계 개선 필요, 포스코 시안가스 누출에 대한 관리강화,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미흡, 골프장 환경오염 관리부실, 조류경보제 개선안의 부적절성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정책대안이 제시되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채용비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산재병원의 노후 의료장비 문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업무상 질병판정의 기준 및 처리기간 개선 필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 실효성 확보 문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책대안제시가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증간소음 기준

현실화 필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임명 부적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내부비리 혁신 필요, 한국수자원공사의 수해원인 조사용역 사전개입 의혹 및 경영평가 부실 문제, 국립생태원 외부조사 안전관리 강화, 국립공원 내 불법 벌목 문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관리부실 등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질의가 있었다.

환경부, 기상청 및 그 소속·산하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육류 포장재 흡수패드의 미세플라스틱 문제, 환경부의 탄소흡수량 추산 근거 미흡,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환경 전문성 결여, 가스히트펌프 배출허용기준 재조정 필요, 재활용 가능 가짜 쓰레기의 감축 대책 필요,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문제, 기상장비의 통합·활용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이 제시되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산하기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 악화,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유지 성과 미흡, 산재 발생현황 통계의 부정확성 문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개선 필요,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방문 저조 및 재해예방 성과 미흡,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필요성 등에 대해 정책질의가 많이 나왔다.

3.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명단 별첨함)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에 반영하고,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평가하는 기본원칙은 1) 국정감사 기간 및 그 직전직후의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2) 국정감사기간 중 2일 이상 결석

한 의원과 형식상 출석했으나, 사실상의 질의가 없었던 의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화성모니터링으로 세부적인 정량·정성평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였다.**

<앞의 2021년도 국정감사 모니터링 평가기준 및 방법 참조>

II. 2021년도 국정감사 진행상 특징

1. 코로나 19 국정감사로 인한 특징

(1) 현장출입 제한 / 별도 대기장소 마련

이번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장 발언의 특징으로 처음 국정감사를 안내할 때, “코로나 관련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장 내 참석 인원은 50인이내로 유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기관증인의 경우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기로 하였으므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사전에 행정실에 말씀 주시면 질의 순서에 맞춰서 기관증인을 입장 시켰다가 질의가 끝난 후 다시 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현지에서 한 국방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정감사장 외부에 별도의 화상 대기실을 만들어서 피감기관 기관증인들이 모니터로 보면서 답변대기를 하였다.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금융관련 해서는 부산에 화상 회의실을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진행하였고, 국무조정실 등 종합감사에서는 대전에 화상회의실을 만들어 감사를 진행했다.

(2) 국회에서 대부분 진행

매번 현지 국정감사를 주로 하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감사 일정 중 대법원과 대법원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실시하였다. 해외 국정감사를 하던 외교통일위원회 역시 주중국대사관과 주일본대사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하였다.

이외에도 정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이 전체 일정을 국회에서 진행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처음에는 지방 국정감사를 계획하였으나, 변경하여 서울과 경기와 부산, 전남감사를 제외한 지방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통합적으로 실시하였다.

2. 질의 시간 길어져 소리 없는 국감

100군데 국정감사장 조사결과 총 2,957회 마이크 중단,

의원당 매일 1.59회 소리없는 국감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위원장은 어김없이 질의시간 전에 질의시간을 정하고 질의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된다고 고지하였다.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질의 시간의 경우에 주질의에 이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등 질의 시간을 충분히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 한 차례당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곳 감사장의 마이크는 발언을 하시는 위원님께서 직접 스피커 버튼을 누른 후 말 씬을 해 주시면 됩니다. 타이머가 종료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석에서는 동시에 하나의 마이크만 작동되므로 발언 순서에 해당하는 위원님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2021.10.5.>

화상 화면에서는 의원의 질의 중에 “발언시간이 종료되어 위원석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100군데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시 감사위원 마이크 중단실태를 조사·분석해 본 결과,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

대출)가 하루 국정감사 일정에서 의원들이 질의시 시간을 미준수하여 마이크 중단된 횟수가 평균 2.38회로 가장 많았다.《상임위 소속위원수가 적어 피감기관 당 의원별 질의횟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임》

다음으로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가 2.19회였고,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평균 2.04회로 많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의 경우에는 0.78회로 가장 적었으며, 그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으로 평균 1회였다.

《조사된 2021년도 위원회별 마이크 중단횟수와 의원당 평균중단횟수》

위원회	조사된 국감일정	마이크중단 횟수	평균 마이크 중단횟수
국 회 운 영	2	76	1.41
법 제 사 법	8	136	1.00
정 무 위	8	326	1.84
기 획 재 정	7	310	2.04
교 육	6	139	1.8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7	253	1.99
외 교 통 일	5	105	1.12
국 방	8	188	1.84
행 정 안 전	7	201	1.45
문화체육관광	5	87	1.2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8	106	0.7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6	307	1.91
보 건 복 지	6	206	1.51
환 경 노 동	8	267	2.38
국 토 교 통	8	215	1.22
여 성 가 족	1	35	2.19

《2021년도 중앙부처 등 피감기관 국감(100곳)중 질의시간초과 마이크 중단현황》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감사장소	감사시간	출석위원수	마이크 중단횟수	의원당 질의시간 미준수 평균횟수
10월 1일	법 제 사 법	대법원	대법원	10:06:00	18	14	0.82
10월 1일	정 무	국무조정실	국회	11:52:00	23	35	1.59
10월 1일	교 육	교육부	국회	12:18:00	14	29	2.23
10월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9:55:00	20	47	2.47
10월 1일	외 교 통 일	외교부	국회	7:39:00	20	17	0.89
10월 1일	행 정 안 전	행정안전부	국회	11:06:00	21	32	1.60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12:14:00	15	26	1.86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감사장소	감사시간	출석위원수	마이크 중단횟수	의원당 질의시간 미준수 평균횟수
10월 5일	법 제 사 법	법무부	국회	12:21:00	18	15	0.88
10월 5일	정 무	공정거래위원회	국회	11:50:00	23	45	2.05
10월 5일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	정부세종2청사	9:47:00	23	43	1.95
10월 5일	교 육	국가평생교육원	국회	9:21:00	14	21	1.62
10월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13:50:00	20	48	2.53
10월 5일	행 정 안 전	경찰청	경찰청	9:54:00	21	29	1.45
10월 5일	문화체육관광	문화재청	정부세종청사	11:09:00	15	8	0.57
10월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5:56:00	18	20	1.18
10월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13:35:00	28	49	1.81
10월 5일	환 경 노 동	환경부	정부세종청사	11:27:00	15	38	2.71
10월 5일	국 토 교 통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11:55:00	28	21	0.78
10월 6일	정 무	금융위원회	국회	9:24:00	23	39	1.77
10월 6일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	국회	10:25:00	23	41	1.86
10월 6일	외 교 통 일	주중국대사관	국회	3:36:00	19	15	0.83
10월 6일	국 방	함동참모본부	함참	10:47:00	15	12	0.86
10월 6일	보 건 복 지	보건복지부	국회	12:19:00	24	42	1.83
10월 6일	환 경 노 동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11:32:00	15	40	2.86
10월 7일	법 제 사 법	감사원	국회	9:13:00	18	19	1.12
10월 7일	정 무	금융감독원	국회	9:28:00	23	45	2.05
10월 7일	교 육	서울특별시교육청	국회	10:29:00	14	32	2.46
10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	9:29:00	20	37	1.95
10월 7일	행 정 안 전	소방청	국회	9:20:00	20	20	1.05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	국립중앙박물관	국회	7:14:00	15	14	1.00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양수산부	국회	8:47:00	18	11	0.65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12:42:00	28	55	2.04
10월 7일	보 건 복 지	보건복지부	국회	10:04:00	24	38	1.65
10월 7일	국 토 교 통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회	12:05:00	28	39	1.44
10월 8일	기 획 재 정	국세청	국회	9:32:00	23	40	1.82
10월 8일	국 방	제2작전사령부	대구	2:45:00	11	9	0.90
10월 8일	행 정 안 전	인사혁신처	국회	8:56:00	20	36	1.89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촌진흥청	국회	6:56:00	18	14	0.82
10월 8일	보 건 복 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8:29:00	24	24	1.04
10월 8일	환 경 노 동	기상청	국회	6:47:00	15	26	1.86
10월 8일	국 토 교 통	한국도로공사	국회	9:52:00	28	35	1.30
10월 12일	법 제 사 법	헌법재판소	국회	12:41:00	18	4	0.24
10월 12일	정 무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9:33:00	23	39	1.77
10월 12일	기 획 재 정	관세청	국회	9:24:00	22	41	1.95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한국방송공사	국회	11:21:00	19	34	1.89
10월 12일	국 방	방위사업청	국회	8:51:00	14	31	2.38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	대한체육회	국회	8:21:00	16	6	0.40
10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림청	국회	7:34:00	18	8	0.47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한국전력공사	국회	12:01:00	27	58	2.23
10월 12일	환 경 노 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회	11:14:00	15	34	2.43
10월 12일	국 토 교 통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9:35:00	28	31	1.15
10월 13일	정 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회	9:42:00	23	36	1.64
10월 13일	기 획 재 정	한국수출입은행	국회	9:43:00	22	45	2.14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감사장소	감사시간	출석위원수	마이크 중단횟수	의원당 질의시간 미준수 평균횟수
10월 13일	국 방	육군본부	육군본부	7:59:00	13	13	1.08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양경찰청	국회	8:05:00	18	13	0.76
10월 13일	보 건 복 지	국민연금공단	국회	9:07:00	23	39	1.77
10월 13일	환 경 노 동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회	8:54:00	15	30	2.14
10월 14일	법 제 사 법	서울고등검찰청	국회	13:07:00	18	27	1.59
10월 14일	교 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회	9:23:00	14	16	1.23
10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문화진흥회	국회	9:49:00	19	23	1.28
10월 14일	국 방	공군작전사령부	공군본부 / 해군본부	7:49:00	13	26	2.17
10월 15일	법 제 사 법	서울고등법원	국회	8:02:00	18	13	0.76
10월 15일	국 방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국회	8:46:00	14	24	1.85
10월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회	8:52:00	18	15	0.88
10월 15일	보 건 복 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	9:38:00	23	27	1.23
10월 15일	환 경 노 동	근로복지공단	국회	8:12:00	15	29	2.07
10월 15일	국 토 교 통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7:22:00	28	21	0.78
10월 18일	법 제 사 법	대검찰청	대검찰청	12:11:00	18	23	1.35
10월 18일	외 교 통 일 회	통일부	국회	8:53:00	20	37	1.95
10월 18일	행 정 안 전	경기도	경기도 / 경기남부청	13:03:00	21	33	1.65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회	8:47:00	28	38	1.41
10월 19일	교 육	부산대학교	국회	10:14:00	13	18	1.50
10월 19일	국 방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2:33:00	13	23	1.92
10월 19일	행 정 안 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 시경	11:54:00	22	22	1.05
10월 20일	정 무	국무조정실	국회	12:13:00	24	45	1.96
10월 20일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	국회	10:23:00	23	50	2.27
10월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8:58:00	19	25	1.39
10월 20일	외 교 통 일	외교부	국회	2:02:00	19	4	0.22
10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8:25:00	18	13	0.76
10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12:54:00	28	60	2.22
10월 20일	보 건 복 지	보건복지부	국회	9:52:00	24	36	1.57
10월 20일	환 경 노 동	환경부	국회	11:12:00	15	39	2.79
10월 20일	국 토 교 통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청	8:12:00	13	22	1.83
10월 20일	국 토 교 통	경기도	경기도청	9:03:00	15	22	1.57
10월 21일	법 제 사 법	감사원 등 종합감사	국회	11:26:00	18	21	1.24
10월 21일	정 무	금융위원회	국회	9:12:00	23	42	1.91
10월 21일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	국회	9:29:00	23	50	2.27
10월 21일	교 육	교육부	국회	9:39:00	14	23	1.77
10월 2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	12:08:00	17	39	2.44
10월 21일	외 교 통 일	외교부	국회	9:43:00	20	32	1.68
10월 21일	국 방	국방부	국회	12:33:00	15	50	3.57
10월 21일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국회	9:24:00	15	33	2.36
10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양수산부	국회	8:34:00	17	12	0.75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국회	12:47:00	28	47	1.74
10월 21일	환 경 노 동	고용노동부	국회	9:13:00	15	31	2.21
10월 21일	국 토 교 통	국토교통부	국회	12:22:00	28	24	0.89
10월 22일	여 성 가 족	여성가족부	국회	8:08:00	17	35	2.19
10월 26일	국 회 운 영	대통령비서실	국회	14:42:00	28	39	1.44
10월 26일	행 정 안 전	행정안전부	국회	8:11:00	21	29	1.45

감사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감사장소	감사시간	출석위원수	마이크 중단횟수	의원당 질의시간 미준수 평균횟수
10월 27일	국 회 운 영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8:50:00	28	37	1.37
의원당 질의시간미준수 평균횟수 = 마이크 미작동 횟수/(출석의원수- 위원장)						2957	1.59

질의시간 때문에 여·야간의 많은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행정안전위원회는 첫 날부터 질의시간 관련해 의사진행발언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위원장대리 박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김민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호) 김민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다는데 짧게 한 1분 정도만……
 김민철 위원) 오늘은 국정감사장이고 피감기관들에 대해서 국정감사 하는 자리인데 최소한 여야 위원님들께서 서로 어느 발언을 하든 그 시간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발언한 부분을 가지고 여야가 그게 맞나 틀리니 이런 지적사항은 이 자리에서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재호)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 거기에 대해서 **1분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재호) **30초.**
 김도읍 위원) **1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재호) 30초만 했는데요.
 김도읍 위원) 알았습니다. **1분 넣고 30초만 할게요.** 김민철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데 이해식 위원이나 백혜련 위원이 똑같은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김민철 위원) 위원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하시라는 거예요.
 (박재호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도읍 위원)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식 위원이나 백혜련 위원이 똑같은 형태로 질의를 진행했고요. 조금 전의 상황을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 위원님께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재호 위원) 제가 이영 위원님도 기회 주고 똑같이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는 분이 양해를 하시고 하는데 그걸 또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또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김민철 위원) 상대 위원 이름만 거론 안 하고 하시면 괜찮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해식 위원이 할 때는 왜 가만히 계셨나요?
 위원장 서영교) 정리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질의시간 때문에 다툼) 2021.10.1.>

3. 2021년 국정감사의 행태적 특징

(1) 10개 이상 동시 수감기관, 부실국감

2021년도 감사에서는 위원회별 하루에 감사하는 피감기관수가 평균 5.7개(2020년도 5.5개)였다. 1개 피감기관(대상기관)에 대한 평균 국정감사 진행시간은 1시간 51분 44초였다(국회공보상 통계임, 식사·휴식시간 등 포함).

《2021년도 위원회별 하루당 대상기관 및 대상기관별 감사시간》

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	피감기관	감사일정	총감사시간	하루당 상기관수	피감기관당 감사시간
국 회 운 영	윤호중(민)	28	9	2	23:32:00	4.5	2:36:53
법 제 사 법	박강은(민)	18	78	10	107:10:00	7.8	1:22:26
정 무	윤재옥(국)	24	47	10	101:20:00	4.7	2:09:22
기 획 재 정	윤후덕(민)	25	29	9	92:37:00	3.2	3:11:37
교 육	조해진(국)	16	64	7	70:54:00	9.1	1:06:2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이원욱(민)	20	82	9	88:27:00	9.1	1:04:43
외 교 통 일	이광재(민)	20	31	12	65:01:00	2.6	2:05:50
국 방	민홍철(민)	17	67	10	62:03:00	6.7	0:55:34
행 정 안 전	서영교(민)	22	33	10	102:45:00	3.3	3:06:49
문화체육관광	이채익(국)	16	51	8	65:44:00	6.4	1:17: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김태흠(국)	19	36	10	78:31:00	3.6	2:10:5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학영(민)	29	58	8	91:03:00	7.3	1:34:11
보 건 복 지	김민석(민)	24	41	8	76:19:00	5.1	1:51:41
환 경 노 동	박대출(국)	16	75	10	86:56:00	7.5	1:09:33
국 토 교 통	이헌승(국)	29	33	9	89:37:00	3.7	2:42:56
여 성 가 족	송옥주(민)	17	6	1	8:08:00	6.0	1:21:20
정보위(위원장 김경협) 제외 통계임.					평균	5.7	1:51:44

하루 평균 피감기관 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하루 평균 9.1개였으며, 다음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7.8개, **환경노동위원회** 7.5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7.3개 순이었다.

하루 10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감사가 이루어진 횟수는 무려 24회(2020년 21회, 2019년도 30회)나 되어, ‘흠어져야 산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무색케 하였다. 10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감사 횟수를 살펴보면, **환경노동위원회**가 5일,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순이었다.

《2021년도 10개 이상 동시수감기관 국정감사 현황》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등기관	감사장소	감사개시	감사종료
10월 0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국회	14:04:00	23:59:00
10월 05일	교 육	국가평생교육원	12	국회	10:17:00	19:38:00
10월 07일	문화체육관광	국립중앙박물관	11	국회	10:09:00	17:23:00
10월 08일	법 제 사 법	대전고등법원	18	국회	10:15:00	19:03:00
10월 08일	법 제 사 법	대전고등검찰청	13	국회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등기관	감사장소	감사개시	감사종료
10월 08일	환 경 노 동	기상청	17	국회	10:08:00	16:55:00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한국전력공사	16	국회	10:04:00	22:05:00
10월 12일	환 경 노 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2	국회	10:06:00	21:20:00
10월 13일	정 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6	국회	10:06:00	19:48:00
10월 13일	국 방	육군본부	10	육군본부	10:02:00	18:01:00
10월 13일	환 경 노 동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	국회	10:04:00	18:58:00
10월 14일	법 제 사 법	서울고등검찰청	11	국회	10:07:00	23:14:00
10월 14일	교 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14	국회	10:04:00	19:27:00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	한국콘텐츠진흥원	13	국회	10:08:00	19:32:00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	국회	10:03:00	18:32:00
10월 15일	법 제 사 법	서울고등법원	16	국회	10:11:00	18:13:00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한국석유공사	12	국회	10:02:00	19:50:00
10월 15일	환 경 노 동	근로복지공단	12	국회	10:03:00	18:15:00
10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한국연구재단	53	대전	10:08:00	16:33:00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국회	10:03:00	18:50:00
10월 18일	환 경 노 동	한국수자원공사	12	국회	10:09:00	18:34:00
10월 19일	교 육	부산대학교	14	국회	10:05:00	20:19:00
10월 19일	국 방	국방과학연구소	13	국방과학연구소	10:03:00	12:36:00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	한국예술종합학교	14	국회	10:10:00	18:08:00

《참고 2020년도 피감기관수 현황과 10개 이상 동시 수감한 피감기관 현황》

위원회	대상기관	감사일수	시찰제외	1일평균 감사대상수	10개이상대상기관감사일수
운 영	9	2	2	4.5	0
법 제 사 법	76	11	11	6.9	4
정 무	46	10	10	4.6	1
기 획 재 정	29	9	9	3.2	0
교 육	64	7	7	9.1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82	9	9	9.1	2
외 교 통 일	30	9	8	3.8	0
국 방	63	10	8	7.9	3
행 정 안 전	35	10	10	3.5	0
문 화 체 육 관 광	56	8	7	8.0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37	10	10	3.7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44	8	8	5.5	2
보 건 복 지	22	8	8	2.8	0
환 경 노 동	70	10	9	7.8	5
국 토 교 통	31	10	9	3.4	0
정 보	5	4	3	1.7	0
여 성 가 족	6	2	1	6.0	0
계	705	137	129	5.5	21

(2) ‘한마디’ 말 못하는 기관도 여전

코로나19로 인해서 병풍처럼 둘러 앉아 있을 수는 없어, 피감기관의 장으로 국정감사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질문이 있으면 들어와서 답변을 하는 코로나19 팬데믹식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우리 위원회가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5개 기관에서 모두 열아홉 분입니다만 감사장에 모두 50명 이내로 출입을 제한하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님들 자리에 나누어 드린 증인 명단과 같이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열 분은 감사장에 출석하시고 다른 증인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출석한 열 분 외에 다른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해당 위원님 질의시간에 요청하신 증인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2021.10.5.>

대전에서 실시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의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53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확인해 본 결과 53개 피감기관 중 18개 피감기관만 감사위원의 질의를 받아 답변 기회를 얻었고, **35개 기관은 감사위원의 질문을 받지 못했다.**

2020년도에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5개 이상 피감기관이 있는 곳에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 장관의 질의 답변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참석한 피감기관장 중에서 감사위원의 질의를 못 받은 경우가 2019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위기에도 감사기관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 2021년도에는 전수 조사를 하지 못하였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예컨대 10월 5일 법사위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를 제외한 동시수감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질의가 없었다.

《참고: 2020년도 동시수감기관중 질의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피감기관수 현황》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 현황	기관수
법 제 사 법	10.7.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3
법 제 사 법	10.12.월	법무부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3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 현황	기관수
			이민정책연구원	
법 제 사 법	10.13.화	대전고법 등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4
과학기술정보 방 송 통 신	10.7.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 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9
국 방	10.7.수	국방부 등	국방정보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군무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복지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인쇄창,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대학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통합데이터 센터, 국방정신전력원,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호지원단 지뢰피해자지원단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24
문화 체육 관광	10.7.수	문체부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2
문화 체육 관광	10.12.월	문화제청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0.12.월	농어촌공사 등	축산물품질평가원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8.목	중소벤처기업부 등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 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4
환 경 노 동	10.12.월	기상청 등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9

※ 2021년도 국정감사도 비슷한 수치일 것이나 조사를 하지 못함

(3) 심야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도 줄어(8개) 그것도 파행 때문

이번 국정감사에서 밤 11시를 넘어서까지 열의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2019년도에는 12개 국정감사장이 밤 11시를 넘겼으나, 2020년에는 9개로 줄어 들었다. 9개 중 3개는 낮시간 동안 파행의 영향도 미쳤다.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모두 8개 국정감사가 밤 11시를 넘겨서 심야에

진행하였다. 대부분 감사시작 시간 지연 / 오후부터 국정감사 실시 등으로 인해서 생겼다.

국정감사 둘째날이었던 10월 5일에는 3개 위원회가 밤11시를 넘겼으며, 자정을 넘겨서 국감이 진행된 곳은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2곳이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오후 3시를 넘겨 감사가 진행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의 경기도/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경기도 국정감사가 늦게까지 진행되어 밤11시를 넘겼다.

《밤 11시 넘어 국정감사가 진행된 2021년도 심야국감현황》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동시수감	장소	감사개시	감사종료
10월0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국회	14:04:00	23:59:00
10월05일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		정부세종2청사	14:05:00	23:52:00
10월0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4	국회	10:08:00	23:58:00
10월0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10:36:00	0:11:00
10월14일	법 제 사 법	서울고등검찰청	11	국회	10:07:00	23:14:00
10월18일	행 정 안 전	경기도/도경		경기도/도경	10:05:00	23:08:00
10월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10:07:00	23:01:00
10월26일	국 회 운 영	대통령비서실	3	국회	10:02:00	0:44:00

《참고 밤 11시 넘은 2020년도 심야 국정감사 현황》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수감	감사일	감사장소	감사개시	감사종료	감사시간
외 교 통 일	외교부	1	10.7.(수)	국회	10:04	23:25	13:21: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1	10.7.(수)	국회	10:14	24:00:00	13:46:00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	10.8.(목)	국회	10:06	23:11	13:05: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6	10.8.(목)	국회	10:05	23:41	13:36: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한국전력공사	13	10.15.(목)	국회	10:05	23:40	13:35:00
법 제 사 법	대검찰청	1	10.22.(목)	국회	10:08	25:08:00	15:0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종합감사>과기정통부	-	10.22.(목)	국회	10:02	23:22	13:2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종합감사>산자부	1	10.22.(목)	국회	10:06	24:38:00	14:32: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종합감사>원안위/방통	2	10.23.(금)	국회	10:19	24:02:00	13:43:00

(4) 저녁 6시 이전에 일찍 마무리되는 국감도 19회로 여진

6시 이전 국감 종료 횟수는 총 19회(2020년도 16회, 2019년도 총 28회)로

지난해 보다 3회 늘었으나, 피감기관 수가 707개에서 745개로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감사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방 분반 국정감사는 6시 이전에 종료하였다.

9개 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6시 이전에 일찍 종료한 감사가 발견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에는 4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방위원회가 3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회(국내에서 한 경우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2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대전에서 과학기술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루에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였는데 감사시간은 겨우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6시 25분에 불과했다. 기상오보로 질타를 받았던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 국정감사도 16시 55분에 종료하였다.

《2021년도 오후 6시 이전에 국정감사가 끝난 감사현황》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수감	장소	감사시작	감사종료
10월01일	외 교 통 일	외교부	5	국회	10:07:00	17:46:00
10월06일	외 교 통 일	주중국대사관	2	국회	10:17:00	13:53:00
10월07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립중앙박물관	11	국회	10:09:00	17:23:00
10월08일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통 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국회	10:07:00	16:39:00
10월08일	국 방	제2작전사령부	0	대구	10:01:00	12:46:00
10월08일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농촌진흥청	3	국회	10:07:00	17:03:00
10월08일	환 경 노 동	기상청	17	국회	10:08:00	16:55:00
10월12일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산림청	4	국회	10:08:00	17:42:00
10월14일	국 방	공군본부	5	공군본부	10:04:00	17:53:00
10월14일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한국마사회	6	국회	10:09:00	17:41:00
10월15일	행 정 안 전 (1 반)	전라남도	2	전라남도, 전남도경	10:07:00	15:09:00
10월15일	행 정 안 전 (2 반)	부산광역시	2	부산시청, 부산시경	10:00:00	16:21:00
10월15일	국 토 교 통	인천국제공항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	10:04:00	17:26:00
10월18일	기 획 재 정 (1 반)	광주지방국세청	7	광주지방국세청 등	10:32:00	17:34:00
10월18일	기 획 재 정 (2 반)	대구지방국세청	8	대구지방국세청	10:08:00	17:38:00
10월18일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통 신	한국연구재단	53	대전	10:08:00	16:33:00
10월19일	국 방	국방과학연구소	13	국방과학연구소	10:03:00	12:36:00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수감	장소	감사시작	감사종료
10월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국회	10:08:00	17:58:00
10월20일	외교통일	외교부		국회	10:02:00	12:04:00

《2020년도 오후 6시 이전에 국정감사가 끝난 현황》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수감	감사일	감사장소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출석위원
환경노동	기상청	16	10.12.(월)	국회	10:01	17:17	7:16:00	15
국방	병무청	1	10.13.(화)	국회	10:02	17:19	7:17:00	17
국토교통	부산광역시	1	10.13.(화)	부산광역시청	11:01	17:30	6:29:00	30
외교통일	아중동반	2	10.14.(수)	국회	12:02	17:32	5:30:00	10
국방	육군본부	10	10.16.(금)	육군본부	10:00	15:36	5:36:00	17
교육	〈반〉충남대학교대전교육청	8	10.19.(월)	충남대	10:00	16:26	6:26:00	8
교육	〈반〉경북대/대구교육청	9	10.19.(월)	경북대	10:01	17:44	7:43:00	8
기획재정	〈반〉광주지방국세청	7	10.20.(화)	광주국세청	10:32	18:00	7:28:00	12
기획재정	〈반〉대구지방국세청	8	10.20.(화)	대구경북본부	10:00	17:33	7:33:00	13
교육	〈반〉전남대/광주교육청	10	10.20.(화)	교육청	10:00	17:46	7:46:00	8
교육	〈반〉부산대/부산교육청	8	10.20.(화)	교육청	10:00	16:12	6:12:00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한국연구재단	53	10.20.(화)	대전	10:05	15:59	5:54:00	20
국방	방위사업청	3	10.20.(화)	국회	10:01	17:50	7:49:00	1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부산항만공사	6	10.20.(화)	국회	10:08	17:56	7:48:00	18
국방	육군지상작전사령부	1	10.22.(목)	지작사	10:02	15:40	5:38:00	16
행정안전	강원지방경찰청	7	10.23.(금)	국회	10:05	17:46	7:41:00	22

(5) 또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은 ‘캄캄이’ 재외공관 국감 실시

지난해(2020년) 외교통일위원회에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2일간에 걸쳐 화상 국감으로 진행되었다. 10월 12일에는 주미대사관(종래 미주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고, 10월 14일에는 아침 9시부터 2시간을 나눠 반별로 나눠서 3개~4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화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19팬데믹의 영향 하에서도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는 3개의 반(구주A반, 구주B반, 미주반)으로 나누어서 현지 재외공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국정감사가 끝난 지 1개월이 지난 11월 23일 현재까지 재외공관 국정감

사는 동영상 회의록은 물론 속기 회의록도 올라와 있지 않아 어떤 감사가 진행되었 지 모르는 ‘깜깜이’ 국정감사였다.

다만, 주중국대사관과 주일본대사관에 대해서는 동시에 화상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6) 파행성 정회가 늘어 — 손팻말, 마스크, 리본 정회

제21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의 첫날(10월 1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등 7개 상임위원회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오후에 다시 시작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에는 정회후 오전에 감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참(문체위) 등 반발로 본격적인 감사진행은 오후에 하게 되었다.

《10월 1일 손팻말 때문에 멈춘 2021년도 국정감사 현황》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10월 01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대법원
10월 01일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	국무조정실
10월 01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	교육부
10월 0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월 01일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	외교부
10월 01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부
10월 0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	문화체육관광부

10월 5일 국정감사 역시 오전에 개의해야할 국정감사가 여당위원장의 사회거부로 오후에 개의(**기획재정위원회**)하기도 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참(**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으로 오후에 시작되기 하였다.

12개 상임위원회 중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산업자원부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등만 정회없이 진행하였으나, 손팻말 논란은 계속 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도 시작시간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되었다가 의사진행만 하다가 점심식사 정회를 하기도 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위원장과 야당 간사의 막말 소동으로 중단되기도 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도 손팻말 논란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장동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와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에는 경기도 국정감사는 물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파행을 하였다.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첫날 국정감사부터 시작하여 10월 15일 군인공제회 등 국정감사도 파행을 빚었다. 군인공제회의 대장동 사업 투자관련 손실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부착이 원인이었다.

10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 역시 코로나19방지 마스크의 문구와, 근조리본을 이유로 여야간의 의사진행 발언만을 하다가 국정감사가 중단되어 오후부터 실시되었다.

지난해(2020년)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중 크고 작은 언쟁이 있었지만 파행이 없이 계속 진행’ 되었는데, 올해에는 야당 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경우에는 여당 의원들이 즐기치게 정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정감사 진행을 하였고, 여당 위원장의 경우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다가 그냥 정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7) 국정감사 불출석 의원은 조금 많이 늘어

국회공보를 통해 확인한 바, 지난해(2020년)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중 국정감사 전전과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의원은 박덕흠 의원(환경노동위)와 윤상현 의원(문화체육관광위), 그리고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었다.

올해(2021년)에는 장관겸임 의원 6명과 대선후보 경선에 나간 의원 3명(1명은 전체 일정 불참), 일신상의 이유로 국정감사를 하지 못한 의원 3명, 출장 등의 사유로 국정감사에서 참여하지 못한 의원 등이 다수 있었다.

《2021년도 국정감사에 불참한 장관겸임 국회의원 현황》

의원명	직책	상임위	비고
박범계	법무부장관	환경노동위	
이인영	통일부장관	기획재정위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 희	문화체육부장관	국토교통위	
한정애	환경부장관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 사보임(10. 18)

교섭단체 중요당직자를 살펴보면, 외교통일위의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재외공관활동은 알 수 없지만 결석은 하지 않은 것으로 국회공보를 통해 확인되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무위원회로 사·보임했다가 다시 복귀하기도 하였다. **윤호중**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감사일정 중 3번 불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국정감사 교섭단체 핵심당직자의 국감활동》

의원명	위원회	당직	국감불참수	질의횟수	비고
송영길	외교통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0	2	10월 18일과 10월 20일 두 번 질의를 함 (개성공단 복원, 북한의 SLBM 발사 관련)
윤호중	국방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	4	방사연 등 4군데에서 1번씩 질의
	국회운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0	1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1분 질의
김기현	외교통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0	0	재외공관반은 확인 못함(국내반에서는 질의없음)
	국회운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0	2	대통령비서실 등 국감에서 2회 질의(공정선거관리 촉구, 교황방북논의, 김오수 감사위원 제청청탁 관련)

4. 국정감사의 일반적 특징은 여전함

(1) 지역구 관련 질의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구 현안이나 민원을 국정감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에 많이 하는데 올해에도 여전하였다. 지역민원을 외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는 국정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민원의 경우에는 서면질의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피감기관 제출자료로 시간 때우기(노력한 결과물이 없음)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이라는 말이 많고, 그 통계에 의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은 감사원 등이 지적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

(3)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버티기

올해에도 국감 시작을 하면 자료요구를 하는 데, 자료 안주기, 버티기가 더 심해진 듯하다. 감사위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무성의를 지적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4) 자리 안 지키기 여전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정감사 질의 중에만 자리를 지키거나 여야간의 언쟁이 있는 경우에만 자리를 지키는 등 영상을 통해 텅빈 국정감사장의 간혹 비쳐지기도 하고 있다.

위원장의 멘트 중에 질의순서에 질의한 의원이 없어서 다른 의원부터 질의를 한다는 말이 간혹 나오기도 하였다.

5. SNS시대이지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캄캄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는 국회의원 현황에 국회의원의 프로필 연락처 보좌진 이메일 주소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공란이거나, 소개되어 있어도 연결되지 않아 사실상 홈페이지(SNS 포함)를 볼 수 없는 경우가 감사위원 대비 23.73%나 되었다. 소개된 경우는 295명 중 225명으로 76.27%였다.

10명중에 3명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1년 7개월이 지나가는 지금도 국회의원 현황에 자신의 홈페이지나 SNS주소를 소개하고 있지 않았다.

홈페이지 소개율이 가장 저조한 상임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로 소속위원 16명 중 7명밖에 소개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원 홈페이지 소개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43.75%였다.

가장 양호한 상임위원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으로 소개율이 57.89%였고, 그 다음 국회 교육위원회로 16명중 10명이 소개를 하고 있어서 62.50%였다. 가장 소개율이 좋은 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로 소속위원 16명 중 15명이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소개하고 있어 93.75%의 홈페이지 소개율을 보여 주었다.

홈페이지에 소개된 개인 주소는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개인제작 홈페이지 등 다양했는데 이중 네이버 블로그를 소개한 의원이 185명으로 225명 중 82.22%를 차지하였다. 네이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직장에서의 갑질로 자살사고 발생한 곳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개인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이 NAVER 등 포털 인물소개에서는 검색이 되는 데도 국회 홈페이지에는 안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다.

《2021년도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 개인 홈페이지 주소 소개 현황》

조사일 2021년 10월 9일(토)~10일(일)

조사대상 : 국회홈페이지 의원활동(국회의원 현황)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홈페이지(SNS포함)소개 의원수	홈페이지소개율
법 제 사 법	18	16	88.89%
정 무	24	17	70.83%
기 획 재 정	25	20	80.00%
교 육	16	10	62.5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15	75.00%
외 교 통 일	20	16	80.00%
국 방	17	12	70.59%
행 정 안 전	22	18	81.82%
문 화 체 육 관 광	16	12	75.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11	57.8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9	20	68.97%
보 건 복 지	24	21	87.50%
환 경 노 동	16	15	93.75%
국 토 교 통	29	22	75.86%
계	295	225	76.27%

《참고 2020년도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 개인 홈페이지 주소 소개 현황》

조사일 2020년 10월 12일(월)~13일(화) 일과시간

조사대상 : 국회홈페이지 의원활동(국회의원 현황)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홈페이지(SNS포함)소개 의원수	홈페이지소개율
법 제 사 법	18	12	66.67%
정 무	24	15	62.50%
기 획 재 정	26	19	73.08%
교 육	16	7	43.7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14	70.00%
외 교 통 일	21	13	61.90%
국 방	17	10	58.82%
행 정 안 전	22	13	59.09%
문 화 체 육 관 광	16	11	68.7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10	52.6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0	20	66.67%
보 건 복 지	24	21	87.50%
환 경 노 동	16	10	62.50%
국 토 교 통	30	19	63.33%
계	299	194	64.88%

국회의원의 2021년도 국정감사 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지를 살

따르면, 전체적으로 295명 중 141명이 국정감사자료를 게시하고 있어 국정
 감사자료 게시율이 47.80%였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의원이 감사시간에 피
 감기관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동영상이 많았다. 통계에서는 단순 기사나 사
 진을 제외하고 피감기관 별로 보도자료나 질의 영상 또는 질의 요약 자료
 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해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만 통계에 포함하였다. 홈페이지가 소개되어 있
 으나 연결되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 없는 17명의 의원도 없는 것으로 간주
 하였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2021년도 국감활동 게시율》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국감자료게시의원수	국감자료게시율
법 제 사 법	18	6	33.33%
정 무	24	15	62.50%
기 획 재 정	25	9	36.00%
교 육	16	8	5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8	40.00%
외 교 통 일	20	8	40.00%
국 방	17	4	23.53%
행 정 안 전	22	13	59.09%
문 화 체 육 관 광	16	9	56.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5	26.3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9	13	44.83%
보 건 복 지	24	17	70.83%
환 경 노 동	16	10	62.50%
국 토 교 통	29	16	55.17%
계	295	141	47.80%

《참고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2020년도 국감활동 게시율》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국감자료 게시의원수	국감자료게시율
법 제 사 법	18	8	44.44%
정 무	24	12	50.00%
기 획 재 정	26	10	38.46%
교 육	16	7	43.7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10	50.00%
외 교 통 일	21	8	38.10%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국감자료 게시의원수	국감자료게시율
국 방	17	6	35.29%
행 정 안 전	22	11	50.00%
문 화 체 육 관 광	16	7	43.7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4	21.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0	13	43.33%
보 건 복 지	24	16	66.67%
환 경 노 동	16	8	50.00%
국 토 교 통	30	16	53.33%
계	299	136	45.48%

Ⅲ. 2021년도 국정감사의 화제성(話題性) 자료*2)

1. ‘대장동’ 국감이라고 하는데,

87개 국감장에서 ‘대장동’ 은 1,924회 언급

‘대장동’ 이 언급된 국정감사장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물론, 전체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중 모두 87개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이 나왔다.

‘대장동’ 이 가장 많이 나온 국정감사장은 국토교통위원회 2반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으로 167회 언급이 되었다. 50회 이상 언급된 국정감사장도 15개나 되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의 이름이 856회 언급되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이름이 피감기관의 장(증인)으로 임했던 경기도 국정감사(행안위와 국토위)를 제외하면 1,378회 거론된 것을 생각해 보면 ‘대장동’ 국정감사라고 할 만하다.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거명된 것은 주로 대장동 관련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화천대유, 천화동인,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비용 대납 등 연관

* 현장감과 팩트확인을 위해 신문·방송의 보도내용을 일부 그대로 원용하였음을 밝힘 (이하 같음)

질의를 생각하면 이번 국정감사는 ‘대장동’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장동’이 50회 이상 언급된 국정감사장(많은 순)》

위원회	피감기관	대장동 언급횟수
국토교통(2반)	경기도	167
행정안전	경기도	147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129
법제사법	대검찰청	107
국토교통	한국토지주택공사	94
법제사법	감사원 등 종합감사	92
법제사법	법무부	88
국회운영	대통령비서실	83
행정안전	서울특별시	72
법제사법	서울고등검찰청	71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65
정무위	국무조정실	55
법제사법	감사원	52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51
법제사법	대법원	50

10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의 대검찰청(검찰총장 김오수) 국정감사에 대한 감사위원의 질의 키워드를 분석해 본 결과, 1차 주질의에서 위원장과 질의를 하지 않은 장제원 의원을 제외한 16명의 위원 중에서 12명의 의원이 질의 중 대장동을 언급했다.

《2021년도 대검찰청(10.18) 국정감사 질의 키워드 분석》

구분 의원명	1차주질의	2차 보충질의	재보충질의	질의구분 없음	재재보충질의 (신청9명)	추가질의
박광온						
박주민	대장동, 윤석열	월성1호기, 고발사주		고발사주		
김남국	대장동	김건희	이재명 옹호		윤석열	
김영배	김건희, 윤석열	대장동, 윤석열	화천대유, 가상화폐			
김용민	대장동	대장동, 윤석열	윤석열			
김종민	윤석열, 대장동 1번만 언급	윤석열	검찰개혁			
박성준	대장동, 화천대유	대장동	대장동, 화천대유		화천대유 김만배	

구분 의원명	1차주질의	2차 보충질의	재보충질의	질의구분 없음	재재보충질의 (신청9명)	추가질의
소병철	윤석열, 대장동 조금	윤석열, 대장동	윤석열, 김건희		대장동, 보이스피싱	대장동, 보이스피싱
송기현	대장동	대장동,윤석열	윤석열, 화천대유		마구잡이압수수색	
이수진	대장동	대장동,윤석열	이재명 배임죄 불성립			
최기상	공소권남용,윤석열	디지털성범죄	인권보호수사준칙		별건수사 폐단	
윤한홍	대장동	대장동, 이재명				
권성동	대장동	대장동 김만배	윤석열, 이재명			고발장이나 녹취록 유출과 관련
유상범	대장동	대장동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대납	이재명 변호사비대납	윤석열 옹호	
장제원	질의안함					
전주혜	대장동	대장동, 이재명 변호사비대납	이재명, 대장동		대장동	대장동
조수진	대장동	대장동	이재명 변호사비대납	대장동	김만배	이상직 재판
최강욱	공소권 남용	윤석열 라인	윤석열징계의설서		조영래 변호사	

《‘대장동’이 언급된 2021년도 국정감사장(87개)》

외교통일위원회의 제외공관 국정감사 제외(국내 화상은 포함)

국정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2021.10.01.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2021.10.01.	정 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1.10.01.	행 정 안 전	행정안전부등
2021.10.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0.01.	법 제 사 법	대법원 등
2021.10.01.	교 육	교육부 등
2021.10.01.	외 교 통 일	외교부 등
2021.10.0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등
2021.10.05.	정 무	공정거래위원회 등
2021.10.05.	국 토 교 통	국토교통부 등
2021.10.05.	법 제 사 법	법무부 등
2021.10.05.	문화체육관광	문화재청 등
2021.10.05.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
2021.10.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2021.10.05.	교 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2021.10.05.	환 경 노 동	환경부
2021.10.05.	행 정 안 전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2021.10.06.	환 경 노 동	고용노동부
2021.10.06.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
2021.10.06.	정 무	금융위원회
2021.10.06.	국 방	합동참모본부 등
2021.10.06.	보 건 복 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021.10.07.	교 육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2021.10.07.	행 정 안 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2021.10.07.	정 무	금융감독원
2021.10.07.	행 정 안 전	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2021.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양수산부
2021.10.07.	문화체육관광	국립중앙박물관 등
2021.10.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021.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2021.10.07.	법 제 사 법	감사원
2021.10.07.	국 토 교 통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021.10.08.	환 경 노 동	기상청 등
2021.10.08.	보 건 복 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021.10.08.	법 제 사 법	대전고등검찰청 등
2021.10.08.	법 제 사 법	대전고등법원 등
2021.10.08.	행 정 안 전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2021.10.08.	국 토 교 통	한국도로공사 등
2021.10.08.	행 정 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10.08.	기 획 재 정	국세청 등
2021.10.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2021.10.12.	국 토 교 통	한국철도공사 등
2021.10.12.	문화체육관광	대한체육회 등
2021.10.12.	법 제 사 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10.12.	법 제 사 법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
2021.10.12.	정 무	국민권익위원회 등
2021.10.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림청 등
2021.10.12.	환 경 노 동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2021.10.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한국전력공사 등
2021.10.13.	보 건 복 지	국민연금공단
2021.10.13.	환 경 노 동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2021.10.13.	정 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021.10.14.	교 육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등

국정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2021.10.14.	국 토 교 통	한국부동산원 등
2021.10.14.	법 제 사 법	서울고등검찰청 등
2021.10.15.	법 제 사 법	서울고등법원 등
2021.10.15.	정 무	신용보증기금 등
2021.10.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한국가스공사 등
2021.10.18.	법 제 사 법	대검찰청
2021.10.18.	환 경 노 동	한국수자원공사 등
2021.10.18.	외 교 통 일	통일부 등
2021.10.18.	행 정 안 전	경기도
2021.10.18.	행 정 안 전	경기도남부경찰청 등
2021.1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2021.10.19.	행 정 안 전	서울특별시
2021.10.19.	법 제 사 법	군사법원
2021.10.19.	행 정 안 전	서울특별시경찰청
2021.10.19.	법 제 사 법	법제처
2021.10.19.	문 화 체 육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2021.10.20.	정 무위 원 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 종합감사
2021.10.20.	국 토 교 통	경기도
2021.10.20.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2021.10.20.	외 교 통 일	외교부
2021.10.20.	환 경 노 동	환경부, 기상청
2021.10.20.	국 토 교 통	서울특별시
2021.10.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2021.10.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0.21.	환 경 노 동	고용노동부
2021.1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2021.10.21.	외 교 통 일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종합감사
2021.10.21.	법 제 사 법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10.21.	정 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1.10.21.	국 토 교 통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021.10.21.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2021.10.21.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
2021.10.26.	국 회 운 영	대통령비서실 등
2021.10.26.	행 정 안 전	행정안전부 등 종합감사

2. 오징어게임 선풍적 인기,

국감 속에서는 37개 국감장에서 모두 63명의 감사위원이 언급

황동혁 감독이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가 2021년 9월 17일에 공개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는데, 국정감사장에도 ‘오징어 게임³⁾’이 등장했다.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복장을 한 국회의원은 임오경 의원과 최승재 의원 등 2명이었고, “오징어게임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혹시 안 보셨습니까?” “오징어게임 아시지요?” 등 오징어게임이 언급된 국정감사장은 모두 37개 국정감사장이었다.

반면 생물 ‘오징어’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노량진 시장 오징어값)에서 언급되었다.

《 ‘오징어게임’ 이 등장한 국정감사장(37개) 》

국감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언급한 의원 (존칭 생략)
2021.10.01.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김승수 임오경 박정
2021.10.01.	교육	교육부 등	강득구
2021.10.01.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등	이은주
2021.10.01.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우상호 홍익표
2021.10.05.	문화체육관광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김승원
2021.10.05.	교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안민석
2021.10.05.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등	전혜숙 홍익표
2021.10.05.	정무	공정거래위원회 등	진선미
2021.10.05.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등	송석준
2021.10.05.	법제사법	법무부 등	윤한홍
2021.10.05.	행정안전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이은주
2021.10.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류호정
2021.10.06.	외교통일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등	윤건영

3)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의 상금이 걸린 미스터리한 데스 게임에 초대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서바이벌, 데스 게임 장르의 드라마이며 제목은 골목 놀이인 오징어에서 따 왔다(위키백과사전)

국감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언급한 의원 (존칭 생략)
2021.10.07.	국 토 교 통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송석준
2021.10.07.	문화체육관광	국립중앙박물관 등	정청래
2021.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등	양금희
2021.10.07.	교 육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안민석
2021.10.08.	기 획 재 정	국세청	고용진 서일준
2021.10.11.	외 교 통 일	주네덜란드왕국대한민국대사관	정진석
2021.10.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준호 윤영찬 조정식 박성중
2021.10.13.	정 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윤관석 송재호
2021.10.14.	문화체육관광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이채익 유정주 박 정 최형두 임오경 정청래 김승수 김승원
2021.10.15.	정 무	신용보증기금 등	민형배 진선미
2021.10.15.	환 경 노 동	근로복지공단 등	윤준병
2021.10.18.	외 교 통 일	통일부 등	유기홍
2021.10.19.	법 제 사 법	법제처	김영배
2021.10.19.	문화체육관광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임오경 정청래
2021.10.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영식 이상호 홍익표
2021.10.20.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 등	김수홍 김주영
2021.1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최승재 엄태영
2021.10.21.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 등	김두관 김주영
2021.10.21.	정 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윤주경
2021.10.21.	국 토 교 통	국토교통부 등	문진석
2021.10.21.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유정주 임오경 김승수 김승원
2021.10.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홍석준
2021.10.21.	외 교 통 일	외교부, 통일부 등	지성호
2021.10.26.	국 회 운 영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임이자 최혜영 추경호

※ 증인이나 참고인이 언급한 경우는 제외함.

3. 제21대 국회 국감의 단골소재가 된 방탄소년단(BTS)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세계를 휩쓴 한류 선봉에 빌보드 차트 정상에 오른 BTS, BTS라는 세계적인 우리 그룹이 더 많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재 외교통일위원장의 말이다.

10월 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지난 5년 동안에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방시혁입니까? 둘 중에 누가 더 기여도가 큼니까?” 라고 정의용 외교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자,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라고 답변하였다.

최근 언론에서 대통령의 유엔 방문 시 동행했던 BTS에 관련되는 보수 지 급과 관련해서 ‘정당한 보수가 지급이 되지 않았다, 열정페이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중국의 김치 종주국 왜곡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김치종주국이라는 중국에 대해 이것 BTS한테 김치를 한번 먹게 해야지 김치가 한국 것이 되는 건가요? 정부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라면서 정부의 무능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BTS가 25개 국정감사장에서 언급 되었고, 올해에는 21개 국정감사에서 언급되었다.

BTS가 언급된 특징있는 질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방탄소년단(BTS) 관련 주요 언급내용》

보건복지위의의 강병원) 의원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BTS가 올 연말에 미국에서 오프라인 콘서트를 연답니다. 이때 2년 만에 문이 열린다고 하는데 콘서트장 출입 가능자는 백신접종 완료자고요, 미접종자 중에는 72시간 내 PCR 음성확인 결과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11월이 되면 야외에서 이런 공연들 우리 국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위의 최형두 의원) 의원 우리 예술교육 중요하지요. BTS의 나라 아닙니까? 문화예술 강국으로 만들자고 학교에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예술강사를 다 고용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을 둘 수 없으니까 청년 예술도 지원할 겸 예술강사 수업을 신청하고 있는데 이것 왜 절반밖에 안 줘니까? 이런 데 예산 좀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술 수업이야말로 아이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고 공교육에서 그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빛나게 이 문화예술을 키우겠습니까? BTS는 뭐 그냥 나왔습니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권명호 의원) 의원 얼마 전에 BTS 짝퉁 캐릭터를 다량 적발한 일이 있는 건 아십니까?

기획재정위의 양향자 의원) 의원 BTS가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가 연평균 5조 5600억이라고 하는데 지금 K-전자세정 시스템을 수출할 기회가 됐는데 이 노력을 잘하시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일위원회의 이광재 위원장) 위원장 BTS가 온라인상에서 한글교육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위의 소병훈 의원) 의원 이번에 사실은 화제가 된 게 BTS 정국의 생일을 맞이해

가지고 방탄소년단 팬클럽이 KTX 철도차량을 임대해서 래핑 광고를 했습니다
국방위원회의 성일종 의원) 저번에 병무청 감사할 때도 제가 BTS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님은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 BTS가 한 주간 빌보드차트에 올라가면 1조 7000억의 흑자가 나오, 경제적 효과가 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한 2400~2500억밖에 안 나는데 팝음악계 같은 데서 정말로 가게 되면 수조씩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한 56조 정도 BTS가 국가에 기여를 했더라고요.

기획재정부의 김주영 의원) 기재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한국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글을 널리 보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BTS라든지 오징어게임이라든지 한류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이라고 있는데 아시지요?

《‘방탄소년단’(BTS) 가 질의중 언급된 국정감사장(21곳)》

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언급한 의원(존칭 생략)
2021.10.01.	외 교 통 일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등	정진석 이광재
2021.10.01.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김승수 정청래 임오경
2021.10.05.	문화체육관광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유정주 김승원
2021.10.0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이양수
2021.10.06.	보 건 복 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강병원
2021.10.07.	문화체육관광	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등	임오경 정청래 최형두
2021.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권명호
2021.10.08.	기 획 재 정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향자
2021.10.09.	외 교 통 일	주샌프란시스코대한민국총영사관	이광재
2021.10.11.	외 교 통 일	주네덜란드왕국대한민국대사관 등	정진석 김경협
2021.10.12.	교육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 등	박찬대
2021.10.12.	국 토 교 통	한국철도공사 등	소병훈
2021.10.12.	기 획 재 정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고용진
2021.10.14.	문화체육관광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이채익 김승수 정청래 임오경 김승원 박 정
2021.10.15.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등	성일종
2021.10.18.	외 교 통 일	통일부 등	윤건영 유기홍
2021.10.19.	문화체육관광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임오경
2021.10.21.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이 용 최형두 임오경 김승수
2021.10.21.	국 토 교 통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문진석
2021.10.21.	국 방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성일종
2021.10.21.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김주영

4. 코로나 19 방역 및 백신 관련 국정감사 내용

이번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국정감사의 주 내용은 3가지 갈래로 나뉘서 질의되었다.

첫째는 현행 방역 시스템이 정치방역인지 과학방역인지 합리적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의문시하며 방역당국에 질문을 하는 형태였고, 여당은 K-방역의 성공적인 내용들을 부각하기도 하였다.

정경희 위원) 정부의 방역지침이 근거 없는 숫자놀이에 불과하고 국민의 자유를 통제하는 정치 방역이자 내로남불 방역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만 따지고 공포심만 조장하는 현재의 방역지침이 아니라 치명률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국회 교육위원회, 2021년10월19일 국정감사에서

이형석 위원) 지난해부터 있었던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K-방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방역 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A학점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후진적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지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2021.10.1.>

두 번째는 백신과 관련하여 백신의 효과성 및 부작용에 대한 국정감사였다.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2일자 국정감사에서 대거 참고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세 번째는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위드-코로나(with corona) 즉 일상회복의 시기였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시행시기가 발표되어 큰 관심을 자아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의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국립대학교 및 국립대학교부설종합병원 국정감사에서 병원장들에게 방역지침과 관련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개선방향에 대한 국립대병원장들의 답변 내용》

성명	직책	답변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이제 백신의 보급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그런 방역지침에 대한 변경이 필

성명	직책	답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동	강원대학교병원장	저희 강원대병원은 역시 국공립 기관으로서 정부의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안전과 또 경제활성화, 사회 갈등 속에서 정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대병원 역시 정부에서 제시하는 방역지침의 잘잘못 따지기보다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코로나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적극 협조하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석	충북대학교병원장	코로나 사태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정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백신 2차 접종을 빨리 완료해서,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제한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빨리 2차 접종을 끝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다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환중	충남대학교병원장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어가고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좀 더 자유스럽게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아마 11월부터는 그렇게 바꿔 나갈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림	경북대학교병원장	코로나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이라디케이션(eradication), 완전히 없애는 게 아마 불가능하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 사망률을 낮춘 상태에서 그냥 끌고 가는 정책을 가져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영근	전남대학교병원장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두 번 이상 맞는율이 70%가 넘어가고 최근에 부스터샷까지 도입되는 실정에 있어서는 워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일반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풀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위생 관련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더 지속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런 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들과 그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방침을 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철호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	점차 이제 백신을 맞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방역 방법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워드 코로나를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곳이 아마 저는 병원이 가장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워드 코로나가 되었을 때 저희 국립대병원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여기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장	방역 단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는 2차 백신 접종완료율이 85% 이상이 됐을 때는 충분히 일상 회복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명	직책	답변
		다만 일상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좋은 조건인 3밀, 밀폐·밀접 그다음에 밀집된 공간을 좀 개선해야 되겠고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이런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를 준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정주	부산대학교병원장	감염병 방어의 큰 축은 의료와 방역, 이 두 축입니다. 방역이 느슨해지면 그 모든 부담(burden)은 의료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먹는 코로나약이 나왔긴 한데 저희들 의료기관으로서 좀 더 긴장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병철	제주대학교병원장	70% 이상의 국민들이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워드 코로나로 가는 시대적 상황은 피할 수가 없고,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먹는 항바이러스제가 조만간 나오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 아마 모든 게 다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플랫폼’ 국감, 플랫폼 질의가 나온 국감장은 73곳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관심사는 코로나 19 비대면시대의 플랫폼 기업 관련이었다.

질문의 방향은 4가지인데,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는 것으로, 교육이나 서비스 관련 질의가 되었다.

두 번째는 플랫폼 대기업의 횡포 즉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근절하여 다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주로 산업위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정위를 담당하는 정무

세 번째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새로운 플랫폼 환경에 맞는 법제를 만들고, 더 나아가 새로운 기술환경에 맞는 플랫폼 기반을 선제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플랫폼 기업관련 질의나 언급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 번째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관련해서 정의당이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많이 질의되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이사가 증인으로 나

와서 노동자 자살사고 관련 증언을 하였다.

10월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이 105회 언급되었고, 플랫폼 기업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던 등 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10.5)에서는 116회 언급되었다.

플랫폼 기업의 대표나 주요 임원들은 여러 위원회에 중복 증인신청이 되어 여러 번 국정감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같은 날(10월 5일)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하기도 하였다. (정무위원회에서 먼저 증인신문을 한 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으로 이동)

《플랫폼 관련 질의가 나온 국정감사장과 질의 키워드(의원 등)》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주요내용 키워드 / 질의 의원 등
2021.10.01.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플랫폼·에이전시 등 사업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작가와의 계약서에 대한 전수조사(유정주) 스마트관광 사업 건인데 서비스를 전부 대형 유통 플랫폼에 맡기고 있어요(이병훈) 플랫폼 기업이 다 가져가는 그런 나쁜 관행(김승수) ※ 플랫폼 기업관련 증인신문(김준구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정명훈 여기어때컴퍼니 대표)
2021.10.01.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5번 나옴)	플랫폼 기업 횡포(박성중) 플랫폼사들의 힘(한준호) 데이터 플랫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축사업(홍석준) 빅테크 산업, 플랫폼 독점 문제가 쟁점화(이상호) 플랫폼 노동시장(윤영찬) 5개의 혁신 플랫폼(정희용)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상생하지 않고 너무 독식하고 있다' (홍익표) 플랫폼사업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변재일)
2021.10.01.	정 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택시 호출 플랫폼(이정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김희곤) 온라인 플랫폼(오기형) 경기도 플랫폼(윤창현)
2021.10.05.	법 제 사 법	법무부 등	메타버스 플랫폼(이수진) 법률 플랫폼(김영배)
2021.10.05.	과학기술정보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등 (116번)	EBS 플랫폼 이용한 원격교육 지원(조정식) 미디어플랫폼(홍익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홍석준)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주요내용 키워드 / 질의 의원 등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흐름이 전 세계적이지요? (윤영찬)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문제(조승래) ※ 플랫폼 기업증인 신문(김경훈구글코리아 대표이사, 김범준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금선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박대준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 팀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등)
2021.10.05.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의 과다이 자문제(양경숙)
2021.10.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요새 플랫폼 기업 문제 많이 되잖아요.(최승재) 가정용 스마트전력플랫폼 구축 사업 (구자근) ESG 경영 지원 플랫폼(김경만)
2021.10.05.	정 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진선미) 구매대행(윤창현) 중고거래 플랫폼 (이정문) 미국 빅테크는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 상표 제품을 직접 판매(홍성국) 건수가 229건인데 플랫폼 사업자 권고 수가 166건. 그러면 72%가 플랫폼 사업자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김한정) 가맹점이라든지 대리점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갑질 논란(민병덕) 새로운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것이 부족하다(유의동) 플랫폼 국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플랫폼 입법정책의 방향성' 정책자료집(윤관석) 플랫폼 관련 기업 증인 신문(김범수카카오 의장,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이사)
2021.10.05.	국 토 교 통	국토교통부 등	지난 7월에 보니까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원중개를 세 번이나 검찰에 고발했더라고요, (신동근) 코로나 때문에 플랫폼 택시(허영)
2021.10.06.	정 무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플랫폼(윤관석)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금융상품권(윤주경)
2021.10.06.	국 방	합동참모본부 등	메타버스 아십니까? 플랫폼산업이 뜨는 거예요, 포노 사피엔스(조명희)
2021.10.06.	보 건 복 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진료플랫폼을 통해서 비대면 진료(최혜영)
2021.10.06.	환 경 노 동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이수진) 플랫폼 종사자(김웅) ※증인신문(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주요내용 키워드 / 질의 의원 등
2021.10.06.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1인 자영업자 굉장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장혜영)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플랫폼 기업들이 전자고지 사업을 추진(양경숙)
2021.10.07.	보 건 복 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플랫폼 업체의 배달 약국 앱을 통한 처방전 전송과 의약품 배송(남인순) 김경훈(구글코리아 사장) 증인신문
2021.10.0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등	산업부 국감 때 플랫폼 업체들이 골목상권의 시장 확장(김동주) 플랫폼 구축이나 유지보수(구자근) 대한변협의 광고 홍보하는 플랫폼 운영 불가(이소영) 가치삼시다 플랫폼(권명호) 중소사업자의 온라인플랫폼 입점(홍정인) 배달의민족, 어떤 데입니까? 이제 지금 거대 플랫폼 아닙니까(김정재) 카카오와 티맵모빌리티는 대규모 플랫폼이고 자본도 많고 여러 가지로 큰데, 아까 확장제한 권고 대상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엄한 데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강훈식)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골목상권까지 문어발 식(김경만) ※ 플랫폼관련 기업 증인 신문 (김범준(주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범수 (주)카카오 의장, 류극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공기중 (주)네이버 사업정책담당 부사장 등)
2021.10.07.	국 토 교 통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플랫폼 기업으로서 직방(송석준) 안상우 직방 대표 참고인 신문
2021.10.07.	정 무	금융감독원	머지포인트 사태 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금융상품 판매(유동수) PG 역할을 하는 일부 플랫폼에서 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이정문)
2021.10.07.	문 화 체 육 관 광	국립중앙박물관 등	플랫폼창동61 사업(김승수)
2021.10.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양수산부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벌써 IBM과 손잡고 글로벌 물류 플랫폼인 트레이드렌즈를 출범(이만희)
2021.10.07.	교 육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K-에듀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어서 중복투자(서동용) 플랫폼 '뉴쌤' (정경희)
2021.10.08.	보 건 복 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배달 플랫폼에서 이물 신고는 또 3.5배나 늘었습니다.(고민정) 국내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 쇼핑 사이트하고 제휴해서 더 간편하게 직구를 할 수가 있지요(정춘숙)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업체 위생점검(최연숙)
2021.10.08.	행 정 안 전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당연히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누군가 와서 게시판에 글도 적고 플랫폼 역할이 돼야 될 건데 이걸 전시입니다.(박재호)
2021.10.08.	기 획 재 정	국세청 등	디지털 뉴딜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대하는 거고, 플랫폼 노동, 복지이음 통합플랫폼(김태년) ,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 굉장히 많아지고 있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주요내용 키워드 / 질의 의원 등
			는 건 알고 계시지요?(박홍근)
2021.10.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촌진흥청 등	반려견 인공지능 플랫폼(홍문표)
2021.10.08.	국 방	육군제2작전사령부	위리어 플랫폼 하고(신원식)
2021.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다른 상임위는 모두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가 플랫폼기업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못 부르고 질문하지 못하는 것 이 또한 문제 아닐까, 특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 상임위가 저희 과방위로 알고 있습니다.(허은아) AI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 (황보승희)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김영식) 이제는 플랫폼, OTT와 같은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플랫폼사업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자들이 과거와 같은 절대적 을의 위치(홍익표)
2021.10.08.	국 토 교 통	한국도로공사 등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안전시설을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강준현)류공선(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장기환(쿠팡이츠 대표) 증인신문
2021.10.12.	기 획 재 정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관세를 물지 않고 들어온 물품을 중고상품 플랫폼에 다 올려서 파는 겁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류성걸) 블록체인 전자상거래 목록통관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김영진) 배달앱 플랫폼 노동자(양경숙) 플랫폼 대기업들, 네이버·카카오·쿠팡이나 인터파트(유경준)
2021.10.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OTT 플랫폼 종합전략 수립(홍익표) 플랫폼사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가야 되는지 어떤 전략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윤영찬)
2021.10.12.	환경노동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쿠팡이나 배달의민족도 교섭이 이루어졌었지만 플랫폼 시장에서 노사 간 직접교섭의 틀(장철민) 로드맵에 플랫폼 회사 대표라든지 프리랜서 대표도 사회적 합의기구에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는데(송옥주) 인프라구축사업 보면 플랫폼 노동 관련 실태조사(김성원) 미디어 환경이 요즘 TV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화(윤미향)
2021.10.12.	행 정 안 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지역화폐에 대한 솔루션이나 플랫폼을 납품했던 코나 아이가 이재명 테마주, 인천e음 플랫폼 효율성 운영(이영)
2021.10.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중소기업 지원 통합 기술마켓 플랫폼이라는 목표로 에너지 기술마켓이 출범하지 않았습니까?(홍정민)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주요내용 키워드 / 질의 의원 등
2021.10.13.	국 방	육군본부 등	지금 이미 타이거 4.0하고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육군이 발전시킨 핵심인데 맞지요(신원식, 홍영표)
2021.10.13.	정 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국내 학술지 플랫폼 DBpia, KISS(이용우) 숏폼 동영상 기반 SNS 플랫폼(윤관석)
2021.10.13.	보 건 복 지	국민연금공단	플랫폼 노동(고영인)
2021.10.13.	기 획 재 정	한국수출입은행 등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플랫폼(박홍근)
2021.10.14.	국 토 교 통	한국부동산원 등	한국토지정보공사의 플랫폼 개발사업(김윤덕) 디지털트윈 정보 호환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구축(문정복)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허영) 빈집 플랫폼을 운영(진성준)
2021.10.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가치샵시다 플랫폼 사업(김정재, 송갑석) K-비대면바우처플랫폼 사업(이철규) 플랫폼 기업들한테 직접 광고비라든지 지원비 문제(이장섭) 플랫폼 사업자들은 원래 입점을 시켜야만이 사업(류호정) 본인에게 맞는 정책자금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플랫폼을 저는 구축(양금희)
2021.10.14.	문화체육관광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쿠팡의 OTT 플랫폼 쿠팡플레이에서 독점으로 제공(임오경) 넷플릭스든 어디든, 플랫폼이라는 게 자릿세 받는 데잖아요. 자릿세만 받으면 되지, 저작권 이런 건 왜 회수를 못 해요?(정청래) 넷플릭스와는 달리 창·제작사, 플랫폼이 함께 공생하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에 방점을 찍을 때(유정주) 세계 시장에 유통할 플랫폼(김승원) 유튜브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김의겸) 메타버스 플랫폼(김승수)
2021.10.14.	국 방	해군본부 등	워리어 플랫폼(기동민)
2021.10.14.	국 방	공군본부 등	보잉사와 동일한 플랫폼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항공 통제기의 AESA 레이더는 전자식이지요(김진표)
2021.10.14.	보 건 복 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미디어 민관협의체에 플랫폼사업자 참여(김종윤) 차세대 메신저 리보핵산인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차세대 메신저 리보핵산인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
2021.10.14.	교 육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등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강민정)
2021.10.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다양해지는 플랫폼과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윤영찬) 지상파플랫폼이라는 게 계속 생겨날 수 있을 것인가(변재일) 각종 디지털 플랫폼, 특히 OTT가 이미 대세(정필모) 방송뿐만 아닌 OTT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유통을 지원하는 것 (홍익표)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주요내용 키워드 / 질의 의원 등
2021.10.15.	정 무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2020년도에 쿠팡 2286억, 카카오 472억, 야놀자 330억 등 최근 대기업 규모로 성장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막대한 투자 지원(김희곤) 무슨 플랫폼이나 다양한 신진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진선미)
2021.10.15.	보 건 복 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이종성)
2021.10.15.	환 경 노 동	근로복지공단 등	플랫폼노동자(노웅래)
2021.10.18.	정 무	예금보험공사 등	K-캠프(송재호) 비시장성 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진선미)
2021.1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코트라가 B2B플랫폼을 강화하고 또 K스튜디오를 통해서 디지털전환의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이장섭)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사업(김경만, 김정호) 플랫폼 사업 (강훈식) 사업 다각화 플랫폼(구자근)
2021.10.19.	문 화 체 육 관 광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에어비앤비는 해외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지요?(이상헌) 열린관광 정보 플랫폼 구축(김예지) 뉴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광고(이병훈) 서울시의 플랫폼창동61 사업 관련(김승수)
2021.10.19.	교 육	부산대학교 등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을 전남대가 총괄,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강민정, 윤영덕) 지하철 플랫폼 의자에서는 거리두기를 하라면서 정작 지하철은 뺄뺄하게 차서 이동하는 모순도 발생(정경희)
2021.10.19.	행 정 안 전	서울특별시	플랫폼 배달 라이더 사회 안전망 관련된 문제(임호선)
2021.10.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플랫폼의 골목상권 진출, 배달 플랫폼(이동주) 현재의 플랫폼 기업들이 K-ESG라는 데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최승재)
2021.10.20.	정 무	국무조정실 등	온라인 플랫폼(이용우) 플랫폼 기업 증인신문(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등)
2021.1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부 등	쇼핑몰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의지가 부족(안병길) 플랫폼기업 관련 증인신문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이사, 유봉석(네이버 서비스운영총괄부사장 등)
2021.10.20.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 등	배달라이더, 택시 등 플랫폼 사업주에게도 배달 소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겠다는 법안(서병수) 플랫폼 노동자(김주영) 조달청의 플랫폼(플랫폼)
2021.10.20.	보 건 복 지	보건복지부 등	플랫폼 노동자 포함해 한 1400만 명(김성주)
2021.10.20.	환 경 노 동	환경부, 기상청	하수구 담배꽂초 사진(안호영)
2021.10.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플랫폼의 망사용료(김영식) 유료방송을 활성화하는 데 플랫폼사업자를 중심으로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주요내용 키워드 / 질의 의원 등
			사고하시면 안 돼요(우상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허은아) 플랫폼 수수료 등이나 유통마진 (이용빈)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유튜브라든지 SNS사업자나 플랫폼사업자 관련(박성중)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페이스북, 구글까지 세계적인 유명 플랫폼에서도 접속, 결제 등 수시로 오류가 발생 (양정숙)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정희용) 소프트웨어인력 양성 플랫폼 구축(조승래)
2021.10.21.	교 육	교육부	지역혁신 플랫폼(강민정, 윤영덕) K-에듀 통합 플랫폼 사업(강득구) 교원 전용 디지털 콘텐츠 운영체제 플랫폼 ‘잇다 (ITDA)’ (도종환)
2021.10.21.	기 획 재 정	기획재정부	당근마켓(박홍근)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온플법(우원식) OTT 산업(김두관)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대기업이 모바일을 통해서 각종 안내서를 전송하는 전자고지 사업의 문제점(양 경숙)
2021.1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대형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 (이학영) 대형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투(강훈식) 좋은 중소기업 소개하는 구인 플랫폼(이소영) 플랫폼 같은 사업들이 허점도 많고 한계(신영대) 플랫폼 국감(류호정) 포털사이트나 유명한 온라인플랫폼 중개시장(양이원 영)
2021.10.21.	국 토 교 통	국토교통부.행정 중심복합도시건 설청.새만금개발 청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김윤덕) 택시관련 카카오 플랫폼(조오섭) 플랫폼기업이 혁신의 이름으로 독과점, 운송플랫폼 사 업(심상정)
2021.10.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플랫폼 기업 관련 증인 신문(김범수 카카오 의장, 박 대준 쿠팡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이재환 원스 토어 대표, 이해진 네이버 GIO)
2021.10.21.	국 방	국방부	SLBM은 플랫폼도 돼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김병주) SLBM 플랫폼 기술 북한에 의해 해킹(하태경) 수중 바지선의 플랫폼(안규백)
2021.10.21.	환 경 노 동	고용노동부	프랑스 2020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인력 플랫폼(안호영) 배달 플랫폼 업체 중 라이더 산업재해 최대 발생 기 업(박대수) 플랫폼노동자(임종성) 네이버가 글로벌 최고의 회사, 플랫폼의 임금체불 등 문제(노웅래) K-디지털 트레이닝(장철민)
2021.10.21.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사이즈 산업 안에서도 벌써 불공정과 플랫폼의 IP 독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주요내용 키워드 / 질의 의원 등
		문화재청	점,(유정주) OTT의 국내 진출 영향, 서울시의 플랫폼창동61 사업 (김승수) 도민석(㈜겜브릿지 대표) 연주환(넷플릭스서비스스코리아 팀장) 증인 신문
2021.10.21.	정 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P2P 플랫폼 사기(이정문)
2021.10.22.	여 성 가 족	여성가족부 등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방안 (강선우) 아이돌봄서비스(홍정민)
2021.10.26.	국 회 운 영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2021.10.26.	행 정 안 전	행정안전부	배달플랫폼 주문 장애(오영환) 서울형 교육플랫폼, 일명 서울런 구축사업(박완주) 네이버, 카카오톡,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당근마켓, 토스. 그런데 7개 플랫폼 중에서 핀테크로 분류되는 게 네카토(이영)
2021.10.27.	국 회 운 영	국가인권위원회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대한 감사 또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노동인권(장경태)

6. 대똥이 등 2021년도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국감소품 일부사례

(모니터위원 보고서 내용 중심)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당이 대장동 관련 손팻말, 마스크 문구, 근조리본 등으로 인해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대똥이’는 노이지 마케팅 처럼 국정감사 파행 초래 등으로 인해 크게 주목을 받았고, 윤준병 의원의 생물고기 실험은 동물단체의 비난성명으로 인해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1) 송석준 의원의 ‘대똥이’ 양두구육 인형

10월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의원은 양의 털을 쓴 불독이라면서 이름을 ‘대똥’이 아닌 ‘대똥’을 바꾸었다면서, 대장동의혹 사건에 대해 질의를 하였고, 이후 이 인형 때문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일시적인 파행을 겪기도 하였다.

(2) 윤준병 의원의 물고기 수조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이 제강슬래그의 유해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수조에 산 물고기를 넣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부득이 생명체로 시연하게 되었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이 실험으로 인해서 윤준병 의원은 동물보호협회로부터 비난성명을 받게 되었다.

(3) 윤준병 의원의 산업용 안전벨트

10월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윤준병 의원은 산재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에 추락사고가 대부분인데, 추락사고 대책에 생명줄·안전발판·안전망, 이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 또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안전 벨트를 가지고 나와서 들어 보였다.

(4) 임이자 의원의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나와 보이면서 의료폐기물인지 아닌지를 묻고, 양성이면 의료폐기물로 수거하고 음성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한다는 장관의 대답을 들었다. 그러면서 양성이라고 해서 회수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지 집중 조명했다.

(5) 김성원 의원의 포크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의원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면서 일반 포크를 들어 보이면서, 생분해성 포크를 가져왔는데, 그냥 일반 플라스틱 포크를 보여준다면 분리수거를 하지만 모두 소각 처리를 하고 있다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분해에 퇴비화하는 시설이 하

나도 없다며, 환경부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을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6) 강은미 의원의 화장품 케이스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은 재활용선별장을 다녀왔다면서 영상자료를 보이고, 재활용선별장 종사자들이 썩은 냄새 때문에 건강상 좀 위험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화장품케이스의 경우에는 모두 재활용하라고 돼 있다고 하니 장관은 ‘아더(other)라고 표시된 것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뜻이라서 표기체제를 바꾸려고 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7) 김성원 의원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0월 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원 의원은 전국 학교급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보이며, 가격이 1천만 원부터 해서 중국산 6만원까지 천차만별이라며, 성능평가는 모두 1등급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8) 조경태 의원의 중외역사강요

10월 5일 교육위원회의 동북아역사재단 등 국정감사에서 중국의 고등학생들이 보는 필수 교과서,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와 같은 책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역사 왜곡관련 질의를 하면서 이영호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9) 이수진 의원(비)의 컵

10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사노 등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리유저블컵(재활용컵)을 들어 보면서 스타벅스코리아가 국내에 진출한지 22년만에 처음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을 하게 만

든 이벤트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판매됐던 컵이라고 소개했고,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골병이 들어도 괜찮은지 인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10) 윤재갑 의원의 연어상자

10월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재갑 의원은 해수부가 2015년 10월부터 홈페이지에 ‘가을철 수산물, 백세 건강은 우리 수산물로’ 이런 제목으로 게시한 내용 중에서 연어가 포함되어 있다는데, 마치 꼭 우리 수산물인 것처럼 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으며, 타임지가 10대 웰빙식품으로 소개된 것은 자연산이지 양식 연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11) 황운하 의원의 스마트 태그

10월 7일 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태그라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산재를 예방하려면 필요하다며, SK 텔레콤의 중소기업체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했다.

(12) 김형동 의원의 석간신문

10월 1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은 석간신문을 들어 보이면서 화천대유와 관련된 의혹사항 즉 실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의하였다.

(13) 유기홍 의원의 한국어 교육교재

10월 1일 외교부 등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의원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이근 이사장에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교재의 내용 중 여필종부를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며 우리를 소개할 때 전달해야 할 될 가치관으로 적당한지 질타하였다.

(14) 전해숙 의원의 EV패드

10월 20일 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전해숙 의원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창작자들을 위해서 수익 배분해도 저작권을 제대로 못 지킨다면 콘텐츠를 만드는 노력이나 수익 배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면서 불법 스트리밍을 도와주는 중국산 EV패드를 들어 보이며 대책을 촉구했다.

(15) 박성중 의원의 핸드폰

10월 1일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의원은 핸드폰을 꺼내 야놀자 어플을 소개하면서 야놀자와 여기 어때라는 어플이 숙박시장의 95%를 장악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업체의 광고 문제를 제기했다.

(16) 최종윤 의원의 감기약

10월 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종윤 의원은 브레이킹 배다르는 드라마 사례를 들면서 감기약으로 필로폰 제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감기약을 어디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며 규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17) 신현영 의원의 모유

10월 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은 온라인에서 모유 한 팩이 1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모유를 들고, 이거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묻고, 식약처장은 합법과 불법을 떠나서 적절치 않다라고 대답을 하자, 모유가 식품인지 인체유래물인지 복지부와 식약처에 질의를 했는데요, ‘복지부는 영유아식이다, 그래서 식약처 소관이다’ 라고 하고. 식약처는 ‘인체유래물이므로 복지부 소관이다’ 라고 서로 부처 떠넘기기를 하고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18) 전봉민 의원의 과자와 사탕

10월 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봉민 의원은 과자와 사탕을 각각 들어 보이면서 지난해 각 지방청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875개를 무작위로 검사한 결과 128개가 표시위반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19) 정춘숙 의원의 비건 라면

10월 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이 한국비건인증원에서 인증되었다는 비건 라면을 들고 나와서 식약처에서는 이런 인증(채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비건 인증이 굉장히 인기)을 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기관인 식약처에서 인증받았다 그러면 그만큼 공신력이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라면서 효력도 없는 인증을 가지고 일부 식품업체에서는 몰랐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 이용호 의원의 물과 맥주

10월 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은 물병 4개를 가져와서 생수와 혼합물의 수질 검사 소관부처가 다른 것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혼합물에 대한 관리 철저를 주문하였고, 맥주캔을 들고 나와 비알코올과 무알코올 맥주에 대한 정책점검을 하였다.

《참고 :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조명되었던 국감 소품》

언론에서는 송석준 의원의 나훈아 '테스형' (10월 16일 정부세종청사), 윤재갑 의원의 중국산 민어(10월 8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이개호 위원장이 국물이 딱딱이라고 해서 회자됨), 문진석 의원의 판스프링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김형동 의원의 소방헬기(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류호정 의원의 배선 노동자 복장 착용(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 등이 조명되었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국감소품이 등장하였다.

(1) 박대출 의원의 항원진단키트

10월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의원은 화학연구원 에서 개발한 항체진단키트라고 하면서 기존의 항체 진단 방식이 아니고 이것은 항원 진단 방식으로 개발해 발표했다면서, 질병청이 이의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데, 과기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점검했다.

(2) 정운천 의원의 인형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의원이 강아지 대신 가져왔다면서, 반려견이 죽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이동식 장례서비스의 문제를 질문했다.

(3) 고민정 의원의 LED 마스크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의원이 미용기기인 LED마스크를 들어 보이면서, 피해사례와 안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4) 류호정 의원과 쓰레기통과 공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이 사용후 핵연료임시정시설인 맥스터(MACSTOR)를 질의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하면서 쓰레기통과 공을 들어서 설명하였다.

(5) 최중윤 의원의 껌과 패치, 아로마 파이프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중윤 의원이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을 점검하면서 효용이 없다고 판정이 난 껌과 패치를 나눠준다고 지적했고, 모방심리가 큰 청소년에게 아로마 파이프를 준다고 지적했다.

(6) 양이원영 의원의 양빈모래

10월 7일 환경노동부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모래를 들어보이면서, 명사십리에 냄새가 지독한 양빈모래를 쏟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7) 박용진 의원의 엔진오일 측정게이지

10월 8일 정부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엔진오일 측정게이지를 들고 나와서 서보신 증인(현대자동차 사장)에게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엔진오일 게이지를 바꿔 주면 어떻게 하나고 질문했다.

(8) 배현진 의원의 USB 꾸러미

10월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이 USB 꾸러미를 보이며 ‘이게 국정감사 자료라고 문체부에서 이틀 전에 주신 거’라며, 한 꾸러미로 저희 방 입구 책상에 소중히 던져 주고 가셨더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 제출 무성의를 지적했다.

(9) 이맹우 동원산업 사장의 생수통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서 이맹우 동원산업 사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맹성규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플라스틱 문제가 나와 생수통이 문제가 되자 말통으로 교체 하였다고 답변했다.

(10) 구자근 의원의 초코파이 상자, 냉면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특허청 등 국정감사에서 구자근 의원은 오리온

과 롯데의 분쟁과 냉면업계 분쟁 등 상표권 분쟁에 대해 조명하였다.

(11) 류호정 의원의 부착장치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특허청 등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은 삼성전자의 특허권 탈취문제를 조명하면서 이종민 증인(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상무)에게 부착장치 공급업체가 부착장치를 중단한 경위를 질의했다.

(12) 조명희 의원의 우라늄이 든(?) 병

10월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한전원자력연료에서 6년간에 걸쳐 가지고 42억을 들여서 만든 우라늄 정제 공정 기술이라면서, 원안위 반대로 이 경제성 높은 기술이 허가 승인이 나지 않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13) 박성민 의원의 순두부찌개 육수 베이스

10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의 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의원이 순두부찌개 육수 베이스를 들고서, 순두부찌개 육수 베이스 이게 2kg짜리인데, 이백여 개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거의 맛을 일원화하고 있고, 대기업이 이것을 독점 납품하고 있다며, 소고기국밥 혹은 튀 여기는 순두부 또 돈가스 소스 이런 것을 독점적으로 넣고 있다면서 소비자취향을 무시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다.

(14) 박성중 의원의 메모워치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계와 비슷한 심장질환자 심전도 데이터를 수시로 측정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휴이노에서 만든 메모워치를 들고 나와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점검했다.

(15) 박성중 의원의 소형 전자파 측정기

10월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자파에 대해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소형 전자파 측정기를 이렇게 한 1억 5000 들여서 개발했는데, 400개나 만들었는데 활용계획이 있는지 질문했다.

(16) 김형동 의원의 수리온 헬기모형

10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김형동 의원은 수리온 헬기모형을 가지고 나와서, 유효적절하게 제때 진화 내지 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헬기밖에 없다라는 본다면, 헬기를 구입하고 편대를 구성하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 허종식 위원의 마스크

10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허종식 의원은 마스크를 들어 보이면서 다양한 활동 중에서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지 마스크의 용도를 점검했다.

(18) 김성주 의원의 식육억제제

10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직접 당근마켓(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구입했다면서, 인터넷 상에서 불법 의약품 매매 실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19) 서정숙 의원의 에페드린 의약품 상자

10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서정숙 의원은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전문의약품 에페드린이라며, 이 에페드린은 함부로 투약했을 경우에 부정맥으로 급사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약물인데도 인터넷 상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며 바코드도 제거되어 있는데 관심을 촉구했다.

(20) 김성주 의원의 효모정

10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정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이 약 300여 개나 달한다며, 앞으로 이런 식품들의 허위·과대 광고 여부를 파악하고 일반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고시 개정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21) 이상직 의원의 전자호구

10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서 이상직 의원은 전자호구를 들고 나와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살짝 터치만 해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자호구를 과학적이고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전자호구 장비로 경기 규칙을 고안했다며, 국제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22) 심상정 의원의 시험체

10월 16일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에서 불 잘타는 자재를 준불연재로 승인해주고 있다면서, 그 이유를 시험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험체의 한 면을 알루미늄 또는 콘크리트 또는 난연액을 도포해 가지고 이 한 면에다가 직접 불도 아니고 복사열 700도를 쬐어서 10분을 버티면 준불연재로 인정을 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23) 박찬대 의원의 마스크

10월 19일 교육위원회의 대구 광역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보이며 납품 마스크의 스트랩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부에 특정감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24) 조경태 의원의 마스크

10월 19일 교육위원회의 대구 광역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보이며, 디메틸포름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전수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 박주민 의원의 검찰연감

10월 22일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에서 의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면서 검찰연감을 보이면서, 검찰총장이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먼저 나오고 있다고 하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예들려 말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책자를 들고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주로 의원실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이었고,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의 정책자료집을 소개할 때에도 책자를 들고 소개하였음)

(26) 윤영덕 의원의 상조물품

10월 22일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서 운영덕 의원은 상조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서울대의 법인직원과 자체 직원의 경조사비와 경조물품까지 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7) 박성중 의원의 AR 플레이어

10월 22일 과방위의 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박성중 의원은 AR 플레이어를 들고 나와서 시연을 하면서 VR·AR 콘텐츠사업을 조명하면서 관련 국내 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28) 이종성 의원의 10월 22일자 서울신문

10월 22일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10월 20일자 서울신문(발달장애인 집콕 즐긴다던 2018년 청와대 간담회는 쇼였다)을 들어 보이면서 발달장애인 대책을 주문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외국 신문 등이 등장하였음)

(29) 허은아 의원의 TLD(피폭량 측정 장치)

10월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피폭량측정 장치를 가지고 나와서, 원안위 위원장에게 현행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부처와 협력하여 방사능 노출 종사자에 대한 피폭량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30) 윤미향 의원의 곰인형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 종합감사에서 윤미향 의원은 반달가슴곰을 상징화해서 지리산에는 이렇게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보호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며, 환경부에서 반달가슴곰의 복원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31) 이수진 의원(비례)의 도시락 빈공기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 종합감사에서 도시락 빈공기를 가지고 나와서, 도시락 하나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열두 개나 나온다면, 코로나 19 시대에 폭증하고 있는 일회용품 대책을 촉구했다.

(32) 김웅 의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 종합감사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들어 보이면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구분할 수 있는 지 질문하면서, PLA(Poly Lactic Acid)의 처리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하였다.

(33) 김웅 의원의 ‘새를 구해요’ 배지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 종합감사에서 김웅 의원이 ‘새를 구해요’ 배지와 함께 조류충돌방지테이브 더미 등을 보이면서 버드 스트라이킹을 막는 방법으로 사용해달라고 주문했다.

(34) 임이자 의원의 자동차방향제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 종합감사에서 임이자 의원은 자동차 방향제를 보이면서 1군 발암물질이 초과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35) 정청래 의원의 증인 ‘자필 편지’

10월 26일 교육위의 종합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은 단국대 장충식 이사장의 자필편지를 들어 보이면서, 단국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가 필요해 보이고, 충북대 같은 경우는 특별승진 건에 대해서는 사안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6) 정경희 의원의 교과서

10월 26일 교육의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의원은 12개 시도교육감이 채택한 인정교과서라면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들어 보이면서, 학교 현장에서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37) 김민철 의원의 토양오염물질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종합감사에서 김민철 의원은 미국 기지(의정부 캠프 시어즈)에서 퍼온 토양오염물질을 제시하면서, 국가예산 낭비를 하였는지, 부실관리를 하였다고 질타하였다.

(38) 전용기 의원의 태극기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전용기 의원이 태극기를 흔들며 보이면서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이 이토 히로부미의 친필로 확인되었다며, 정초석이 있는 이등박문의 망령이 살아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선조 6000여 명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리고 일제 헌병의 군홧발에 짓밟혀서 2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온 3·1 운동 기념터(불과 5미터 되지 않는 곳)라고 강조했다.

(39) 강은미 의원의 청바지

10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은 청바지를 들고 나와서 칠곡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입사후 입었던 청바지라면서, 과로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40) 임이자 의원의 방염마스크

10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임이자 의원은 이천의 38명 사망자 중에서 22명이 유독가스로 질식사했다면서, 가벼운 포켓용 방염마스크를 소지하도록 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지 않는가라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책제안을 하였다.

(41) 정진석 의원의 항공 점퍼

10월 8일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북한에서 만든 항공 점퍼라며, 평양에서 만들어졌는데, 정부공공자금이 지원되었다고 지적했다.

(42) 고민정 의원의 자율주행 로봇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의원이 미래산업과 관련된 질의하면서 자율주행로봇을 시연하였다.

7. 주목을 받은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사례

(1)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

지난 6월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한 광주 학동 건물붕괴사고와 관련해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한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10월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이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 권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당 공사는 무리한 철거 방식, 불법 재하도급 등이 낳은 인재로 밝혀졌다. 사조위는 HDC현산이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 일정 부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권 대표를 비롯한 HDC현산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대표는 “불미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 부상당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해 일상이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권 대표는 “철거현장 6곳을 중단하고 외부 전문가에 점검을 의뢰했고, 불법 재하도급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하도급이 일어나는 부분을 막고자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했다.

(2)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불매운동이나 '남양스럽다'는 비아냥 등에도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홍 회장은 의원 질의에 연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와 “부끄럽다” “아니다”는 대답을 되풀이했다. 의원들이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은 “잘 보이지 않는다”했고, 질의에 대해서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용호 의원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느냐?” 며 “참 답답하네” 라고 질책받기도 했다.

(3)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기관증인인 박기영 2차관이 과거 민간기업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박 차관이 지난 2015년 2월 4일 SK E&S 관계자들과 강남의 한 전통 요정을 방문해 350만원 가량의 식사 대접과 상품권 1장 등 총 45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식당은) 1인당 식사비가 46만~50만원이고, 접객원들과 ‘2차’가 가능했던 요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차관이 당시 에너지수요관리정책 단장이었고, SK E&S가 위례 열병합사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 11월 14일 오전 위례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용량 증설 반대 청원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같은 날 오후 산업부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공사계획’을 승인했다며 “(박 차관이) SK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다만 박 차관을 비롯해 증인으로 참석한 유정주 SK E&S 대표, 이완재 SKC 사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 차관은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는 여러 번 있었지만 달리 특별한 경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며 “업무적인 이야기는 안하고 통상적인 지역난방 사업들, 업계 현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고 해명했다.

(4) 김범수 카카오 의장

2021년 국회 국정감사는 ‘카카오’ 국감이라고 명명되기도 했다. 김범수 의장이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과기정보통신위, 정무위원회, 산자중기위까지 3번씩이나 직접 출석하였고, 카카오 계열사 대표가 참석한 상임위까지 합치면

6개가 넘었다. 김 의장이 “저 자신도 모르게, 또 카카오의 공동체 CEO들도 성장에 취해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카카오가 지향해 나갈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영역을 정확히 구분해서 정리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신속하게 일정, 계획, 실천방안, 상생 이야기를 공개해서 말씀드리겠다.” 고 카카오의 ‘쇄신’을 약속한 만큼 골목상권을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사업은 빠른 정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견되었다.

(5) 배보찬 야놀자 대표

숙박·여행 플랫폼 업체 야놀자가 과도한 사업 확장과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및 광고비 논란 등과 관련해 정무위원회의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못매를 맞았다. 과방위 출석을 위해서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에서 이석을 허가하기도 하였다. 물론 증인신문을 다 마친 뒤였다.

국감에서는 야놀자가 입점 숙박업주를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달았다.

배 대표는 “계약서상 광고비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최근 쿠폰과 연관된 광고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다” 며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 제휴 점주의 의견을 듣고 상품 구성에 반영하고, 시장 가격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 고 했다.

야놀자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업자들이 그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주지만, 여러 가지 불공정한 이슈도 만들어내고 있다” 며 “공정거래 입장에서 균형감 있게 살피면서 불공정한 이슈는 엄정하게 제지하겠다” 고 했다.

(6) 김남혁 이다영 전승환 대학생(총학회장)

10월 21일 교육위 종합감사 국정감사에서 대학학력진단평가 관련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학력진단평가의 문제점과 지방대학교 소멸위기 등에 대한 실상을 잘 알려 주었다.

(7) 김두경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 회장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의 2일차 국정감사에서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원인불상으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증언을 하였다. 김두경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모임 회장도 함께 했다. 김 회장은 정춘숙 의원의 질의(나온 이유) 중에 “제가 여기에 참석한 이유는 30만 명이 넘는 이상반응 피해자와 그 피해자들의 고통과 울분을 지금 여기서 다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대통령님께서 전 국민 앞에 약속하셨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게끔 하겠다고 약속하신 신년사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믿고 동참했던 백신 접종 피해자와 사망자 가족들이 한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답변했다.

(8)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에너지전환정책, 2050 탄소 넷제로, 전기요금 인상 등과 관련하여 조명을 받았으며, 10월 20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하였다.

(9)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총괄(GIO)

네이버의 창업주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총괄(GIO)이 골목상권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 GIO는 2018년 이후 3년 만에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

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상공인 협력문제 관련, 저희는 여러 형태 통해서 노력해왔고 여전히 미진한 점 많고 부족한점 많은 듯하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 고 말했다.

“새로운 먹거리 분야는,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게 사회적 사명이라 생각한다”면서 “해외에서 메타버스 제페토나 5G로봇 등에 투자하고 있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많고, 앞으로 더 정진하겠다” 고 말했다.

(10) 앤토니 노리스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유) 대표이사

10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한국맥도날드 근로노동 환경을 전면 검토하고 개선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나갔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맥도날드의 '환복시간 임금 미지급' 등을 포함해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패스트푸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증인신청으로 '스티커같이' 의혹, '일방적인 노동자 근로시간 변경', '환복시간 임금 미지급',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등에 대해 지적받고 개선 요구를 받았다.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은 증인 현황》

2020년도 국정감사에도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위원회 관련 교수나, 대기업체 사장 등 임원, 기관장 등 중책을 맡고 있는 분들 외에도 감사장에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하였다.

(1) 김경을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을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2020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멤버로서의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활동에 대해 답변을 하였다.

김 회계사는 참고인 목적과는 상관없지만, 아시아나항공과 이스타항공 해고자분들의 복직과 체불임금 해결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2)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대표(카이스트 원자력 전공 박사과정)

카이스트 등 전국 15개 대학의 원자력공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녹색원자력학생연대의 조재완 학생연대 대표가 2020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참석하여, 환경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탈원전 정책 철폐를 주장했다.

(3) 조상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에서 2018수제186호 산업부 수사 의뢰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제12부 조상원 부장검사가 2020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수사지연에 대한 이수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고 “제가 향후에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4) 김재병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재병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10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여 오랫동안 새만금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 답변을 하였고, 생태계 복원, 수산업·수산자원의 회복, 해양관광 활성화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해수 유통량을 얼마큼 더 확대해 나가야 될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청한 안호영 의원의 질의후에 추가 질의가 있다고 하여 오래 기다렸는데, 윤준병 의원이 짧게 질의하자 ‘그것을 끝인가요?’ 반문하기도 하였다.

(5) 김태완 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

김태완 택배연대노동조합위원장은 10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택배노동자의 작업 환경에 대해 답변을 하였고, 특히 택배 분류 문제를 강조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등장했다.

(6) Correia Cabral Apolinario 동티모르 이주노동자

동티모르에서 E-9-4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인 아폴리(Correia Cabral Apolinario)씨가 10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군산 개야도의 이주노동자들의 근로계약 등 근로환경, 근로실태 등에 대해 증언하였다.

(7) 김기영 지부장과 김두영 부지부장(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김두영, 김기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임원들은 10월 26일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양이원영 의원, 이수진(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드라마 방송스태프들의 근로환경 실태, 처우 등과 방송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답변하였다. 같은 날 이미영 전국요양 서비스 노동조합 인천지부장, 김희경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박창준 손해사정사, 송경훈 보험설계사, 김영미 캐디마스터 등도 각 지역의 근로환경실태를 증언하였다.

(8) 김진숙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위원장)

김진숙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는 10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이사과 함께, 한진중공업 상황과 노사 문제, 노노갈등 실상에 답변을 하였다.

(9)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인수합병 관련 여러 가지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강신봉 딜리버리히어(요기오)로 대표도 동시에 답변을 하였다.

(10)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대변인

김도환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대변인은 10월 8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전국에 있는 3000개의 매장 또 수만 명의 자영업자들은 다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였다.

(11)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10월 7일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정부의 중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관련 현장의 실상을 전달하였다.

(12) 박민상 부대장 (육군 제1717부대 부대장, 육군대령)

교육위원회에 군복을 입은 군인이 등장하여 관심을 받았다. 박민상 대령은 10월 15일 교육위원회의 서울, 경기, 인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군복으로 입고 참고인으로 등장하였는데, 항공부대 근처 학교의 소음 문제에 대해 학교와 부대의 협력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였다.

(13) 김서정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회장

김서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회장은 10월 22일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학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형 성비위 문제에 대한 권인숙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였다.

(14) 류조은 부산국제고등학교 학생

유니세프 아동권리협약기구에 가서 우리나라 교육문제를 알렸던 류조은 부산국제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0월 26일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왔다.

류 학생은 근로기준법에 주당 최장 근로가능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아동이 하루에 막 10시간, 15시간씩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절대 당연시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서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15) 이재환 (주)원스토어 대표이사

2021년 연말까지 거래액 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 50%의 수수료를 감면하겠다고 밝힌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이사는 10월 8일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왔다. 이 대표이사는 국내 앱 마켓 입장을 밝혔다.

(16) 이영희 미래대안행동여성위원장

작가 출신의 이영희 미래대안행동 여성위원장은 10월 8일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권영세 의원의 청소년사행성도박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였다. 한 실업계 고등학생이 한판에 500만 원을 거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17) 강화현 새마을금고 은행원

화염에 휩싸인 분들을 구하는 데 항상 앞장섰던 여성 소방관 강한열의 언니인 강화현 은행원은 10월 12일 인사혁신처와 공무원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참고인으로 나와서 순직공무원의 재해보상 그리고 공무원 유족연금 관련한 수급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답변을 하여 언론에 크게 조명을 받기도 하였다.

(18) 김영국 인천강화소방서 소방장

강철 소방관으로 언론에 알려진 김영국 소방장이 10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현장에서 말 못 할 고충을 겪고 있는 소방관들의 현장이야기와 공상추정법 등 대책에 대해 답변하였다.

(19) 윤태균 이장(전 아산시 이·통장 연합회장)

윤태균 이장은 10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통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이명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상위법인 법률에 의해서 처우에 관한 것을 규정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0) 금호연 유도 국가대표 감독

금호연 유도 국가대표 감독은 10월 15일 대한체육회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일명 ‘팔걸이 원칙’ 이라고 하는 최대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김승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21) 송종만 농업인

송종만 농업인은 10월 7일 농림위의 농림축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만희 의원의 농업재해보험 관련 정책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였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이 ‘우리 대한민국 먹거리를 (위한) 우리 농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데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 고 밝히기도 하였다.

(22) 백은기 어민

위도에서 10대에 걸쳐서 살고 있는 백은기 어민은 10월 8일 해양수산부 등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영광 원전관련 위도 앞바다와 부안 앞바다의 피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의 질의에 답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은 몰라도 장관하고 한수원 사장은 와서 고개 숙여 우리 위도 주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고 울분을 토했다.

8. 2021년도 국정감사장 앞 시위 (언론보도 중심)

(1)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의 국정감사 중단 시위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 대표단은 18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이 설치된 도청 신관 현관에서 정략적인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회의 경기도 행정감사는 행정안전위원회 18일(월),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수)에 진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 출입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정략적인 국정감사 중단하라”, “정쟁중심 국

정감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2) 부산시공무원노조의 침묵시위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10월 15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기관장 인사 및 업무보고를 하기 전,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 밖에 부산시청 공무원 노조가 침묵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동료의원들도 보았을 것인데, 국회가 지방자치 단체의 국가 사무 뿐 아니라 여러 행정 사무 감사를 하는 것은 맞다”며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재호 감사반장 및 간사들이 공무원 노조원을 만나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국회에서 서울로 불러서 했는데, 마지막날 부산과 전남은 굳이 지방에 내려가서 국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재호(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 감사반장은 “작년에도 코로나 19로 인해서 현장 방문을 하지 못했고, 올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못했는데, 마지막날 광역자치단체인 부산과 전남의 경우 현장 방문을 동의한 부분이 있다”며 “간사들과 논의를 통해서 각 의원들에 통보를 했는데, 설명이 전해지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3) 류호정 의원의 정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시위

10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의혹’ 피켓 시위를 하자 이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수령’ 관련 피켓을 붙여 감사가 정회됐다. 이에 류호정 정

의당 의원이 ‘일합시다’ 를 적어 즉석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4) 국회 앞 끝나지 않은 기본역량진단 관련 시위

10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사가 있는 날 국회 정문 앞은 위원회별 이해관계가 걸린 각종 단체의 1인 시위가 이어졌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이슈가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대학평가와 관련한 교육부 성토 등 해당 대학 학생회의 릴레이 시위도 이어졌다.

일반대, 교육대, 전문대 등 전국대학 총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도 이 날 국회 앞에서 기본역량진단 개선을 위한 대학생 긴급서명운동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진단평가 개선과 대선 후보들의 대학지원정책 개편을 촉구했다.

(5) 마을예산 삭감 서울시청 앞 시위

서울마을자치센터연합은 10월 19일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근거없는 시민단체 폄훼 발언과 2022년 예산 삭감 방침 등으로 시민의 시정참여를 부정하고 있다” 면서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 서울시장이 이전 시장 시절 시민단체 위탁 사업과 민관협치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형 다단계’, ‘시민단체 전용ATM’ 등의 원색적인 표현으로 시민사회를 비난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사업 내용이나 액수 등은 공개한 바 없다” 고 지적했다.

◀참고 : 2020년도 국정감사장 시위▶

코로나 19로 대규모 집회시위가 어려워진 가운데,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회감사장 앞에서의 1인 시위나 기자회견 형식의 시위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1) 교육위 1반 충남대 국정감사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반대 삭발 시위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 조합원들이 10월 1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릴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였다.

(2) 교육위 2반 경북대 국정감사에서의 전국 대학원생 노조와 비정규 교수 노조의 시위

10월 19일 경북대와 경북대 병원, 대구시·경북도 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 앞에서 잇따라 시위를 벌였다.

국감장인 경북대 글로벌 플라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말 발생한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경북대가 미지급 치료비 지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예산까지 확정했다고 하지만, 관련 규정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는데다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에 대한 지급 계획은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가 대학 실험실에 대한 특단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고 발생시 피해 학생이 안심하고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학생 연구원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3) 교육위 2반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영남대 교수회의 시위

영남대 교수회는 최근 벌어진 영남대 총장 선출 규정안 부결과 관련해 이사회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교수회는 박근혜 재단 퇴진과 비선 실세 개입 의혹, 영남대 새마을 박정희 사업 등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요구하는 피켓 등을 건물 주변에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4) 교육위 2반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대구참여연대 등의 시위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센터, 김동식 대구시의원 등이 10월 19일 국감장 앞에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유해 물질이 검출된 나노필터 마스크 폐기 합의를 거부하고 몇 달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부모들과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5) 기재위 국정감사에서의 한국노총 공무원 차별해소 촉구 1인 시위

10월 7일 오전, 한국노총이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무원 차별해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황병관)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은 오전 8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무원 차별해소와 공무원 문제 국정감사 의제 반영을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날 1인 시위는 공공연맹과 공공노련의 사무처 간부와 회원조합 간부가 참여했다. 한국노총이 준비한 피켓에는 공무원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 반영 및 공무원에게 보편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6) 국정감사장 입구에서 '교육공공성 사수' 촉구

전국대학노동조합 국공립대본부 조합원들이 10월 1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릴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였다.

(7) 국방부 앞 평통사의 전시전작권 환수 피켓 시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일인 7일 오전 국방위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평통사회원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였다.

(8) 정부 자치경찰 법안 철회" 경기남부경찰 직장협 1인 시위

하재구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 대표가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단(직협회장단)은 19일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 맞춰 도내 경찰관서 직협 대표들이 정부의 자치경찰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취지의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직협회장단 하재구 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법안은 국민과 경찰 모두가 납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 준비하고 있던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폐기하고 만들어진 졸속 법안“이라며 1인 시위에 참여한 배경을 밝혔다.

(9) 'EBS 보니하니' 최영수, 1인 시위 100일째 억울 시위

개그맨 최영수가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5월 25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EBS 사옥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했던 최영수는 EBS 국정 감사가 열리는 국회를 찾았다. 이날은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다. 최영수는 지난해 EBS 프로그램 '생방송 특! 특! 보니하니' 라이브 방송 도중 MC인 버스터즈 채연을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10) 부산시 국정감사장 밖에서 가덕신공항과 관련해 펼쳐진 시위

가덕신공항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이지후 동남권관문공항추진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민의를 반영해야 할 국회의원이 25년 지역 숙원의 가덕신공항을 자발적으로 외친 것에 대해 조롱으로 치부한다면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 대표는 “시민들이 불편하게 했다면 그것이 지역 현안인지 인식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며 “이 부분을 질의하고 물어보는 게 국회의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가 조롱을 당했다”고 감사위원의 발언을 매도하기도 하였다.

(11) 광주시립극단 갑질 피해 배우들 광주·서울 동시 ‘릴레이 시위’

광주 시립극단 내에서 발생한 갑질 사태를 두고 예술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가 10월 15일 광주와 서울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대책위는 시립극단 갑질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대책 마련도 이루어지지 않자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주시청과 서울 국회의사당,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릴레이 시위를 동시 진행했다. 이날 시위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됐다.

(12)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의 운영위제도 개선 촉구 시위

10월 23일 노조는 오전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열린 국회의사당 앞에서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전개했다. 집회에서 노조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의해 불거진 박덕흠(무소속 국회의원) 전문건설협회장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 겸임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9. 2021년도 국정감사장의 ‘웃음소리’ 분석

대장동 게이트 의혹관련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진 2021년도 국

정감사에서 웃음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다. 많은 경우에는 질의 시간과 연관된 웃음이었다.

10월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부 종합감사에서 박성중 의원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치료할 수 있는 ‘디지털치료제’ 관련 영상을 소개하다가, 조승래 의원이 연습을 하셔야 되겠네 하자, 무거웠던 국정감사장에 웃음이 터졌다.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채익 위원장이 국감질의를 한 전용기 의원에 대해 수고를 하였다고 하지 않고 이병훈 위원 수고하셨다고 하자, 정정을 하면서 윤호중 대표님과 원내수석이 오는 바람에 긴장해서 말이 헛나왔다고 하자, 웃음이 터지기도 하였다.

10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간사가 질의를 길게 하여 마이크가 커진 상태에서도 마이크를 사용한 의원들처럼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 중단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강기윤 위원님께서 마이크를 켜올 때나 껐을 때나 똑같이 전달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께서 굉장히 부러우실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고 말하자 웃음이 터졌다.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웃음이 터진 일부 사례》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웃음 터진 상황
2021.10.01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최춘식 의원이 전해철 장관에게 “책임 지지 않을 개인적인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고 말하자
2021.10.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윤영찬 의원이 하루 사시면서 알고리즘하고 얼마나 부딪히십니까? 얼마나 접하고 사십니까라고 질의하지 임혜숙 장관이 저는 전공이 알고리즘이라 늘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자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자신의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상영하자 전혜숙 의원이 늦은 시간에 과방위가 계속되자 의원들에게 다하실 거냐고 묻자 5선의 주호영 위원이 시간이 남아 있는데 하기는 다해야지요 하자 박성중 간사가 위원장 대리를 하고 있을 때 조승래 의원 질의에 변재일 의원이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웃음 터진 상황
			시간엄수라고 하자, 박성중 위원장대리가 간사끼리 봐줘야 하는 것아닙니까라고 하자.
2021.10.01.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유동수 의원이 '유동규' 라는 말말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된다고 하자, 윤재옥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이름을 말할 때 정확하게 호칭을 하라고 하자 민형배 의원이 특검하자는 쪽에 범인 있다고 말하자
2021.10.01.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	강득구 의원이 위원장에게 자신에게는 존경하는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다고 하자 위원장이 웃음(이후에 '존경하는' 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강득구 의원을 무색케 함)
2021.10.05.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홍성국 의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신문하면서 개인적으로 미안하다고 하자,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할 것 없다며 자신도 남양홍씨예요라고 하자
2021.10.05.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임종성 의원이 5년동안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답변이라고 하자 한정애 장관이 5년동안 질의를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답변을 하자
2021.10.0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는 시작도 하지 않고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진행발언도 교섭단체별로 똑같은 수를 요구하자 심상정의원은 여러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심상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하자
2021.10.05.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용혜인 의원이 권순일 대법관처럼 화천 대유 같은 곳에 고문으로 가실 계획은 없으시지요?라고 부총리에게 묻자
2021.10.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등	이병훈 의원이 1분 추가신청을 하면서 원래 추가시간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라고 말하자
2021.10.05.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박범계 장관이 논리비약이라고 말하자, 권성동 의원이 특검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답변을 하라고 하자
2021.10.06.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김성주 의원이 시간이 다되어 마이크가 중단되자 3차 질의에서 보완하겠다고 하자 강기윤 간사가 1분 더 줄게 마무리를 하라고 하자
2021.10.06.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김성원 위원이 박대출 위원장에게 시간이 짜다고 하자 지난해 위원장이었던 송옥주 의원이 자신이 위원장을 잘 했죠라고 하자 강은미 의원이 시간을 더 달라고 해 위원장이 허락하자 임종성위원이 땀땀하게 요구해야 하는 구먼이라고 넋두리를 하자 이수진 위원에게 질의시간을 더 주자 임이자 간사가 우리 위원장이라고 뽑아 봤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웃음 터진 상황
			더니 라고 꾸밈하자
2021.10.06.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강민국 위원이 모든 의원실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하자 윤재옥 위원장이 그것은 제 권한이라고 하자
2021.10.0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등	김승원 의원이 (예술의전당) 2021년 9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공공기관 브랜드 평판 조사를 실시했는데 2위를 하셨다고요?라고 묻자 몰랐다는 답변을 받아 그러세요라고 하자
2021.10.08.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등	김남국 의원 질의 순서 앞에서 정회를 하면서 박주민 위원장 대리가 김남국 의원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방역지침때문이라고 하자 윤한홍 의원이 (대전고법원장에게) 특정 단체에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앞으로 대법관하기는 어렵다고 하자
2021.10.08.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	질의시간을 안 지키는 대표적인 위원회가 된 국토교통위에서 김희국 의원이 정시각에 끝나자 위원장이 김희국 위원님, 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맞춰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하자 김교흥 의원이 피감기관이 검토하겠다고 하자,검토는 내가 수없는 동안의 경험이 있는데 라고 하자
2021.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홍익표 위원의 질의 중에서 통신상태가 나빠 멈추자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 시간 멈춰 주세요. 답변하기 싫으니깐 나간 건가요?라고 하자 (홍익표 의원은 피감기관이 듣지 못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함)
2021.10.08.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등	권영세 의원이 피감기관에게 괜찮은지 묻자 괜찮다고 답변을 하니 괜찮으면 안 된다고 하자
2021.10.08.	행정안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형동 위원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위치를 묻자 퇴장을 했다는 답변을 받아 그냥 어디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봤습니다.라고 하자
2021.10.08.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강기윤 간사의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이의가 들어오자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김성주 의원이 밀키트 성품을 질의하면서 김민석 위원장이 자가격리중 밀 키트가 좋았다고 했다면서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고 한 것이라고 하자
2021.10.08.	국방위원회	육군제2작전사령부	설훈 의원이 1차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더한다고 하자 조명희 의원이 다선의원의 기득권이라고 핀잔을 하자
2021.10.12.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충청남도	이해식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위원장이 좋은 질의였는데 질의시간과 답변시간 포함해서 15분정도 더 질의를 한 것 같다고 하자
2021.10.12.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아니, 그걸 저한테 얘기하면 어떡하세요. 하고 유창현 의원이 항의하자 유동수 의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웃음 터진 상황
			원이 피감기관쪽에 했다고 변명하자
2021.10.13.	환경노동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박대수 의원이 1분 30초 시간을 저축해 왔다고 하자, 위원장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1분 15초인 것 같은데 라고 하자
2021.10.13.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운천 의원이 성과급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현재 사장이 아닌 전사장이 성과급을 먹어버렸지 하자
2021.10.13.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허종식 의원이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연금고갈로 인해서 연금수급을 받다가 못받을 것이라고 하자 (이후 세대갈등이라면서 논란이 빚어짐)
2021.10.14.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등	김종민 위원이 의원의 질의 앞서서 정회를 한다고 하여 편파적인 진행이라고 항의하자
2021.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최형두 의원이 오징어게임질의를 하면서 오징어게임 웃을 입은 임오경 의원과 자신이 통한다고 하자
2021.10.15.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김영진 위원장 대리가 속시원하게 말하라고 한국은행장에게 주문하면서 요즘은 속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뜨는 시대라고 하자
2021.10.15.	정무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윤주경 의원이 (산업은행장에게) 질의하면서 시간이 모자라자 크게 3분을 주세요라고 하자
2021.10.15.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남도경찰청	서영교 위원장이 김용판 의원의 질의를 빠뜨리고 김민철 의원에게 질의를 하라고 하였다가 무안해 하면서 두분을 놀래켰다고 하자
2021.10.15.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김종민 의원이 (질의시간이 끝나) 권성동 의원이 빨리하고 밥먹으로 가야하는데 라고 하자 법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하자
2021.10.15.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기운 위원장 대리가 김용익 이사장이 만장일치로 재임하도록 도와주자하고 하자
2021.10.18.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윤재옥 위원장이 유동수 의원이 질의중에 위원장을 쳐다보자, 얼굴만 봐도 더 줘야 할 듯 하다고 하자.
2021.10.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정청래 의원이 옛 학력공사에 ‘더 팬 이즈 마이터 덴 더 소드(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이런 말이 있다며, 언중위원장에게 물으면서 국어원장님께는 안 묻겠다고 하자
2021.10.19.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서영석 의원이 레베카씨의 서한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하자 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아도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고맙다고 하자
2021.10.2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기상청	임종성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환경부장관에게 얼굴이 굳으셨나요? 하고 묻자 장철민 의원이 한정애 장관이 너무 길게 답변을 하여 질의시간이 없다고 하자 임이자 의원이 2040계획이 어렵다고 하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웃음 터진 상황
			자 송옥주 위원이 대통령이나 시켜줘요 그러면 만들면 되지 하자
2021.10.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성중 의원의 디지털치료제 시연시
2021.10.20.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문정복 의원이 실명거론한 것에 대해 심상정 의원에게 사과를 하자 박성민 의원이 자신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자
2021.10.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누리호 발사시에 TV시청을 하다가 끝까지 봐야할지 의사진행발언 중에
2021.10.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영식 의원이 첫질의를 하면서 그냥해도 되나요 묻자 변재일 의원이 업무보고를 받고 하려고 하자
2021.10.21.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안규백 의원이 해군제독들이 퇴청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미 안내를 했다고 하자 성일종 간사가 양당간사를 뭘로 보느냐고 하자
2021.10.21.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등 종합감사	김종민 의원이 내 앞에서만 정회한다고 푸념을 하자
2021.10.26.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등	유영민 비서실장이 손도보고 달도 본다고 답변하자
2021.10.27.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임이자 의원이 누가 질의중에 떠느냐고 하다가 김기현 대표가 사과를 하자 대표님이셨어요하며 무안해 하자
2021.10.27.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등	홍기원 의원이 의원 좌석 배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카메라 사각지대라고 하자

< 참고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에서 웃음이 터진 상황 >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비고
10. 7.	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임오경 의원이 성경환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대한민국 최고의 유명 아나운서 출신인 만큼 다시 한번 직접 앵커로 나서시면 시청률이 급 오를 것 같다고 하여	
10. 7.	행정안전위의 행안부 국정감사	서영교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안받겠다고 하면서 ‘내일 추가질의’ 를 하라고 하자	
10. 7.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전재수 의원이 추가질의를 안하는 조건으로 30초를 요구하자, 김병욱 위원장대리가 추가질의를 안한다고 확인하면서 1분을 주자	
10.7.	외교통일위의 외교통일부 국정감사	이태규 의원이 강경화 장관의 남편 이일병 교수의 미국 출국에 대해 말리지 않았느냐고 하자, 강경화 장관이 “이건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알려질 사람이 아니고요.” 하자	
10.7.	과방위의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의원이 질의의원은 마스크를 벗고 하자고 하여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자, 입이 트셨냐고 반문하자	
10.7.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송옥주 위원장이 임이자 간사 질의 순서에 이낙연 이라고 잘못 호명하자.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비고
	환경노동위의 환경 부 국정감사	김재병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오래 기다렸는데 윤준병 의원이 한 개 질의를 하고 말자 ‘그게 끝나;고 하자.	
10.7.	기재위의 기획재정 부 국정감사	장혜영 의원이 연구용역을 해달라고 하자 부총리가 국민적 공감대라면서 머뭇거리자 연구용역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나며 ‘그렇게 하겠다고 해주세요’ 하자	
10.7.	법사위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	장제원 의원의 질의시 PPT작동이 안되자 야당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하자	
	법사위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	박범계 의원이 질의시간 추가로 1년을 더 달라고 하자, 이어 해야 할 박주민 의원이 1년 뒤에 질의를 할 뻔 했다고 하자 연거푸 웃음이 터짐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에게 김도읍 의원에게 질의시간을 후하게 주면서 자신에게 박하게 준다고 하자	
10. 7	보건복지위의 보건 복지부 국정감사	김민석 의원이 서정숙 의원이 마이크가 커진 상태에서 계속 질의를 하는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잘 알아 들어서 계속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하자.	
10.7	교육위의 교육부 국정감사	김철민 의원이 위원장이 석식 정회를 위해 질의 끝 순서를 정하자 오전과 같이 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10.8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의 해양수산 부, 해경 국정감사	어기구 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여야간의 해경공무원 수색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면 2분을 빼달라고 하자	
10.8	법사위의 헌법재판 소 국정감사	김종민 의원이 특정 모임(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결사의 자유라며, 차별이라고 말하자.	
10.8	기획재정위의 기재 부 국정감사	추경호 의원이 다른 곳에서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화상 증인들을 사무실에 가도록 이석조치해달라고 하여 논의를 하였으나, 김태흠 의원이 증인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맞다고 하자, 기동민 의원이 기관증인 국장들이 서류를 챙겼다가 맥이 빠졌을 것 같다고 말하자.	
10.8	정무위의 공정거래 위 국정감사	홍성국 의원이 질의 순서가 늦어서 앞에서 다 해서 라고 푸념하자	
	정무위의 공정거래 위 국정감사	윤관석 위원장이 증인신문을 한 이정문 위원을 이정문 증인이라고 호칭하자	
10.8	보건복지위의 보건 복지부 국정감사	강기윤 의원이 영상국감이라 떨어져 있으니 장관이 보고 싶다고 하자	
	보건복지위의 보건 복지부 국정감사	김성주 의원질의시에 정면을 바라봐 달라고 하자 박능후 의원이 스크린을 보면서 답변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자	
10. 8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	권영세 의원이 1분 더 쓰자고 하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마저 당겨서 쓰라고 하자 사채 쓰는 것 같다고 푸념을 하자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	이은주 의원이 1분을 더 달라고 하니, 서영교 위원장이 소수정당 배려 차원에서 그러라고 하자	
10. 8.	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	박완수 의원이 경찰차벽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마지막에 10. 9. 차벽을 설치할 것인지 재차 확인하자	
10. 8	산업위의 중소벤처	황운하 의원이 대전에서 세종청사까지 30분밖에 걸리지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비고
	기업부 국정감사	않는다고 하자, 박영선 장관이 40분이라고 반박하자	
10.8.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박성중 간사가 1분 추가질의를 요청하는데, 위원장이 하지마요라고 하자 의원들끼리 연이어 논란이 벌어져 사과 촉구까지 나오자 연거푸 웃음바다가 됨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박대출 의원이 방통위 직원들 추석에 고향가지 말라고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강경화 장관 남편 사례를 말하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그분 외국 가도 된다고 말한 한 적이 없다고 하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정희용 의원의 추가질의 시에 이원욱 위원장이 야당의원에 한해 1분사용한 것은 없던 걸로 한다고 1분를 폐지하자	
10.8	국토교통위의 도로공사 국정감사	김은혜 의원이 질의시간이 다 되어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자 진선미 위원장이 답변을 하라고 해 김 의원이 복발을 거라고 하자	
10.12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김종민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박범계 의원이 아까 했다고 지적하니 한번 했나 실토하자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윤호중 위원장이 여야 간사가 재보충질의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했다가 신청했다고 하자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장제원 의원이 재재보충질의를 하지않았다며,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하자	
10.12	과방위의 원자력위원회 국정감사	전혜숙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자료제출에 대해 성의없이 답변을 했다고 문책을 요구하니, 이원욱 위원장이 여야당 간사간에 문책에 대해 논의하라고 하자.	
	과방위의 원자력위원회 국정감사	조명희 의원이 위원장의 답변을 막으면서 초선이니까 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하자	
10.12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배진교 의원이 은성수 위원장에게 자료 제출에 대해 문체제기를 하자 위원장이 정회때마다 의원을 쫓아다녔다고 하자 왜 저만 쫓아다니냐고 하고, 위원장 대리인 성일종 의원을 성완중 위원장이라고 하여, 성일종 의원이 다 이해한다고 하자	
10.12	행정안전위의 인사혁신처 국정감사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구두질의 대신 서면질의를 하였다고 공개적으로 감사인사를 하니, 한정애 의원이 다음부터 서면질의를 하겠다고 하자	
10.12	국토교통의 부산시 국정감사	송석준 의원이 1분더 요구를 하자, 이현승 위원장 대리가 거부하자, 지역구(이현승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임)에 오셨는데, 후하게 더 달라고 읍소하자	
10.12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강기운 의원이 답변을 나중에 하라고 하고, 인정하느냐고 묻자 김성주 의원이 답변하게 해주라고 끼워들자	
10.13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홍성국 의원의 질의시간 초과후 금융감독원장이 길게 답변을 하니, 성일종 위원장 대리가 '답변하시는 것이 느셨어요' 라고 하자	
10.13	산업위의 무역투자진흥공사 국정감사	김정호 의원이 산업단지공사이사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다가 '너무 흥분해 버렸네' 라고 자책을 하자	
10.13	과방위의 정보통신	허은아 의원이 과기부 차관이 안 움직여서, 영상이 계속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비고
	산업진흥공단 등 국정감사	멈추어 있다고 지적하자	
10.13	과방위의 정보통신 산업진흥공단 등 국정감사	이원욱 위원장이 더 이상 추가 질의를 할 위원이 없는지 물으면서 후회하지 말라고 말하자	
10.15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	윤호중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다고 평하자, 장제원 의원이 ‘주로 공부만 하고 살았다’ 고 말하자	
10.15	교육위의 서울시교 육청 등 국정감사	정철래 의원이 (초등학교 숫자) 무자르듯 하지 말라고 하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저에겐 칼도 없다’ 고 하자	
10.15	국토교통위의 철도 공사 국정감사	송석준 의원이 김선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이석해 있자 위원장에게 ‘단디 혼내주이소’ 라고 말하자	
10.16	국토교통위의 국토 교통부 국정감사	박영순 의원이 대천IC까지 갈 때 거리와 소요시간을 말하자	
10.16	국토교통위의 국토 교통부 국정감사	세종시 출신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 관련 질의를 하다가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존경합니다.’ 라고 하자	
10.19	외교통일위의 한국 국제협력단 등 국 정감사	김태호 의원이 재외동포청 설립의지를 높여 달라고 질의하였는데, 한우성 재외동포재단이사장이 임기가 3일 남았다고 하자	
10.22	기획재정위의 기획 재정부 종합감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격려 방문을 하였는데, 의원들이 출석체크를 해달라고 하자	
10.22	기획재정위의 기획 재정부 종합감사	윤후덕 위원장이 김태흠 의원의 질의후 ‘김태흠 의원이 질의하니 국정감사답네’ 라고 평가하자	
10.22	기획재정위의 기획 재정부 종합감사	홍남기 부총리가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답변을 들으시면 제 입장이 더 강해진다’ 고 하자	
10.22	과방위의 과학기술 부 종합감사	박성중 의원이 매일 가장 늦게 질의를 하였는데, AR기기 시연을 위해서 순서를 바꿨다면 양해를 구하고, BTS나 블랙핑크를 좋아하는데 안보인다고 하자 연거푸 웃음이 터짐 (이원욱 위원장이 박성중 의원이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에게 즐지 모른다고 기대감을 표하자 또 웃음이 터짐)	
	과방위의 과학기술 부 종합감사	윤영찬 의원이 질의시간을 써서 ‘아까 썼나? “ 푸념하자 웃음이 터지면서 1분 30초를 더 줌	
10.22	보건복지위의 보건 복지부 종합감사	김민석 위원장이 독감백신문제로 2차관의 자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자리를 바꾸도록 하면서 ‘자리를 바꾼다고 질문을 안드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고 하자	
	보건복지위의 보건 복지부 종합감사	서영석 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문제가 유출될지 몰라 추후 제공하겠다고 하자	
	보건복지위의 보건 복지부 종합감사	화상국감으로 원격 기관장들에게 김성주 위원장 대리가 지루하냐고 묻자, 기관장들이 예라고 답변을 하자	
	보건복지위의 보건	이민석 위원장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의 이석을 허가하면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비고
	복지부 종합감사	서 ‘안 가시고 여기 앉아 계실 것 아니면 가십시오’ 라고 하자	
	보건복지위의 종합감사	김성주 의원이 k-방역을 칭찬하는 질의를 하니, 강기운 위원장대리가 ‘대단히 정치적 발언을 하셨다’ 고 하자	
	보건복지위의 종합감사	최종운 의원이 질의중 감사 덕담을 하다가, 마지막이 아닌 줄 알고, ‘제가 마지막이 아니예요’ 하자	
10.23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증인신문 때 2분 사용했다고 이현승 위원장대리가 3분을 주니, 박성민 의원이 ‘우리 당 간사님이 증인신문을 하라고 해서 2분을 사용했다’ 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자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천준호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조응천 위원장 대리가 다른 의원에게 질의를 하라고 하다가 천 의원이 답변을 들을 시간을 달라고 하자 놀라면서 ‘아 답변이요?’ 하자	
10.23	과방위의 종합감사	변재일 의원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 하자	
	과방위의 종합감사	조승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 답변을 하자	
	과방위의 종합감사	박성중 간사가 질의를 마치자 이원욱 위원장이 이를 잘못 불러 박대출 간사님 수고했다고 하니, 박대출 의원이 ‘내가 수고했다고 하니까’ 라고 하자	
10.23	농림위의 농림축산부 종합감사	위원장이 다른 증인 신문을 해서 10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증인에게는 신문을 못하다고 하자 윤재갑 의원이 ‘분야가 다른데’ 라며 꾸념을 하자	
	농림위의 농림축산부 종합감사	정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예” 라고 답변을 하자 정운천 의원이 핀잔을 주고 이개호 위원장이 ‘예를 쉽게 해서 조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하자	
10.23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등 국정감사	위원들이 비둘기, 매, 부엉이 논쟁을 벌인 가운데, 김영호 의원이 비둘기 이야기를 하자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자꾸 비둘기로 만들지 말라’ 고 하자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등 국정감사	송영길 위원장이 질문을 오래 받지 못했던 배석했던 피감기관 장에게 시간관계상 한 말씀만 하라고 하자	
10.23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윤후덕 위원장이 길게 질의를 하자, 고용진 의원이 ‘정리를 좀 해주시지요’ 라고 위원장 멘트를 하자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김경협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1분을 더 달라고 하자 윤후덕 위원장이 ‘예’ 라고 반문하니, 김경협 의원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자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잘 팔로우업 하겠다고 하겠다고 부총리가 말하니, 윤후덕 위원장이 ‘여당 위원과 위원장 말도 좀 들어 주세요’ 라고 하자	
10.23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노웅래 의원이 불교관람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오행이라고 말하자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윤제용 증인이 다른 답을 하자, 임이자 의원이 ‘그 답이 아니잖아요. 제가 원하는 답이’ 라고 하자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기상청장과 환경청장이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막 멘트를 하자 송옥주 위원장이 계속해야 한다고 하고, 윤미향 의원이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자	

일자	장소	웃음이 터진 상황	비고
10. 26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경마 장외발매소와 관련하여 용산 출신이었던 진영 장관이 수익과 관련하여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박완수 의원이 질의중에 시간이 부족하여 박수영 의원에게 30초 빌려달라고 하여	
10.26	농림위의 해양수산부 등 종합감사	강릉출신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이(동해에 있는 해양경찰서가) 강릉으로 못간 거이 후회스럽다고 하여	
10.26	문화체육관광위의 종합감사	이병훈 의원이 더 질의를 안할 것이니 30초만 달라고 하자 도종환 위원장이 다른 의원들도 더 안할 것이라고 하자.	
	문화체육관광위의 종합감사	임오경 의원이 마무리 발언으로 자세히 말을 하니, 도종환 위원장이 위원장이 할 말을 다하셨다고 하자	
10.26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한진중공업 해직자인 김진숙 참고인이 사장에게 머리에 뿔이 안달렸다고 하여	
10.26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40초 발언을 하라고 하자, 송경훈 보험설계사 참고인이 두시 30분 기다렸다고 하자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마지막 질의를 하는 임이자 의원이 마지막 하는데 인센티브로 질의시간 추가요청을 하자.	
10.27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전주혜 의원이 질의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자 정춘숙 위원장이 1분 준다고 하니 박하다고 하자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신동근 의원이 1분 더 주시면 정리하겠다고 하였는데, 위원장이 그냥 하라고 해서	
10.30	국회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위원장이 중식시간 없이 계속 질의를 하자고 하자 김성원 간사가 ‘정부가 인권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냐’ 라고 하자, 김성원 간사 질의 후에 김태년 위원장이 사진이 잘 나왔다고 하여	
11.4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	김태년 위원장이 주호영 원내대표 질의에 대해 수준높은 질의라고 칭찬하니,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준 높다 하니까 수준 안 높은 질문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	이소영 의원이 길게 질의를 하고 답변이 필요없다고 하니, 김태년 위원장이 답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라며 피감기관의 입장을 설명하자	

10. 국정감사 기간 동안 크게 곤욕을 치른 감사위원

(1) 교육위원회 박상도 의원

박상도 의원은 첫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부터 동료의원들로부터 감

사위원 제척촉구를 받았다. 광상도 의원은 국감 시작 첫주 토요일 사퇴기자 회견을 하였고, 국정감사기간중 감사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40여개 국정감사장에서 광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간 50억 퇴직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광상도 의원의 사퇴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11월 11일 제391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되었다.

(2) 환경노동위원회의 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은 10월 5일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에 반입된 제강슬래그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측정한 결과 생물이 살 수 없는 강알칼리성으로 확인됐다” 며 “현장의 슬래그를 채취해 함량분석을진행한 결과 일부 중금속도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전북 새만금에서는 지난해부터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사 차량용 도로 건설을 위한 보조 기층 재료로 제강슬래그 50만톤이 반입되면서 환경단체와 업체가 유해성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윤 의원은 국감장에서 새만금 공사 현장의 슬래그 침출수를 담고 밀봉한 유리통과 세종청사 인근 금강물이 담긴 유리통을 준비하고, 그 안에 미꾸라지와 금붕어를 넣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보여주며 유해성 실험을 진행했다. 10여분이 지난 뒤 새만금 슬래그 침출수 속 어류는 껍질이 하얗게 벗겨지며 모두 폐사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지만 윤준병 의원은 동물애호단체로부터 비난성명 등을 받았다.

(3) 문화체육관광위의 정청래 의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단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국정감사 중 발언에 대해 규탄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장단은 10월 5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와 본인의 유튜브 등에서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폄하하고 사찰이 국민들

을 갈취하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은 정 의원의 부족한 역사 인식과 문화재에 대한 식견을 보여준다면, 사찰이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오랜 역사 동안 가꿔 왔고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의장단은 정 의원이 불교계의 노력을 비하하고 사부대중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하고 문화재 보존·유지 계승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4)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장 승진제도를 희화화하고 전체 교사를 모욕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 의원은 교장 공모제를 옹호하고 현행 교장 자격제도를 비판하면서 학교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을 비위만 잘 맞추면 될 수 있는 자리로 희화화했다” 며 “교육에 대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자기성장을 통해 관리직에 도전하는 모든 교사를 모욕한 것” 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도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영국, 독일, 핀란드, 일본 등 국가는 교장 자격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근무할 때 15년 중 마지막 3년은 교장에게 근무평가 1등수를 받아야 (교장을) 할 수 있었다” 며 “교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근무 시간에 교장 차를 가지고 카센터에 가서 수리를 대신해 주는 등 비위를 맞춰야 했다” 고 주장했다.

(5) 행정안전위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10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 을 제기했다. 관련 증거로 5만 원권 돈 다발 뭉치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김용관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서 20억 원 가까이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 씨가 제보했다는 현금다발 사진을 국감장의 PPT화면에 띄웠다.

하지만 김용관 의원의 주장은 그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의해 곧바로 반박당했다. 이재명 후보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김용관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해당 돈 다발 사진 2장 중 1장이 2018년 11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이며, 당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였을 뿐더러, 이재명 지사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한 김용관 의원의 ‘증인’ 이 SNS상에 사진과 함께 올렸던 자화자찬 일색의 ‘대박 사업 홍보’ 문구를 일일이 읽어내었다.

백 의원은 2018년 박씨가 ‘박정우’ 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현금 뭉치 사진이 이날 김용관 의원이 ‘이 지사에게 건네진 돈’ 이라는 취지로 공개한 돈 사진과 동일하다면서 “박씨 주장이 허위” 라고 반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와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함께 10월 19일 김용관 의원 윤리위원회 제소장을 제출했다.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망신 내지 곤욕을 치른 의원》

(1) 강훈식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로 모바일 게임을 하였다. 보도 직후에 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두말할 여지 없이 제가 잘못된 일” 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사과했다. 강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 때도 모바일 게임을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물의를 빚은 바 있어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2) 이원욱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한번을 더 참

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의사봉을 던지면서 정회를 하여 비난을 자초하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과방위의 종이없는 국감, 화상 국감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순간에 사라지고, 막말 파행 국감장으로 변화했다.

위원장은 11월 5일 이에 대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파행에 대해 사과를 하였다.

(3) 박덕흠 무소속 의원(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직전 환경노동위원회로 옮긴 박덕흠 무소속 의원은 박덕흠 의원 개인사와 관련하여서 국감 첫날부터 11월 4일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까지 관련상임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는 물론, 법사위, 운영위에서 성명이 거론되는 등 크게 망신스러웠다.

또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여 박덕흠 의원이 신청한 증인(이호상 금강홍수통제소장)은 질문을 받지 못한 채 그냥 되돌아야 가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등 56인은 10월 14일 국회의원(박덕흠)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4) 이상직 무소속 의원(문화체육관광위)

이스타항공과 관련하여 무소속 이상직 의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위에 올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상직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실명거론되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서는 중진공 이사장 역임시절의 일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5) 유상범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회의원 유상범은 2020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며 ‘김영호, 김경협, 김수현, 박수현, 이호철, 진영’ 등이 나오는 명단을 국정감사장 대형 화면에 자료로 공개하였다.

쇼킹한 자료여서 언론에 많이 퍼졌는데,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수사 중인 문서 속의 김진표는 1970년생, 박수현은 여성, 김영호 70대 노인, 이호철은 동명이인으로 민주당·청와대 관계자가 아님이 밝혀져 사실확인없이 질의를 하였다는 비난을 받았고, 국정감사 중 더불어민주당의원들로부터 징계안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11. 국감 중 망신스러웠던 피감기관 내지 기관장

(1) 이성운 서울고검장

2021년 10월 14일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이성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7월 경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2)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이동걸 회장은 10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을 금융산업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에게 “대장동 사건에 대해 어떤 소회나 제도 개선에 대한 생각이 있나” 라고 물었다. 이 회장은 “결과적으로 어이없어 보이고 저걸 어떻게 환수해야 하나 개탄을 하지만, 금융산업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고 답했다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혼쫓이났다. 국감을 주재하던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마디 한 마디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정확히 사실관계를 정리해 달라” 고 이 회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이 회장은 “이론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리스크와 수익의 트레이드오프(교환)라는 관점에서 말한 것이지, 현실 세계에서 빈도가 자주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 “산은 컨소시엄은 화끈하게 떨어지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됐는데 이것이 바로 김만배 또는 그 뒤에 숨은 정영학, 남욱 같은 친구들의 사주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산은은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난 게 아닌가” 라고 말했다.

(3) 군인공제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군인공제회가 2005년 주상복합 건물 예정지였던 성남 제1공단 부지에 3천791억원을 투자했으나, 2010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발구역 지정 해제로 기회비용을 포함해 4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며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10월 6일 합참 국감 중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방부 국정감사가 파행된 이유도 군인공제회 관련이었다고 말함)

야당 의원들이 ‘피땀 어린 군인 봉급 누가 앗아갔나’라는 손팻말을 자리

에 제시했다가 더불어민주당의 항의로 1시간 만에 회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충돌이 되풀이되면서 10분 만에 정회됐다.

(4)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0월 20일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논란에 대해 지인에게는 무료 변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야권은 “이재명 구하기” 라고 비판했고, 전 위원장은 “무조건 무료 변론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고 맞섰다.

전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에 비해 낮은 변호사비용이 지급됐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직무 관련성을 검토해야 한다” 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분(변호인단)들의 법률변호서비스는 무료가 아닌, 엄청난 가치가 있는 무형재화”라며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법대 친구로 비교하지 않으면 좋겠다” 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이에 “직무 관련성은 경기도 업무와 변호사들 직무 관련성이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정이나 관행, 정해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했다면 그 자체로 금품수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면서도 “지인이나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고 말했다.

(6) 장하성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 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당 사용한 것이 10월 6일 화상으로 진행된 주중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불거졌다.

장 대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카드 사용처가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이었

다” 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적절하지 못했다” 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는 6차례에 걸쳐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279만 원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사가 작년 국감에서 사용처와 관련 위증을 했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장 대사를 포함한 고려대 교수 13명이 연구비·산학협력단 간접비로 써야 할 6천693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곳이 음식점으로 위장한 유흥업소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장 대사가 여종업원이 접대하고 손님이 가무를 즐기는 룸살롱에 간 것이라면서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 갔다’는 장 대사의 지난해 국감 발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대사는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정진석 위원 지금 대사님의 말씀대로라면 대사님과 함께 그 업소를 이용한 다른 교수 13명이 증징계를 당할 이유가 없지요.
○주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대사 장하성 그 증징계를 받은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지만 저는 작년에 말씀드렸고 지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천만 원이 아니고 여섯 차례…… 2021. 10. 6. 외교통일위원회의 당해 재외공관 국정감사

(7) 김외숙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

10월 26일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질의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감사원장 하던 시절인데, 작년 8월달에요 ‘김오수 당시 법무부차관을 감사위원회에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받았지만 그것을 거부했다. 그 당시에 김외숙 인사수석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항의성 전화를 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무렵에 최재형 원장에게 감사위원으로 김오수 차관을 제청해 달라는 요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의하였고, 김외숙 인사수석은 ‘인사관련 사항이라고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 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검사출신의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재차 질의를 하였으며,

심야에 소란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8)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10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이재명 지사 재판에 무료 변론과 관련하여 많은 질타를 받았다. 운영위원회로 새로 보임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면 어떤 혐의인지,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이런 것 전혀 연락받으신 것 없으십니까?” 라고 질의를 하였고, 위원장은 “연락을 받은 바는 없고요, 고발이 됐으니까 아마 혹시 피의자로 되어 있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 하였다.

이후 여야 의원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받았으며,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가 되었다.

(9)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

10월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 폐지 여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영애 장관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 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지난해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이양수 위원** 장관님께 여쭙게요.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시고, 잘 안 들려 가지고요.

청와대 게시판에 보면 2000개가 넘는 여가부 폐지 청원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여론 조사 때, 그때 오거돈 전 시장이나 박원순 시장 그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가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가 72%나 됐었어요, 국민 여론이. 지금 7월 조사에서도 여가부 폐지 의견이 48%이고 또 여성의 절반이 여가부를 폐지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모 대선후보들도 폐지를 공약을 했어요.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0월 22일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저는 다른 부처보다도 여성가족부는 소수자 보호와 인권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처라고 알고 있는데, 올해 변희수 하사의 자살사건 이후에 그것의 차별이 부당했다라는 1심 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가부장관님은 혐오와 차별의 언어에 대해서,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아무런 철학이 없는 반응을 하실 수가 있는지, 저는 여가부 폐지론이 왜 나오는지 정말 실감했습니다.” 라고 직격타를 날리기도 하였다.

《참고 :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곤욕을 당했던 피감기관 장》

(1)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2020년 10월 19일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은 윤미향 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20년전 정대협 임원이었다는 것과 광복회장 발언과 관련해서 선친 문제가 대두되어 곤혹스런 국정감사를 받았다.

(2) **장하성 주중국 대사**

장하성 주중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장소가 ‘룸살롱’이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룸살롱’을 ‘음식점’이라고 해명한 장 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당시에 해당 업소는 ‘부적절한 장소’였다고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교육위의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장 대사가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을 갔다고 지적했다. 장 대사는 룸살롱에서 법인카드를 쪼개기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자 “학교 부설 연구소장을 맡았던 기간(2016~2017년)구성원들과 음식점에서 식사와 와인 같은 술을 곁들여 회식했다”며 “총 6차례 279만원을 사용했고, 여러명이 식사와 반주를 하다보니 (한번에) 40여만원이 나와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소 지원 비용카드로 나뉘어서 결제한 적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 의원의 지적에 장 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던 당시에 해당 업소가 유흥업소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추후 보충 질의에서 “당시에도 부적절했던 장소였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3)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위원회의 서울시 교육청 등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의원이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올해 3월에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할 때 개학을 한 차례 더 늦추느냐 마느냐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SNS에 정규직 교직원을 일 안 해도 월급 받는 그룹이라고 표현)에 대해 공개된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명하거나 사과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자, 조희연 교육감은 사실은 제가 ‘일 안 해도’를 SNS상에 올릴 때 출근이라는 말을 조금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사들에게 상처를 드렸다는 점에서 사과를 했었고, 두 번이나 했지만 다시 사과한다고 하였다.

(4) 이승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김영주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 중에 “민주평통 직원의 음란물 다운·전송 관련 질의”를 하자, 이승환 사무처장은 “일부 직원의 일탈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하였고, 공직 기강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들에게도 사과를 하라고 하자 다시 사과를 하였는데, 김영호 의원으로부터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라는 주문을 받기도 하였다.

(5)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10월 19일 법사위의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이 올랐다. 10월 26일에는 5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초래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과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 이해충돌의 문제는 없느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의 지적에 “제 이름이 등장한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송구스럽다”고 밝혀 돈을 잃고 명예도 실추되었다.

십니까?

(6)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장관의 전셋집 논란은 2020년도 국정감사 중 회자된 말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라는 질문부터 시작되었다. “지금 전 국민이 장관님 전셋집 구할 건지에 관심이 가 있다.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000이 올랐다는데 잘되지길 바란다.”고 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은혜 의원이 사례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였다.

12. 낙하산 인사 등 논란은 38곳 국감장

제21대 국회 2차년도에서 ‘낙하산’ 인사 관련질의를 가 된 곳은 38개 국감사장이었으며, 진짜 ‘낙하산’은 기획재정부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등 군수물품 밀수출 및 수입 논란이었다.

○정성호 위원 : 그다음에 지난 관세청 자료 보면 3년간 전략물자 불법 수출도 5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특히 보안 소프트웨어라든가 낙하산, 열화상카메라, 조준경, 방

독면 등의 군수물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탈레반 대원이 우리나라 구형 전투복 착용한 것이 나왔는데 전투복 같은 거야 중고 보따리상들이 옷 모아 가지고 넘기니까 그렇게 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국가 이미지 실추하거나 또는 안보에 위해되는 물품이 수출되지 않게 정보 수집이라든가 협업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 10월 12일 기획재정부의 관세청 등 국정감사에서

10월 21일 산업위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한무경 의원은 문체부장관인 황희 의원과 연관된 인사를 언급하면서, 사용하는 ‘낙하산’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10월 6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공기관 낙하산하고 보은인사 근절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 잘 지켜졌습니까?” 라면서 포문을 열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년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 365명의 낙하산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신조어가 캄코드”고 하였다. “올해 공공기관 인원 전수조사를 한 결과 올해 임명한 인원 중 14.4%가 대선캠프, 민주당, 청와대 등 경력의 코드인사였습니다.” 라고 질타했다.

10월 6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권은희 위원이 “금융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선임된 임원 437명 중 관료·친정권 임원, 즉 낙하산 인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총 138명, 31.6%에 달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다. 이런 관료·친정권 임원이 특히 금융공공기관에 많이 분포하고. 특히 친정권 인사는 44명 중 33명, 75%가 금융공공기관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그런 분석이 되었다” 고 공개했다.

그리고 금융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절차의 문제, 금융공공기관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성장금융의 문제를 날카롭게 제기했다.

《낙하산 인사 관련 논란이 있었던 국정감사장 및 질의의원과 그 요지》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의원 및 내용
2021.10.0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호영 의원: 문재인대통령이당대표시절에낙하산인사,캠코더인사를많이비판했어요,지난정권에서.그런데과기부산하47개공공기관에얼마나많은낙하산·캠코더가발령을받았는지따져보니2018년9월까지는5%에불과했는데올5월에는10.5%로무려두배나늘었어요,정권이뒤로가면서.보셨지요?
2021.10.05.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김웅 의원 : 정말 이것은 낙하산도 아니에요. 이것은 채용비리도 아니고 채용 노력질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2021.10.0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등	김승수 의원 : 최근인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KB부동산신탁에 부회장직을 신설해서 여기에 또 김정민 씨를 낙하산 인사로 이렇게 앉힐 정도로 현 정부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2021.10.15.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동만 의원 : 먼저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공항이라서 낙하산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국회의원실의 보좌관 했던 사람을 공항공사의 상임감사로 자리를 밀어넣고, 이것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2021.10.0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정동만 의원 : 국토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는데도 개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정권 말 알박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파악된 인원만 총 64명입니다.
2021.10.05.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이영 의원 :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천글로벌시티의 방화섭 대표는 전해철 현 행정안전부장관 동문이었고요, 2005년도부터 2008년도 까지 송영길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진 출신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낙하산 인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신 분이 바로 방화섭 씨입니다.
2021.10.05.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양향자 의원 : (연초생산안정화 재단 관련) 현금 9000만 원이고요. 사택 구입 및 운영비로도 상당액이 지출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단의 역대 이사장을 살펴본 결과 기획재정부 출신 퇴직자가 연이어서 선임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고요.
2021.10.06.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서일준 위원 :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공기관 낙하산하고 보은인사 근절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 잘 지켜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의원 및 내용
			졌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1년 동안 340개 공공 기관에 365명의 낙하산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신조어가 캠프코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2021.10.06.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김웅 의원 : 그러자 낙하산이라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인국공 김경옥 사장이 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지노위, 중노위에서 다 지고 나니까 정말 황당한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축구하다가 축구경기 지고 났더니 그냥 그 축구경기장 타하면서 경기장을 그냥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2021.10.06.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배진교 위원 : 오늘 금융위원장님은 딱 두 가지 말씀만 하십니다.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률적 쟁점이 많아서’. 도대체 금융위는 자체적으로 어떤 판단들을 스스로 하고 계시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로 평가하고 있는 내용 중에 금융공공기관의 기관장 낙하산 문제입니다. 금융공공기관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 단체, 특히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수많은 금융권 이익단체와 공공기관에 여전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의동 위원 : 위원장님, 지금은 사퇴를 했지만 무자격 낙하산으로 지적된 황현선 씨의 본부장 임명 시도, 금융위원장은 사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권은희 위원 : 위원장님, 금융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선임된 임원 437명 중 관료·친정권 임원, 즉 낙하산 인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총 138명, 31.6%에 달한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료·친정권 임원이 특히 금융공공기관에 많이 분포하고요. 특히 친정권 인사는 44명 중 33명, 75%가 금융공공기관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그런 분석이 되었습니다.
2021.10.0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 자력 안전위원회 등	박성중 의원 :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사장에게) ‘해도 너무한 원안위 낙하산, 기초 용어도 모르는데 원전 안전 관리?’ 이런 용어들이 그때 많이 났습니다.
2021.10.07.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국토안전관리원.주택관리공단(주).건설기술교육원	박성민 의원 : 근본적으로 역대 LH 사장님들이 LH 출신이거나 전문가가 좀 오시면 좋겠는데 늘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가지고 오히려 정부 눈치만 보고 정부 입맛에 맞는 그런 일만 하다 보니까 부채는 점점 늘어나고 조직은 쇠신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동만 의원 : 낙하산 인사도 여전히합니다. 지난 8월 달에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김유임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의원 및 내용
			전 여성가족비서관, 참여연대 출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책특보를 지냈던 권정순 변호사가 비상임이사로 선임됐습니다.
2021.10.08.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김도읍 의원 : 인사혁신처장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방형 직위에 낙하산 문제가 간간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립현대미술관장 지금 선발하는데 어떤 현상이 있었나 하면 역량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탈락했는데 재평가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 탈락한 분이, 역량평가에서 탈락한 분을 결국 선발했어요. 이래도 됩니까?
2021.10.0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정희용 의원 : 원장님 낙하산 인사인 거 다 알고 있는데 낙하산 원장님 편들기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과기부에서 감사 착수해서 우리 죄 없는 직원들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021.10.12.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주)	박수영 의원: 수사를 더, 조사를 더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했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고민해 봤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주당의 낙하산 집합소더라고요. 명단 한번 볼까요. 전현희 위원장님 민주당, 안성욱 부위원장님 민주당, 이정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3명 중에 2명이 민주당에서 출마하셨던 분들이에요. 최은배 상임위원, 손난주 비상임위원, 임혜자 비상임위원. 도대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권익을 지키는 곳인지 민주당의 낙하산 집합소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 안성욱 부패방지담당 부위원장 맞습니까? 유의동 위원 : 보훈공단 최혁진 관리이사의 프로파일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훈업무라고는 해 본 적이 없는 청와대 출신 낙하산 인사입니다. 보훈처 최치현 정책보좌관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신데 꽤 친분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2021.10.12.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등	김상훈 의원 : 전임 강귀섭 사장님은 내가 늘 우려하는 공기업의 자회사에 유독 낙하산 인사가 많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였던 것 같아요. 정동만 의원 : 철도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한 3명에 대하여 면접 절차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원자들 면면 보니까 역대 철도공사 낙하산 인사들과 비교해도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마땅한 인사가 없는 것입니까? 23일까지 추가로 공모했는데 추가 지원자 있습니까?
2021.10.12.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박홍근 위원 : 관세청장님, 제가 관세청 유관 기관 낙하산 재취업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면세점협회 채용 및 회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의원 및 내용
			계 서류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관세청이 이 협회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시간을 끌면서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2021.10.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권명호 의원 :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비전문가들의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있다고 온 국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입니다. 구자근 의원 : 더욱이 문제인 것은 만들어진 자회사—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자회사 임원이 전부가 낙하산 인사입니다. 각 자회사 임원 현황을 받아본 결과, 모든 회사가 100% 모회사 출신 임원이고 자회사 대표로 전부 다 임명되었습니다.
2021.10.1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부산항만공사 등	이만희 위원 : 해수부 국감에서 해수부 소관 공공기관 기관장 출신들, 총 17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10명이 넘는다는 지적을 드리고 솔직히 말하면 해피아의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그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 아니냐? 지난번 총선에도 출마를 하셨지요?
2021.10.13.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유의동 의원 : (경인사연의 이사장)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방식이 다분히 형식화됐다는 것, 그래서 부적격 낙하산 인사를 정당화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점, 이런 우려가 매우 커요. 권은희 위원 :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데 최종적인 이사회와 과반수가 정부 관료들 아닙니까, 당연직 이사들? 정부 관료들이 정부 관료 출신 낙하산을 선임해 준 겁니다. 양심도 없지, 어떻게 13대 원장 모두를 법제처를 갖다 찢어 누릅니까? 법제처 산하기관입니까, 여기가? 배진교 위원 : 먼저 정해구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 기관장 선임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부적격 낙하산 인사 시비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유의동 위원 : 그런데 경인사연에 만연된 낙하산 인사의 문제, 이 정부 들어서 이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한 압권은 이렇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경인사연이 사무총장으로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어요. 여기에도 와 계시지요? 어디 계십니까?
2021.10.14.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이종성 위원 : 2018년 1월 임명 시부터 낙하산 인사, 대통령의 측근, 문 정부 실세, 이런 구설들이 있었고 임기 내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어요. 대통령이 특별히 채용할 정도면 탁월한 운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의원 및 내용
			영 능력을 발휘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초유의 사태로 국민들의 분노 또 공공의료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사과 내지는 사퇴할 용의 있으십니까?
2021.10.1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배현진 위원 : 원장님, 파악하신 게 뭐니까? 그냥 지금 어디…… 소위 말하는 낙하산이 아니라 이력을 보고 문체부에 잔뼈 굵게 죽 있으셔서 저는 금세 업무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국감 준비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김승수 의원 : 특히 기관장이 바뀌면서 이게 초래됐던 그런 이유들이 내부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관장 바뀌면서부터…… 이게 또 특히 낙하산 인사 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도 지금 부족한 판에 이 코드 인사를 해 가지고 조직을 이끌다 보니까 이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2021.10.14.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김상훈 의원 : LX 김정렬 사장님, 지금 대한민국 모든 공기업에 예외 없이 낙하산인사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LX는 낙하산인사 때문에 굉장히 물의를 많이 빚었던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또 낙하산인사, 전 엘엑스파트너스 대표이사 하던 성 모 씨가 또 상임감사로 와 있는데 이분은 회사는 전주인데 자기가 선거 출마했던 송파에 법인카드 막 긁고 다니던 그 양반, 그런 사람 아십니까?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상임감사로 들어와도 되겠어요? 하여튼 김정렬 사장님, 낙하산인사로 자리잡은 분들 관리 좀 잘하세요.
2021.10.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이주환 의원 : 더욱 황당한 사실은 전 대표가 스스로 면직 처리하고 퇴직금 3500만 원까지 전액 다 받아서 나간 겁니다. 참 이렇게 자질도 없는 낙하산 인사가 기관장이 되면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대표님, 비위조사 중에 면직이 가능합니까? 양금희 의원 : 그때 어떤 내용이 다시 댓글로 달렸느냐 하면 이때 경기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여기도 본부장 자리 하나 민주당 출신 낙하산 인사가 꿰차고 있지롱’ 하고 댓글을 달아 이슈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양금희 위원: 의원실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본부장 이상 임직원 현황을 받아 보니까 16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무려 12명의 여당 측 낙하산 인사가 발견되었습니다. 엄태영 위원 : (공영홈쇼핑 사장님) 최창희 전 대표이사 문제입니다. 임기 시작부터 낙하산 논란,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던 전 대표이사는 비위 의혹으로 인해 중기부의 감사 도중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의원 및 내용
			지난 1월 셀프 사임했습니다. 감사 결과 해당 대표이사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리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2021.10.15.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김성원 의원: (한국폴리텍이사장에게) 이것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폴리텍 대학이라고 하면 최고의 테크니션(technician)을 길러내는 대학인데 이렇게 낙하산 천지가 돼 가지고 되겠습니까?
2021.10.1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가스공사 등	이주환 위원 : 대표이사·상무이사·상임감사·비상임이사, 어떻게 보면 다들 지금 현 정권에 같이 있다가 낙하산처럼, 우리가 흔히 그걸 일명 낙하산이라고 하잖아요. 낙하산처럼 오신 분들인데, 만약에 이렇게 사장님이나 대표로 비전문가가 왔다고 하면 이런 산업의 전문가는 그 밑의 사람들로 뽑아서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통상적인 상식이라고 보고요. 대표이사님께서도 시장도 출마하셨고 총선에도 출마하셨지요? 그렇지요?
2021.10.18.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유의동 위원 : 이분이 청와대 행정관 지내고 12년, 17년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하고, 이분이랑 금융·증권거래의 관련성이 됩니까? 2018년부터 3년 내내 케이에스드림 김남수 사장 낙하산 문제 지적 윤창현 의원 : 낙하산 문제로 좀 가 보지요. 무면허, 한유진 씨 이름도 나오고 알박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2021.10.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권명호 의원 :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셨는데 노동조합에서 공공연한 줄 대기와 정권과의 인연에 기댄 낙하산 인사 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주환 위원 : 바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증빙할 필요 없는 직무수당, 회의 참석 때마다 또 수당 이렇게 챙겨 가기 때문에 이런 낙하산 코드 인사가 바로 제 식구 챙겨 주시고 또 자기들 경력관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이 11곳인데요. 전략물자관리원 한 곳을 제외하고는 10개 기관에서 4년간 비상임이사, 감사, 임원으로 활동한 전현직 낙하산 인사가 총 34명입니다. 이분들이 4년간 수령한 급여나 수당은 26억 원이고요. 산업단지공단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경우에는 전문성이나 또 업무 연관성도 없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정치 경력을 어필해서 비상임이사직을 맡아 가지고 꼬박꼬박 활동비를 챙겨 가고 회의 수당도 챙겨 가는데요. 산업단지공단에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이라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의원 및 내용
			는 게 있지요?
2021.10.18.	환경노동위원회	한 국 수 자 원 공사 등	김성원 의원 ; (한국환경공단감사에게)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캠퍼드 인사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시민네트워크 아시지요?
2021.10.19.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김도읍 의원 : 그리고 서울시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 위원님들 몇 분 전과 이야기도 하시고 낙하산 인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 같으면, 제가 민주당 위원이면 적어도 아무리 질의를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2021.10.19.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윤한홍 위원 : 지금 정치권에서 낙하산으로 온 양성평등센터장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공석이 돼 있는 거예요. 군 내 성폭력을 해소하고 문제를 바로잡고 또 군 내 양성평등을 위해서 생긴 양성평등센터장이 지금 공석이지요?
2021.10.20.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유의동 의원 : 국조실에서 유튜버라고 소개한 황희두 씨가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직책을 맡았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민간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 민주당의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으로 또 선임이 되었어요.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이라고 소개한 조은주 씨, 민주당 이낙연 대표 시절에 청년 대변인이었다고 얘기했는데 민간위원 임명된 이후에 최근 언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낙하산 인사 당사자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모임인 광명본부의 공동 본부장을 맡고 있어요. 국조실에서 장애인관광협회 대표라고 소개한 홍서운 씨 민간위원 임명 당시에는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고 전국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청년특보단이고 그랬는데 민간위원 임명되고 나서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후보 선대위 장애인특위 공동 위원장 맡았고 현재는 민주당 청년대변인으로 연일 야당 대권후보에 대한 논평을 쏟아 내고 있어요. 국조실에서 프로바둑기사라고 소개한 이다혜 씨 문재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 활동했었는데 민간위원 임명된 후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여성총괄본부 영입 인사 권은희 의원 : 원장님의 정치 낙하산 이력을 더해서 보면 이제 그러한 이력들이 출연연의 연구 내용까지 오염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1.10.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 학 기 술 정 보통신부	주호영 의원 :(감사위원 7명 늘리는 것과 관련)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부 이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보내겠다 이런 취지 아십니까, 임기 마치기 전에?
2021.10.20.	산업통상자원중소	산 업 통 상 자	엄태영 의원 : 강원랜드에 투하된 낙하산 부

감사일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의원 및 내용
	벤처기업위원회	원부	<p>대, 비전문가 낙하산 그랜드슬램</p> <p>엄태영 위원 : 올 한해에만 한국동서발전,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대한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국전력 등 다수의 산하기관에 기관장부터 감사인사까지 신진인사가 다 임원이되었음(낙하산 그랜드슬램을 이뤘다고 평가)</p> <p>엄태영 위원: 올 7월도 한국세라믹기술원장이 새로 취임했어요. 지난 대선캠프에서 백운규 전 장관과 함께했고 같은 창원대 교수진 출신, 새로 취임한 세라믹기술원장은 임기 시작 2주 만에 본부장급, 센터장급 총 5명 인사를 단행.</p> <p>권명호 위원 : 방금 장관님께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하셨잖아요. 특전사 출신들 욕 들을까 싶어서 그런데, 그건 낙하산 인사 아닙니까?</p>
2021.10.20.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기상청	김웅 의원 : 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건에 대해서 낙하산이 나올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2021.10.21.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p>박성민 의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낙하산인사 논란이 아주 많음</p> <p>이종배 의원 : 공공기관의 방만 부실 경영 원인으로 꼽히는 낙하산 코드인사도 문 정부 들어서 심화</p>
2021.10.21.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	<p>장혜영 의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정책은 취지가 정말로 훌륭한 정책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모 기업 인사들이 고위 낙하산으로 가는 자리로 지금 전략</p> <p>추경호 의원 : 국회에서 낙하산 방지를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 줬더니 기재부는 결국 시행령으로 또 물고를 터 줘서 낙하산 임명이 끊이지 않음(공공기관 감사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강화)</p> <p>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지금 기재부장관이 임명·제청하는 공기업 감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캠퍼더 인사라고 해서 기재부장관이 임명·제청한 감사가 총 49명 중에 81%인 38명입니다. 그리고 홍 부총리가 오신 이후에도 24명, 전체 임명 32명 중에 75%를 결국 캠퍼더 인사를 한 것</p>
2021.10.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한무경 위원 : 중기부는 저는 예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살펴 보니 중기부의 중소기업유통센터에 6명의 임원이 있는데 그중 절반이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사로 보임
2021.10.26.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이명수 의원 : 전국의 많은 이런 산하기관에 코드, 낙하산, 보은인사가 굉장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성이 확보돼야 되는 자리에 선거 도와준 사람 얹혀 놓으니까 일이 제대로 안 돼요.

13. 논란이 된 증인 및 피감기관의 '말 한마디'

(1)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그분이 아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재경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검찰 수사 범주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지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화천대유 계열사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그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지사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2)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의 '잘 알지 못하니'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천안함 폭침이 북한에 의한 것이냐고 질의하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잘 알지 못하니 보훈처장에게 물어보라'고 답변하여, 무성의한 답변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인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임료를 받아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인,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의 경우 무료로 변론하는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여 이재명 지사의 수임료 대납 의혹과 관련해 불을 지폈다.

(4) 이재명 지사의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싶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역술인 등에게 부동산 경기 조언을 받았더라면 환수 이익이 더 커졌을 것이라는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천공스승님을 얘기했지만,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싶다’ 고 답변하여 논란을 빚었다.

(5)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부심이 매우 큰 사업 중의 하나”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세빛둥둥섬이 흉물로 전락했다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세빛둥둥섬은 하기를 잘했다는, 자부심이 매우 큰 사업 중 하나” 라고 답변하여 질의자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의견을 말하여 논란이 되었다.

(6) 김오수 검찰총장의 ‘계좌추적을 죽어라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계좌추적이 허술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계좌추적을 죽어라 하고 있다며 상반된 견해를 들었다.

(7)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종전선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 논의를 위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지만 종전선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간접시사했다.

(8)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인 11월 중 기준금

리 인상 가능성을 묻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 며 기준금리 인상을 사실상 천명하였다.

(9) 양승동 KBS 사장의 ‘수신료 인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 코로나19로 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이 적합하냐는 지적이 있다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코로나19가 상당한 정도로 종결된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며 수신료 인상을 계속 추진될 것임을 시사했다.

(1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구체적 혐의가 있다’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가 진행된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신고하면 되는가. 국감에서 질의하는 건 신고로 간주되지 않는가’ 며 거센 폭풍을 야기했다.

(11)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BTS도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본다’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BTS를 유엔에 데려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BTS도 유엔총회에 참석해 엄청나게 성공했다고 현실과 동떨어지는 동문서답을 하였다.

14. 열전 또는 파행을 야기한 '한마디' (언론보도)

(1)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버르장머리’

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국감 진행과 관련,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의

항의가 계속되자,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버르장머리 없이 뭐 하는 꼴들인가. 위원장이 진행을 잘하고, 들어주면 버르장머리가 있어야지”라고 하여 결국 파행을 빚었다.

(2) 조경태 의원의 ‘쪼잔’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고 쓰인 마스크를 쓰고 국감에 참석한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비난하자 민주당이 지난 1일 한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손팻말을 들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게이트’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쪼잔하지 않다”고 하여서 여당의 거센항의를 받았다.

(3) 임오경 의원의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다고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정정래 의원에게 함께 한복을 입자고 했지만 거절당했다면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청래 의원이 학교 다닐 때 싸움을 진짜 많이 했고,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다고 한다”고 하였는데, 정청래 의원의 ‘학폭의혹’ 으로 번져서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4)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모’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다 정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여야의 감정싸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관련 발언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오후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사무장병원 관련 질의를 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을 거론했다. 앞서 오전 국감에서 남인순 의원도 사무장병원 관련 윤 전 총장의 장모를 거론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다시 언급되었다.

(5)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돈다발’

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지사님, 도청 공무원들이 조폭과 부적절한 뇌물 거래했다고 그러면 징계 대상이지요?” 라면서 “진술서에는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돈뭉치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십시오.” 라면서 5만원권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이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으며, 여당으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았다.

10월19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국회의원(김용판) 징계안’ 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

○김용판 위원 김용판 위원입니다.

경기도는 16조가 넘는 막대한 국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장과 직원들의 철학과 품성을 살펴보는 것은 국정감사 위원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지사님, 도청 공무원들이 조폭과 부적절한 뇌물 거래했다고 그러면 징계 대상이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판 위원 조폭과 부적절한 거래를 한 것이 밝혀졌다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징계 대상일 것이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한번 보시지요.

박용승 씨인데 아는 분 맞습니까? 성남시 1·2·3선 의원 하고……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에 시의원 출마하신 분 같습니다.

○김용판 위원 예, 부의장도 했고 그렇습니다. 친박연대 소속으로 국회의원에도 출마한 적이 있지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박용승 씨 아들인 박철민 씨인데 압니까, 모릅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글썸, 모르겠는데요.

○김용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시지요.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준석 씨인데 이분은 아시겠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사진을 찍어 준 일이 있습니다.

○김용판 위원 예, 안다는 뜻이겠지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김용판 위원 그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

다.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괄호 안에 있는 게 이태호 씨인데 아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저는 시장실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김용판 위원 압니까, 모릅니까? 다만 하세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당연히 그 앞에 있으니까 알지요.

○김용판 위원 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김용판 위원 좋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선거할 때요……

○김용판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질의할 때 그때 답변하시면 돼요.

본 위원이 언급한 박철민, 이준석, 이태호는 모두 국제마피아 소속 핵심 조직원들이고 이 중 이준석, 박철민은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의 대표와 핵심 직원이었습니다. 표에도 나오지요.

지사께서는 장영하 변호사 아시나요?

○경기도지사 이재명 예, 알지요. 저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은 분이십니다.

○김용판 위원 예, 제가 장영하 변호사에게 며칠 전 전화를 했습니다. 국감에 참고할 자료가 있으면 협조를 좀 해 달라 부탁했지요. 마침 장 변호사께서는 최근에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국제마피아와 행동대원이며 코마트레이드의 직원이었던 박철민의 요청에 의해서 변호인 접견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공익제보를 받았고 본 위원에게 전달하게 됐습니다.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철민 씨는 과거 국제마피아과의 일원이었지만 조직을

탈퇴해서 조폭 45명을 검거하는 데 경찰서에 적극 협조했던 사람입니다. 저기 나오지요.

박철민 씨는 진술서,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3종 총 17쪽 분량을 제보하였는데 모두 다 금년 10월 4일, 6일, 9일 최근에 작성한 것입니다. 이 중 진술서와 사실확인서는 원본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원본이고 공익제보서만 사본을 받았습니다.

사실확인서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다 들고 난 다음에 질의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약 12년간 국제마피아파의 핵심 행동 대장급 일원이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와의 관계는 2007년 이전부터 국제마피아파 원로 선배분들과 변호사 시절부터 유착관계가 있어 왔고 수천 개의 사건 중 하나뿐이라고 대답을 회피하지만 유착관계에 있어서 국제파 조직원들에게 사건을 소개받고 커미션을 주는 그런 공생관계였습니다. 그렇게 계속 폭력조직인 저희 국제마피아파와 유대관계를 가졌고 이재명 시장 선거 당시, 아까 사진에서 본 이태호 국제마피아파 큰형님이 합류하게 되면서 인연은 더욱 깊어졌고 태호 형님이 이재명 시장을 밀어라라고 밀의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했고, 준석 형님을—이준석을 말합니다—결정적으로 이재명 지사와 연결을 시켜준 것도 이태호 형님입니다. 태호 형님은 당시에 이준석 형님이 불법 도박 사이트로 큰돈을 벌었고 이 사실을 알고 이재명 도지사의 스폰이 되어 주라고 하였고 이재명 도지사는 코마트레이드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의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회사인 줄 알면서도 특혜를 주었고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용역 등 시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 특혜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불법 사이트 자금을 이재명 지사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20억 가까이 지원하였고 현금으로 돈을 맞춰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측근을 코마트레이드 계열사의 직원으로 등재를 시켜 놓고 월급을 주기도 하였으며 코마트레이드는 국제파 조직원 소굴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구단주로 있는 FC성남에 코마트레이드가 후원협약을 하여 합법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돈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설계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진술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코마트레이드는 직원들도 모두 국제마피아파 현역 조직원들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대리, 팀장으로 일을 하였으며 그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이재명 지사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성남시 우수기업으로

표창하고 선정하는 특혜를 주고 건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다른 별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조직을 잘 챙겼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수괴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관계가 긴밀합니다. 이 사실이 허위사실일 경우 저 박철민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겠으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겠습니다.

이상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대장동과 조폭과의 관계 등 지사와 관련된 게 많습니다.

이게 허언증이 있어서 허위진술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박철민 씨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공익제보한 그 비장함에서 진정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 본 위원은 코마트레이드 게이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서에는 박철민 씨 본인과 친구도 직접 이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돈뭉치 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녹음은 상의를 좀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판 위원 자, 다음에……

○박완주 위원 그냥 들어 보세요, 우선.

○경기도지사 이재명 들어 보시지요, 뭐.

○박완주 위원 아니, 녹음이 아니잖아요.

○김용판 위원 녹음이 아닙니다.

○위원장 서영교 녹음 아니지요?

○김용판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직접 박철민 씨가 현금 1억 5000을 주고 친구도 줬다고 합니다. 특히 진짜 문제는 코마트레이드에서는 이 지사의 측근 계좌에 20억 가까이 지원했고 증거할 수 있는 통장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답을 드릴까요?

○김용판 위원 한번 들어 보세요.

공익제보한 박철민 씨도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장영하 변호사도 곧 수사기관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지사께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다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특검에,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답변을 해 주시지요.

○위원장 서영교 우선 이 질의하셨고 일정 정도 시간은 좀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은요.

말씀하십시오.

○경기도지사 이재명 일단 결론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2010년에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2012년부터 무슨 중복몰이부터 시작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고 제가 근무기간 기준으로 4일 중에 3일을 수사, 조사, 감사, 압수수색을 당했더군요, 통계를 내 보니까.

제가 2016년에는 성남시 복지정책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충돌이 발생하면서 광화문에서 단식농성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런 것 비슷한 거라도 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김용판 위원 천천히 말…… 곧 고발할 거니까 당연하시다면 수사를 받으면 됩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당연하지요. 원하든 안 하든 수사를 하면 당연히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국민의 의무이고……

○김용판 위원 명명백백히 밝혀질 겁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런 데다가 국민들 앞에 보여서 틀어 주고……

○김용판 위원 이래서 면책특권이 필요한 겁니다. 맨날 고소, 웬만한 일에는 다 고소 고발하지 않습니까?

○박완수 위원 답변만 하세요, 답변만!

○경기도지사 이재명 이런 정말,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처 : 2021. 10. 18. 경기도청 국정감사 회의록 20~23쪽

(6) 정청래 의원의 ‘통행세, 봉이 김선달’

정청래 의원은 2021년 10월 5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제가 예전에 문광위에 있을 때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애자 그래서 없애고 그랬는데 제가 여러 절을 다니면서 불편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절하고 3.5km, 2.5km 떨어졌는데 가려면 통행세 받아요 이런 데가 국립공원 내 사찰 스물일곱 곳 중 다섯 곳을 제외한 스물두 곳이 이려고 있어요.

아니, 3.5km, 한 10리가 떨어져 있는데 10리 전에 통행세를 받아요. 매표소에서 해인사 거리가 3.5km, 매표소에서 내장사 거리가 2.5km예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 내야 돼요. 합리적입니까” 라고 문화재청장에게 질의를 하였고, “가 봤을 때는 이걸 말이 안 됩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이런 것은 문화재청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라고 하자, 불교계에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IV. 제21대 국회 제2차년도(2021년도)국정감사 이모저모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나아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우리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 윤재옥 정무위원장의 2021. 10. 1. 국무조정실 등 국감 개시발언에서

1. 2021년도 국정감사의 실시시기 조정 등

국회(국회의장 박병석)는 2021. 9. 1. 제39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391회 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를 통해 2021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동안 헌법 제47조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집회되는 정기회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및 국정전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각종 법률안 등 필요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하였다.

이어 2021년 9월 16일 제391회 제7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국회운영위원장)⁴⁾ ‘이 4번째 의안으로 의결되었고, 여야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 2019. 10. 1.(금)부터 10. 21.(목)까지 실시하고, 겸임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별도 실시하기로 하여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26일과 10월 27일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2일(금) 감사를 하기로 하였다.

2. 2021년도 국정감사 감사위원 :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295명

4) **제안이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정기회 집회 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이에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1년도 국정감사를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려는 것임.

감사위원은 최다선인 6선 박병석 국회의장을 제외하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5선인 김진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병수 의원,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등 12명을 비롯해 **295명**이었으나, 국무위원을 겸임한 **한정애** 환경부장관, **황희** 문화체육부장관,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지난해엔 이인영 통일부장관 1명) 등은 국정감사활동을 하지 못하였다.

정당의 대선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의원(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전혀 하지 못하였고, 경선후보였던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8회 국정감사 중 6회 불참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였던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 경선이 완료된 후부터 참석하였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정찬민 의원과 이상직 의원이 결석하였으며, 곽상도 의원은 국감도중 사퇴서를 제출하여 한번도 감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보면 상임위원회별로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현승)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가 각각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가 16명**으로 가장 적었다.(교육위원회는 정찬민, 곽상도 의원이 빠져 실제로 14명이 하였고,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장관은 겸임한 박범계 의원 때문에 15명이 감사를 하였음) 교섭단체별로 더불어민주당 169명(지난해 174명)으로 57.28%, 국민의힘 103명으로 지난해와 같았고 34.9%였고, 정의당(6명), 국민의당(3명), 열린민주당(3명), 기본소득당(1명), 시대전환(1명), 무소속(9명) 등 비교섭단체는 23명(지난해 22명)으로 7.79%였다. 원래 무소속 의원이 10명으로 출발을 하였으나, 감사 도중(10월 5일) 무소속 **양경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재입당을 하였다.

국정감사 중 사보임 현황을 살펴보면,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사·보임이 이루어졌다. ‘대장동’ 사건 관련

여야 당의 전략적 사·보임이었다.

《국회의원 사·보임 현황 (10월 18일과 19일 국정감사)》

정당	위원회	사임	보임	기준 연월일
더불어민주당	정무	민형배	한정애	2021-10-18
	교육	박찬대	이형석	2021-10-18
	행정안전	이형석	박찬대	2021-10-18
	행정안전	한정애	민형배	2021-10-18
국민의힘	정무	박수영	김기현	2021-10-18
	외교통일	김기현	이명수	2021-10-18
	행정안전	이명수	박수영	2021-10-18
더불어민주당	정무	한정애	민형배	2021-10-20
	교육	이형석	박찬대	2021-10-20
	행정안전	민형배	한정애	2021-10-20
	행정안전	박찬대	이형석	2021-10-20
국민의힘	정무	김기현	박수영	2021-10-20
	외교통일	이명수	김기현	2021-10-20
	행정안전	박수영	이명수	2021-10-20

3. 2021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745개(지난해 705개)

2021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2021년 9월 16일 제391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43개 기관에 대한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이 확정되어 총 745개 대상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12개 기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9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8개 기관),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감사대상 승인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9월 24일 45개 대상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이 이뤄졌고 총 705개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2019년도에는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12개가 승인되어 총 17개 위원회에서 채택한 국정감사대상기관은 총 788개 기관이었음》

가장 많은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한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가 82개였다(지난해 과방위도 82개였음) 그 다음으로 환경노동

위원회(위원장 박대출)이 75개 기관이었다. 가장 적은 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로 지난해와 같이 29개 였다.(겸임위 제외).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현황》

구분 위원회	위원회 선정 기관			본회의 승인기관	(기관 수)
	국감조법 제7조제1호	국감조법 제7조제2호	국감조법 제7조제3호	국감조법 제7조제4호	
국회 운영	8	-	-	1	9
법제사법	74	-	3	1	78
정무	8	-	38	1	47
기획재정	23	-	6	-	29
교육	19	17	23	5	64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9	-	64	9	82
외교통일	25	-	5	1	31
국방	61	-	5	1	67
행정안전	6	8	7	12	33
문화체육관광	21	-	26	4	5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5	-	23	8	36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3	-	55	-	58
보건복지	10	-	31	-	41
환경노동	48	-	27	-	75
국토교통	3	2	28	-	33
정보	5	-	-	-	5
여성가족	1	-	5	-	6
(기관 수)	329	27	346	43	총계 745

출처 : 국회사무처(의사국), 2021년도 국정감사 수첩(수정본 2021. 10. 15)

<참고 :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 현황>

구분 위원회	위원회 선정 기관			본회의 승인기관	계 (기관 수)
	국감조법 제7조제1 호	국감조법 제7조제2호	국감조법 제7조제3호	국감조법 제7조제4호	
국회 운영	8	-	-	1	9
법제사법	72	-	3	1	76
정무	8	-	37	1	46
기획재정	23	-	6	-	29
교육	19	17	23	5	64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9	-	64	9	82
외교통일	25	-	5	-	30
국방	58	-	5	-	63
행정안전	5	10	7	13	35

구분 위원회	위원회 선정 기관			본회의 인기관	계 (기관 수)
	국감조법 제7조제1 호	국감조법 제7조제2호	국감조법 제7조제3호	국감조법 제7조제4호	
문화체육관광	23	-	27	6	56
농림축산식품	5	-	23	9	37
산업통상자원	3	-	41	-	44
보건복지	4	-	17	1	22
환경노동	46	-	24	-	70
국토교통	3	3	25	-	31
정보	5	-	-	-	5
여성가족	1	-	5	-	6
계 (기관 수)	317	30	312	46	총계 705

자료 : 국회사무처 의사국, 2020년도국정감사수첩(2020. 10. 8), 4쪽

4. 5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국감 51회

국정감사의 병폐 중 하나가 과도하게 하루에 많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인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전체 일정 중 무려 51회(2020년 55회, 2019년도 69회, 2018년도 58회, 2017년도 44회)나 한번에 5개 이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의 경우에는 10월 18일 하루에 53개 피감기관을 감사하였다.

정부위원회(위원장 윤재옥)의 경우에는 10월 13일 개인정보위원회 등 26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다.

《2021년도 국정감사 중 동시수감기관이 5개 이상이었던 경우(종합감사 제외)》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동시수감기관	장소	감사개시 시간	감사종료 시간	감사 시간
10월 01일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7	대법원	10:14:00	20:20:00	10:06
10월 01일	교육위원회	교육부	7	국회	10:05:00	22:23:00	12:18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동시수감기관	장소	감사개시시간	감사종료시간	감사시간
10월 0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국회	14:04:00	23:59:00	9:55
10월 01일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5	국회	10:07:00	17:46:00	7:39
10월 05일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5	국회	10:11:00	22:32:00	12:21
10월 05일	교육위원회	국가평생교육원	12	국회	10:17:00	19:38:00	9:21
10월 0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8	정부세종청사	10:10:00	21:19:00	11:09
10월 07일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8	국회	10:04:00	20:33:00	10:29
10월 0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5	국회	10:03:00	19:32:00	9:29
10월 7일	행정안전위원회	승강기안전위원회	7	국회			
10월 0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중앙박물관	11	국회	10:09:00	17:23:00	7:14
10월 0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7	국회	10:07:00	22:49:00	12:42
10월 08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법원	18	국회	10:15:00	19:03:00	8:48
10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등검찰청	13	국회			
10월 0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	국회	10:07:00	16:39:00	6:32
10월 08일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17	국회	10:08:00	16:55:00	6:47
10월 12일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5	국회	10:05:00	19:38:00	9:33
10월 12일	교육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9	국회	10:15:00	19:45:00	9:30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전력공사	16	국회	10:04:00	22:05:00	12:01
10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2	국회	10:06:00	21:20:00	11:14
10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8	한국철도공사	10:04:00	19:39:00	9:35
10월 13일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6	국회	10:06:00	19:48:00	9:42
10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5	국회	10:08:00	19:51:00	9:43
10월 13일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10	육군본부	10:02:00	18:01:00	7:59
10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7	국회	10:08:00	18:13:00	8:05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동시수감기관	장소	감사개시시간	감사종료시간	감사시간
10월 13일	환경노동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	국회	10:04:00	18:58:00	8:54
10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11	국회	10:07:00	23:14:00	13:07
10월 14일	4교육위원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14	국회	10:04:00	19:27:00	9:23
10월 14일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5	공군본부	10:04:00	17:53:00	7:49
10월 14일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6	해군본부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13	국회	10:08:00	19:32:00	9:24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6	국회	10:09:00	17:41:00	7:32
10월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1	국회	10:03:00	18:32:00	8:29
10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8	국회	10:04:00	18:52:00	8:48
10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9	국회	10:06:00	19:17:00	9:11
10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16	국회	10:11:00	18:13:00	8:02
10월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국회	10:08:00	19:00:00	8:52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석유공사	12	국회	10:02:00	19:50:00	9:48
10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12	국회	10:03:00	18:15:00	8:12
10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7	광주국세청, 한국은행전북본부	10:32:00	17:34:00	7:02
10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	대구지방국세청	8	대구국세청, 부산본부 세관	10:08:00	17:38:00	7:30
10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연구재단	53	대전	10:08:00	16:33:00	6:25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국회	10:03:00	18:50:00	8:47
10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12	국회	10:09:00	18:34:00	8:25
10월 19일	교육위원회	부산대학교	14	국회	10:05:00	20:19:00	10:14
10월 19일	국방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	13	국방과학연구소	10:03:00	12:36:00	2:33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14	국회	10:10:00	18:08:00	7:58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동시수감기관	장소	감사개시시간	감사종료시간	감사시간
10월 19일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6	국회	10:08:00	17:58:00	7:50
10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6	국회	10:04:00	18:06:00	8:02
10월 22일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6	국회	10:12:00	18:20:00	8:08
10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6	국회	10:03:00	18:53:00	8:50

《2020년도 국정감사 중 동시수감기관이 5개 이상이었던 경우(종합감사 제외)》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수감기관	감사일	감사장소	감사시작	감사종료	감사시간
법제사법	대법원(법원 행정처)	6	10.7.(수)	국회	10:20	22:24	12:04:00
정무	국무조정실	5	10.7.(수)	국회	10:00	22:18	12:18:00
교육	교육부	7	10.7.(수)	국회	10:02	21:23	11:21:00
과기정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11	10.7.(수)	국회	10:03	22:42	12:39:00
국방	국방부	28	10.7.(수)	국방부	10:04	21:18	11:14:00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 부	9	10.7.(수)	국회	10:08	19:49	9:41:00
국방	합동참모본부	8	10.8.(목)	합동참모 본부	10:05	19:52	9:47:00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	중소벤처기업 부,특허청	6	10.8.(목)	국회	10:05	23:41	13:36:00
법제사법	법무부	5	10.12.(월)	국회	10:08	22:08	12:00:00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	원자력안전위 원회	5	10.12.(월)	국회	10:01	22:14	12:13:00
문화체육관광	문화재청	8	10.12.(월)	국회	10:09	19:17	9:08:00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	한국농어촌공 사	5	10.12.(월)	국회	10:06	18:32	8:26:00
환경노동	기상청	16	10.12.(월)	국회	10:01	17:17	7:16:00
법제사법	대전고법/고 검	17	10.13.(화)	국회	10:21	18:55	8:34:00
교육	평생교육진흥 원	12	10.13.(화)	국회	10:03	18:08	8:05:00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원	5	10.13.(화)	국회	10:03	18:16	8:13:00
행정안전	소방청	9	10.13.(화)	국회	10:03	19:30	9:27:00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8	10.13.(화)	국회	10:03	19:51	9:48:00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 수감 기관	감사일	감사 장소	감사 시작	감사 종료	감사 시간
기업							
환경노동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19	10.14.(수)	국회	10:00	20:43	10:43:00
정무	국민권익위원 회	5	10.15.(목)	국회	10:03	19:24	9:21:00
국방	공군본부/ 해군	11	10.15.(목)	본부	10:03	19:57	9:54:00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	한국전력공사	13	10.15.(목)	국회	10:05	23:40	13:35:00
보건복지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8	10.15.(목)	국회	10:02	18:46	8:44:00
환경노동	경제사회노동 위원회	22	10.15.(목)	국회	10:02	21:23	11:21:00
국토교통	한국철도공사	8	10.15.(목)	국회	10:03	21:52	11:49:00
법제사법	대구고법/고 검	15	10.16.(금)	국회	10:12	19:13	9:01:00
국방	육군본부	10	10.16.(금)	육군본부	10:00	15:36	5:36:00
문화체육관 광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7	10.16.(금)	국회	10:09	19:29	9:20:00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7	10.16.(금)	국회	10:14	20:43	10:29:00
법제사법	서울고검	11	10.19.(월)	국회	10:22	22:03	11:41:00
정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24	10.19.(월)	국회	10:02	19:15	9:13:00
기획재정	한국수출입은 행	5	10.19.(월)	국회	10:03	19:50	9:47:00
교육	충남대학교/ 대전교육청	8	10.19.(월)	충남대	10:00	16:26	6:26:00
교육	<2반>경북대/ 대구교육청	9	10.19.(월)	경북대	10:01	17:44	7:43:00
문화체육관 광	국립중앙박물 관	12	10.19.(월)	국회	10:09	18:19	8:10:00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8	10.19.(월)	국회	10:10	20:29	10:19:00
환경노동	한국수자원공 사	11	10.19.(월)	국회	10:00	21:25	11:25:00
국토교통	한국감정원	8	10.19.(월)	국회	10:04	19:49	9:45:00
법제사법	서울고법	16	10.20.(화)	국회	10:16	18:15	7:59:00
기획재정	<1반>광주지	7	10.20.(화)	광주지방	10:32	18:00	7:28:00

위원회	대상기관	동시 수감 기관	감사일	감사 장소	감사 시작	감사 종료	감사 시간
	방국세청			국세청			
기획재정	<2반>대구지 방국세청	8	10.20.(화)	대구경북 본부	10:00	17:33	7:33:00
교육	<1반>전남대/ 광주교육청	10	10.20.(화)	시교육청	10:00	17:46	7:46:00
교육	<2반>부산대/ 부산교육청	8	10.20.(화)	시교육청	10:00	16:12	6:12:00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	한국연구재단	53	10.20.(화)	대전	10:05	15:59	5:54:00
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	부산항만공사	6	10.20.(화)	국회	10:08	17:56	7:48:00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	한국석유공사	11	10.20.(화)	국회	10:02	20:00	9:58:00
환경노동	근로복지공단	11	10.20.(화)	국회	10:01	21:00	10:59:00
보건복지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7	10.21.(수)	국회	10:02	19:16	9:14:00
교육	서울대학교	7	10.22.(목)	국회	10:02	19:34	9:32:00
문화체육관 광	한국콘텐츠진 흥원	16	10.22.(목)	국회	10:07	21:29	11:22:00
농림	수산업협동조 합중앙회	7	10.22.(목)	국회	10:07	18:28	8:21:00
행정안전	강원지방경찰 청	7	10.23.(금)	국회	10:05	17:46	7:41:00
여성가족	여성가족부	6	10.27.(화)	국회	10:04	18:48	8:44:00
국회운영	국가인권위원 회	6	10.30.(금)	국회	10:04	18:10	8:06:00

5.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 및 인터넷 생중계

감사시간 중 국회방송은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국정감사, 10월 5일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 등을 비롯해 10월 21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의 교육부 종합감사, 10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희중)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 등 14회 국정감사(2020년도에는 15회, 2019년도는 총 13

회)의 국정감사를 생중계하였다.

10월 1일 법사위(위원장 박광온)의 대법원 국정감사 녹화중계, 10월 5일 기획재정부(위원장 윤후덕)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녹화 중계 등 법정공휴일, 토요일과 일요일 등을 비롯해 평일 새벽 시간대에 총 40차례 중계방송을 하였다.

또한,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의 교육부 국정감사 등 12차례에 걸쳐 유튜브 생중계를 실시했다.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 의해 영상회의록으로 모든 국정감사내용이 제공되었다. 다만, 국토교통위원회 제1반(반장 이현승)의 10월 20일 서울시 국정감사는 12월경에야 뒤늦게 올라와 빈축을 샀다.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깜깜하다가 12월에야 영상회의록과 속기록이 올라오고 있다.

제18대 국회 2010년도 농림수산물위원회에서 외부 국정감사를 녹화하여 영상회의록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여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외부국감과 국회방송 생중계 국감을 영상회의록에 올려놓아 총 120개(검임위 2개위원회 3개 포함)의 영상회의록(2017. 12. 1.기준)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67개 영상회의록이 공개되어 대부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하였다.**

2019년도에는 11월 17일 현재 기준으로 **152개의 영상회의록**이 공개되어 거의 모든 국정감사를 모니터링 할 수 있었다.

2020년도에는 11월 8일 기준으로 **149개의 영상회의록**이 공개되어 현장시찰을 제외한 모든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도에는 11월 24일 기준으로 139개의 영상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었다.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의 경우에는 1일차 국방부 국정감사가 무산되어 있는데, 10월 6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 영상회의록까지 올라와 있지 않아 아쉬움을 주었다.

영상회의록과 달리 속기록인 회의록이 너무 늦게 올라와 2021. 11. 24. 기준으로 81개 회의록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 전체 국정감사(시찰 제외) 60%정

도에 그쳐 개선이 요구되었다.

영상회의록에 자막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139개 영상회의록 중 26개에 불과했다. 전체 영상의 18.7% 밖에 되지 않아 청각장애인 등의 국정감사 접근권이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처럼 전체 영상회의록에 자막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 경우에만 자막제공을 하고 있었다.

《2021년도 국정감사 영상회의록의 자막제공 현황》

위원회	국감일수	대상기관	영상회의록	자막제공현황	외부영상
국회운영	2	9	3	1	0
법제사법	10	78	13	1	2
정 무	10	47	10	1	0
기획재정	9	29	12	1	4
교육	7	64	7	1	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9	82	10	0	1
외교통일	12	31	5	1	0
국 방	10	67	8	1	5
행정안전	10	33	19	1	9
문화체육관광	8	51	7	7	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0	36	10	0	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8	58	8	1	0
보건복지	8	41	8	8	0
환경노동	10	75	9	1	2
국토교통	9	33	9	1	5
정 보	4	5	0	0	0
여성가족	1	6	1	0	0
17	137	745	139	26	28

6. 2021년도 국정감사 감사진행 시간은 1210시간 7분

2021년도 감사시간(국회공보 기준⁵⁾)은 1210시간 7분(2020년도 1317시간 36분)보다 100시간 정도 줄었다.

참고로 이번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전부터 국정감사 중에 여야당이 공히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과정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대한 상대적

5) 국회공보상의 표시를 기준으로 하였음.

관심도가 떨어진 점이 있었다.

제20대 국회 말인 2019년도 감사시간(국회공보 기준)인 1297시간 08분보다도 87시간 정도 줄었다.

2018년도 1447시간 44분보다 많이 저조하였다. 2017년도 국정감사는 1307시간 35분이었고, 2016년도 1216시간 43분이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인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2017년도에는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쪽 국정감사로 진행되었다. 2019년도 국정감사는 기승전 조국감사로, 조국 일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많았다.

2020년도 감사시간(국회공보 기준⁶⁾)은 **1317시간 36분으로 2019년도 감사시간(국회공보 기준)인 1297시간 08분보다 20시간 18분 정도 많았다.** 2018년도 1447시간 44분보다 많이 저조하였다. 2017년도 국정감사는 1307시간 35분이었고, 2016년도 1216시간 43분이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국정감사 보이콧으로 인해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2017년도에는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반쪽 국정감사로 진행되었다. 2019년도 국정감사는 기승전 조국감사로, 조국 일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많았다.

《2021년도 위원회별 국정감사 총 진행시간(중식, 이동, 휴식시간 등 포함)》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국회운영	23:32:00	문화체육관광	65:44:00
법제사법	107: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78:31:00
정무	101:20:00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	91:03:00
기획재정	92:37:00	보건복지	76:19:00
교육	70:54:00	환경노동	86:56: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88:27:00	국토교통	89:37:00
외교통일	65:01:00	여성가족	8:08:00
국방	62:03:00		
행정안전	102:45:00	계	1210:07:00

6)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오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회공보상의 오전 국정감사시작시간은 수정하였으나, 대부분 국회공보 표시를 기준으로 하였음.

《참고 : 2020년도 위원회별 국정감사 총 진행시간(중식, 이동, 휴식시간 등 포함)》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국회운영	19:49:00	문화체육관광	66:37:00
법제사법	114:29: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97:21:00
정무	106:40:00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	96:06:00
기획재정	102:30:00	보건복지	77:51:00
교육	77:58:00	환경노동	98:17: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99:16:00	국토교통	105:03:00
외교통일	83:14:00	여성가족	8:44
국방	67:15:00		
행정안전	96:26:00	계	1317:36:00

《2019년도 위원회별 국정감사 총 진행시간(휴식기간 등 포함)》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위원회	감사시간(시:분)
국회운영	24:04	문화체육관광	55:18
법제사법	97:4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84:1
정무	84:3	산업통상지원중소벤처기업	111:4
기획재정	92:36	보건복지	85:57
교육	59:12	환경노동	10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19:5	국토교통	110:33
외교통일	92:24	여성가족	9:01
국방	57:45		
행정안전	112:42	계	1297:08

7.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 : 2개 위원회 6일동안 8개 시·도 대상 실시

이슈 : 서울시 - 대장동, 경기도 - 대장동, 부산시 - 엘시티

이번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2번 이상 국정감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2곳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였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국정감사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2개 광역도(충남, 전북)와 광역시(인천, 대구)를 2번 실시하였고, 지방분반을 나눠서 부산시와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예년과 같이 지자체 공무원들의 국정감사 반대 시위가 경기도청에 크게

있어서 언론에 대두되기도 하였고, 지난해와 같이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축소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지사직 사퇴여부가 국정감사 임박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도지사직을 유지하여 국토위와 행안위 국정감사를 모두 수감하였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간에 자료 제출논란부터 시작하여 질의태도나 방법 등에 있어서까지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경기도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국정감사까지 계속 이어졌다.

특히 10월 18일 경기도 지사에 대한 조폭 연루 의혹 관련 김용판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가 크게 조명되었고, 10월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의 파행까지 초래하였다.

열전은 계속되어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관련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가 분반하여 10월 20일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는데, 이슈는 ‘대장동’ 이었다.

재보궐선거로 입성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컸는데,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선거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생태탕 사건과 관련한 질의 응답 중에서 목소리가 커졌으며, 부산시의 엘 시티 관련해서도 언쟁이 있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현황》

위원회 (위원수)	지방자치 단체	단체장	일자	장소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감사 시간	주요이슈
행정안전 (22)	인천시	박남춘 시장	10.12(화)	국회	10:11	16:46	6:35	건단신도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	10.12(화)	국회	10:11	16:46	6:35	해양 대기질오염 저 감 대책
행정안전 (22)	대구시	권영진 시장	10.13(수)	국회	10:04	16:31	6:27	대구시의 화이자 백 신 구매 논란 대구 지역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대한 대구시 대응 대구시 북구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건립 갈등 문제 군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 계획, 칠성시장

위원회 (위원수)	지방자치 단체	단체장	일자	장소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감사 시간	주요이슈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	10.13(수)	국회	10:04	16:31	6:27	개시장 운영 갈등, 취수원 이전 다변화 문제 등에 대한 해결 책 마련 항공대대 이전에 따 른 소음 피해 새만금 방조제에 이 어 동서도로 관할권 다툼 등 시군 갈등 조정 문제 전 순창 부군수의 부 동산 관련 투기·특 혜 의혹 저조한 군산형 일자 리에 대한 해법
행정안전 1반(12)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10.15(금)	도청	10:00	12:14	2:14	지방인구소멸 2월 문 대통령이 참 석한 '지역균형뉴딜 투어 1호'행사 과정 에서의 과잉 의전 문재인 정부 들어 크 게 증가한 태양광 발 전의 부작용 광주 군 공항이전,나 주 부영CC잔여부지 특혜 문제 여수 현장실습 고교 생 사망사고와 관련 해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등
행정안전 2반(10)	부산시	박형준 시장	10.15(금)	시청	10:00	13:10	3:10	해운대구 엘시티 문 제 /엘시티 관련 사과논 란 일사파행
행정안전	경기도	이재명 지사	10.18(월)	도청	10:05	19:48	9:43	대장동 사태 / 파행
행정안전	서울시	오세훈 시장	10.19(화)	시청	10:07	19:09	9:02	대장동 사태 / 일사 파행
국토교통 2반(15)	경기도	이재명 지사	10.20(수)	도청	10:06	19:09	9:03	대장동 개발의혹사건 /파행
국토교통 1반(14)	서울시	오세훈 시장	10.20(수)	시청	10:00	18:15	8:15	대장동 개발의혹사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용산 정비창 부지 개 발 사업 등 주택 정 책/ 파행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현황》

위원회 (위원수)	지방자치 단체	단체장	일시	장소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감사 시간	주요이슈
국토교통 (30)	부산광역시	변성완 시장권한 대행	10.13.(화)	시청	11:01	17:30	6:29:00	가덕도 신공항 관련 (신공항 검증)
행정안전 (22)	서울특별시	서정협 시장권한 대행	10.15.(목)	시청	10:09	16:53	6:44:00	박원순 시장 사망사 건 반값 재산세
행정안전 (22)	경기도	이재명 지사	10.19.(월)	도청	10:04	16:43	6:39:00	이재명 대선주자 검 증
행정안전 (22)	강원도	최문순 지사	10.20.(화)	국회	10:03	18:25	8:22:00	레고랜드 의혹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						월성원전 1호기 조 기 폐쇄 논란, 대구 · 경북 행정 통합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						청주특례시 관련입 장
	제주특별 자치도	원희룡 지사						후쿠시마 원전수 방 류 대책, 청년일자 리
국토교통 (14)	<1반>서 울특별시	서정협 시장권한 대행	10.20.(화)	시청	10:02	19:49	9:47:00	아파트가격 전세대책
국토교통 (16)	<2반>경 기도	이재명 지사	10.20.(화)	도청	10:02	21:52	11:50:0 0	‘국민의집’ 논란 기본주택론
행정안전 (22)	세종특별 자치시	이춘희 시장	10.22.(목)	국회	10:10	18:17	8:07:00	대전 세종통합론
	대전 광역 시	허태정 시장						대전 세종통합론 유성복합터미널
	광주 광역 시	이용섭 시장						전남 광주 통합론
	울산 광역 시	송철호 시장						직무수행평가저조, 선거개입논란

8. 국정감사 중 감사의원 등의 회자된 말

감사위원이나 피감기관 장의 말이 회자되어 경각심을 주거나 이슈화되기도 하였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감사위원들의 촌철살인과 답변자들의 답변도 있었다.

국토교통위의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아니, 그때그때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야 반박이 되지요.” 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기도 하였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사건 관련 유동규와의 친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유동규는 그런 정도 역량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라고 즉답을 피했다.

지난 2020년에는 감사위원보다는 피감기관 장의 발언이 많이 회자 되었는데 11월 4일 노영민 위원장의 ‘살인자’ 발언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7번 음박’ 등은 논란이 되면서 많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2019년도에는 김종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내가 조국이냐!’ 는 언론에 크게 부각되어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올해에는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화천대유하셨습니까?’ 라는 한가위 명절 덕담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의 10월 5일 기획재정부 첫 날 국정감사에서 서일준 의원은 단군 이래 최악의 비리 사건으로 지금 기록되어 오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민심을 전한다면서 “명절에 가장 유행했던 덕담인데요, 돈 많이 버시고 성공하라는 뜻입니다. 상대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 ‘천화동인 하세요’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도 하였다.

《2021년도 국정감사장의 한마디 말》

회의록 등을 통해 모니터위원들이 선정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10월19일	김도읍	어제 이재명 지사 혼자서 130분 떠들었어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에게 서영교 위원장이 충분히 답변 기회를 줄 것이라면서
10월21일	이종배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의 삶은 무한합니다.	문 정권의 임기는 끝나더라도 여러분은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을 것이라며, 정권이 가는 길이 정도가 아니라면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공직자 여러분의 의무이자 역할이라고 당부하면서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10월 5일	김희재	특검주장은 주마가편(走馬加鞭)이 아니고 주마절각(走馬切脚)입니다. 달리는 말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특검주장에 대해서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며
10월 5일	박형수	제가 머리를 빨강게 염색하고 국감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 위원장님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국감 사회 안 보실 겁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팻말 논란으로 인해서 위원장이 회의진행 보이콧을 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10월 5일	박홍근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대로 해야지요. 정쟁은 정쟁대로 하시고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주문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10월 5일	장혜영	국정감사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사하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행정부 앓혀 놓고 입법부끼리 싸우는 자리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까 봐 참 겁이 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교섭단체로서 여야의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 비판하며
10월21일	조해진	이대로 가면 지방은 소멸한다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역대학교가 위축 되고 있다며, 지역대학이 사라지면 지방도 소멸하게 도니다면서
10월21일	강득구	모든 학생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헌법의 교육받을 권리에 ‘균등하게’ 를 추가하며
10월21일	김남혁(김해대학교 학생)	우리 한번 봅시다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지방대학 차별 및 소멸위기에 대한 답변 중 발언기회를 얻어서 의원님과 교육당국과의 대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다며
10월21일	김병욱	혹시 독도에 가 보셨나요?	교육위원회종합감사에서 올해 6월에 처음 가 봤는데 ‘아, 진짜 여기가 소중한 우리 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우리 학생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꼭 한번씩 여기 오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10월 1일	윤영덕	제가 먼저 할게요, 저 피켓.	교육위원회의 첫국정감사에서위원장의 감사개시발언이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석 풋말에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10월 1일	강득구	임용대란, 임용절벽 현실화라는 말 들어 보셨지요?	교육위원회 첫국정감사에서 최근교대생들은 임용대란을 넘어 ‘임용재난’ 이라는 표현까지쓰고있다며,
10월 1일	안민석	자료 올 때까지 저는 오늘 집에 안 갈 테니까 그렇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사립대학교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전해 주세요.	있ادم
10월 5일	김철민	국감장이여 이게 뭐하는 장이여?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의사진행발언이 길어지고, 10월 1일 파행과 관련해서 책임공방이 길어지자
10월5일	안민석	첫째는 말하는데 끼어들기 하지 말자.고함치르기하지 말자. 정시에 좀개의하자.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의 피켓싸움과 감정싸움이 전개되자 국정감사 보충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과 여야간사 즉삼부가 합의를 하자면서
10월5일	이학영	계시면 큰일 납니다	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정(0시10분경)을 넘겨 국정감사 진행을 하다가위원장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라고 묻고, 없다고 하자, 안도하면서
10월6일	유경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간략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전에 부총리에게 질의시간이 7분, 5분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절제된 답변을 요청하면서
10월6일	배준영	‘가렴주구 정권’ 이라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총리에게 이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는지 물으면서 이번 정권에서 세금을 많이 거둬드린다는 취지의 질의를 하며
10월6일	박형수	아무 것도 못 하겠네, 그러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총리에게 지역화폐 발행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법에 따라 통제를 하는 것에 질의하자 부총리가 지방자치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 때문이라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자
10월6일	양향자	눔프(NOOMP)현상 아시지요? ‘not out of my pocket’	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근로소득 면세자 수가 2013년 541만 명에서 2019년 70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체 납세 대상자 1917만 명 대비 36.8%를 차지하고 있다며
10월20일	양경숙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생필품 값이 많이 올라서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많이 가벼워지고 있고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있다며
10월20일	김영진	훌륭하신 생각입니다.	위원장 대리를 하면서 서일준 의원이’추가 질의는 제가 내일 또 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10월20일	장혜영	국회가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 국회이고 비교섭단체 의원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	종합국감에서 마무리한 말씀 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발언기회를 얻자, 마이크를 잡은 이유를 설명하며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서	
10월 1일	정희용	많은 기사에서 ‘휴대폰을 던졌는데 못 찾았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위치추적기술 현황과 이를 활용한 사례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며
10월 1일	변재일	이것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잘못된 정책을 가리기 위한 고집이라고 질타하니) 임혜숙 장관이 종합검토를 하겠다고 하자.
10월 19일	유상범	우리가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또 서로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기한을 위원장이 정해주지 않으면 혼란이오니까 위원장이 자료제출기한을 정해달라며
10월 19일	조수진	그게 군사기밀이라고요?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1년전에 서해공무원피격사망사건의정확한 실종지점이 군사기밀이라는 장관의 답변을 듣고
10월19일	권성동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몇 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지요	법제사법위원회군사법원국정감사에서장관이 7번이나 사과할 정도로 군내에자살사고 등 비극적사건이 많았다면서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행태를 비판하는질의에 앞서
10월21일	조수진	장관님, 이 말 믿어도 되지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박성준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박범계장관이대장동 사건관련’ 의혹이 한 톨이라도있으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것이라’고 하자 이어 질의를 하며 이말을확인하면서
10월21일	김용민	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대장동사건과 관련하여서 ‘돈이 누구에게갔는 지가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10월21일	전주혜	무슨 무슨 날짜에 출입자가 있었다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법제사법위원회종합감사에서 권순일대법관실 출입자명단 제출관련에 대법원이 제출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10월21일	김영배	본인이시지요?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공수처인사문제 관련질의를 하면서 공수처인사위원장이 공수처장이라는 답변에 대해
10월8일	윤한홍	이 단체에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법관이 되기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겠지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국감에서 특정단체 소속 법관들의 승진을 거론하면서 대전고법원장에게 특정단체에 가입되지 않아 대법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질의 하자(국정감사장에서 웃음소리 나눔)
10월12일	김용민	헌법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연구원 업무보고에서 헌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법교육을 강조하자, 선출직공무원들의 헌법교육이 필요하다며
10월12일	김영배	헌재 기다리시니까 진행하시지요.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등국정감사에서는이재명 전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대납의혹관련 여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 이어지자 국감진행을 주문하며
10월12일	최기상	지도 역할을 하는 별빛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국정감사에서 공동체가 그 길을 찾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헌법이라며
10월12일	조수진	호랑이꼬리뺏은 사람,호랑이 꼬리갓고 논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국정감사에서박지원 국정원장은 야권의 유력대선후보에게 ‘자료 다 가지고 있다’, ‘입 다물어라’, ‘잠자는 호랑이 꼬리뺏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다며
10월14일	소병철	제 입으로는 그 단어를 오늘 처음 써요, 검수완박. 무슨 뜻으로 알고 계십니까?	법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등 국정감사에서 용어를 만들자면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수국신’ 이 돼야 된다고하며,
10월14일	전주혜	생각을 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권력수사 뭐가 있었습니까?	법사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송기헌의원과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야당의견 제기능을 이렇게 무시하십니까?’라고 하면서
10월15일	이수진	법원이 가만히 있으면 소액 재판제도가 저절로 바뀔니까?	법사위원회의 서울법등국정감사에서 부족한 예산과 인력확보를 위한 법원차원의 노력을 주문하며
10월15일	김남국	서울가정법원장님 출석해 계시지요?	법사위원회의 서울고법등 국정감사에서 인천가정법원장을 찾았으나 없자,서울가정법원장도 된다면서 불렀으나대답이 없자.
10월12일	박용진	한참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제가 계속 자리를 비웁습니다.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후보 경선때문에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며 양해를 구하고,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지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면서 (배진교 의원의 제의로 박수를 받음)
10월12일	권은희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마세요.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를 무덤으로 끌고가는 행위에다가 이해충돌방지를장식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10월7일	정청래	어디에 제약받지 말고 내키는 대로 춤추고 잘 살아라, 청년들이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중앙박물관국정감사에서 BTS의 유엔 공연을 상영고, ‘퍼미션투댄스(Permission to Dance)’곡명을 해설하면서
10월21일	이광재	우리는 과연 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제대로알고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함께생각해봅시다’라는 책자를 주고, 감사개시발언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있는 걸까요?	을 하면서
10월21일	김경협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김석기 의원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질의를 하자 '말을 좀 가려서 하자'고 하였다가 야당의 반발을 사자
10월20일	조태용	우리 한국이 한반도평화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당사자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정책질의를 하며, '평화협정은 미북간에 해야된다고 하는북한의 말도 안되는 오랜 주장에 말려들게된다'는데 경각심을 주면서
10월 13일	이수진(비)	다시 종감 때 봐요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영주댐 모니터링 계획과 관련하여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에게 질의하다가 만족스런 답변을 얻지 못하자
10월12일	박대수	안했지요?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2018년도 10월 1일 0대성에너지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질의하면서 2인 1조 작업 등 산업안전규칙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항목별로 확인하면서
10월12일	노웅래	문제가 없으면 국감 뭐하러 받아요?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중앙노동위원장에게 노동분쟁 진정사건 처리기간이 길다는 취지의 질을 하였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자
10월14일	송언석	왜 이렇게 힘든 나라를 만듭니까? 반성하세요.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소관 9개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2020년 7월임대차법적용하면서부터 전세지수 월세지수가급등했다며, 정부의 주택정책을 질타하면서 국토교통부 주토실장을 찾으며
10월14일	허영	이게 최선입니까?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소관 9개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의 평가 기준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서 이해관계인을 제척, 기피, 회피하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1년이 지나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10월 19일	김희재	대장동이 서울시에 있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패널을 준비하여 대장동 관련 답변을 하자 질의에 앞서서울시정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10월 19일	이헌승	과연 누가 옳은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의 판단으로 맡겨 주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대장동관련 질의와 답변으로 여야간에 의사진행발언과 고성이가 오가자,질의내용에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시고	대해서는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두자며
10월 19일	김윤덕	하나는 국회법에서 질의는 일문일답이 원칙입니다.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의 사진 행발언을 통해 피감기관의 답변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10월 19일	이재명	유동규는 그런 정도 역량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종배의원이 영상을 보이며 '유동규는내말이 곧 이재명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계셨습니까, 이 당시에'라고질의하자
10월19일	심상정	무제한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면 또 이후에 반박할 시간이 없어요.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답변이 길어지자, 여야간의 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답변시간논쟁이 벌어지자, 의사진행을하면서
10월19일	조용천	지금 똑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2감사반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과정의당에서 편파진행 불공정진행이라면서 항의를 하자
10월22일	송옥주	마이크는 아니고요 그냥 질의를 하세요.	여성가족위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강선우의원이 마이크가 중단되어 '저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라고문자 사실상 거절의 의사표시로
10월22일	양이원영	장관의 자리는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하는 자리라고요!	여성가족위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양금희의원이 데이트폭력등 신종범죄에 대해서 질의하자, 여가부장관이여가부의 힘만으로 역부족이라고 하자송옥주 위원장이 질책을 하자 '하소연'이라고 장관이 말하자
10월22일	김미애	미국은 어땠습니까?	여성가족위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에서는 뉴욕주검찰이 독립된 조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수사를 했는데,우리나라는 지자체장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지 못했다면서
10월 1일	김한정	검찰 조사 저지하는 국민의 힘이 의심스럽다' 하면 좋겠습니까	정무위원회의국무조정실등국정감사에서피켓논란과관련한의사진행발언을통해피켓을 떼고국정감사에집중하자면서
10월6일	이용호	'지원자' 라는게 어플라이(apply)한다는뜻이 아니고 혜택자입니다.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산아 의료비지원예산이 1/5로 줄었들었다면서
10월6일	신현영	의료계에서는 의료 소통의 소리 워크(Sorry Works)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위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신 부작용 관련 질의를하면서 처장에게 '보상보다는 뭔가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정부가 원원할수 있는 진실말하기와 진정한 공감의 우선 돼야 한다'며
10월26일	임이자	아휴, 그 진정성을 못 느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등국정감

일자	발언자 (직함생략)	한 말	언제 어디에서 왜
		겠어	사에서 문재인정부의주택정책과관련해 김 밥집메뉴판보다도 더 자주바뀌었다는 질 의하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며
10월26일	윤호중	2시간에 한 번씩 정회를 하라는 방역지침에 따라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등 국정감 사에서 방역지침에따라 정회선포를 하면 서
10월26일	서일종	사회자가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감독하는 거 예요?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등 국정감 사에서 대통령의지시사항이 잘 안지켜지 고 있다며 대장동수사의 문제점을지적하 던중 운영위원장이 '실체적진실을 예단하 고 질의하시는 것아닌가요'라고 하자
10월22일	장경태	저는 '갈을 여' 를 써도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등 국정감사 에서 여성가족부의 여자에 대한 한자를 물으면서 장관이 '계집여'라고 답하자
10월21일	한기호	이러면 저를 몰아 내시겠습 니까?	국방위의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피켓문제 로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자, 목에 피켓을 걸면서

《2020년도 국정감사장의 한마디 말》

(언론보도내용 등 종합)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11월 4일	노영민 비서실 장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 다. 이 집회 주동자는 살 인자	국회운영위 국 정감사장	박대출의원이 광화문 집회에 서 경찰의 과잉 대응이 아니 었는지 질의하자
10월 16일	김은혜 의원	마포에 사는 흥남기씨의 사례	국토위의 국토 교통부 국정감 사	이사 간다던 세입자는 갱신청 구권을 행사하고 팔려던 집은 팔리지 않은 A씨의 사례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해법 을 구하며
10월 16일	양경숙 의원	'너나 잘하세요' 라는 영화대사가 떠오른다	기재위의 한국은행 국정 감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엄격 한 재정준칙 필요성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10월13일	강기운 의원	밥이 상해도 그 안의 탄 수화물 절대량은 똑같다 고 해서 국민들이 '상한 밥'을 먹을 수 있겠나	보건복지위의 식품의약품안 전처 국감	단백질 함량에 문제가 없어 백색입자 발견 백신의 효능에 문제가 없다는 식약처의 답변 에
10월 8일	서범수 의원	조금 많은 게 아니죠. 537 대입니다. 그렇죠? 537대. 그러면 동원된 경력은 얼 마나 됩니까?	행정안전위의 경찰청 국정감 사	광화문 경찰차 차벽 설치와 관련하여 동원 차량이 언론의 300대 보다 조금 더 많다는 청장의 대답에 대해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10월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제가 만류... 뭐 개인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알려질 사람이 아니지요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국정감사	남편 이일병씨의 보트 구입 외유에 대해 이태규 의원이 만류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만류를 했는데 실패한 건가요?에 대해 답하면서
10월 15일	김용판 의원	문재인 정부 못지않게 서울시도 거의 스톡커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평양시 지원에
10월 15일	허종식 의원	전교 1등들이 몰랐겠느냐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과 의대생들의 의사고시 거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10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원님도 장관 한 번 해보십시오	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장관 사퇴 여론이 점점 증가한다는 취지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10월 19일	김진애 의원	존경하는 빼고 얘기하셔도 돼요	법사위의 서울 고검 등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최강욱 의원 기소 관련 결재라인을 확인하며
10월 8일	윤희숙 의원	장관님, 전셋집 구하셨어요	기재위의 기재 부 국정감사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전셋집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0월 8일	김주영 의원	영끌, 줍줍' 아시죠?	기재위의 기재 부 국정감사	요즘 회자되고 있는 단어들이라면서 “처음엔 젊은 층에서 재미로 쓰는 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슬픈 단어였다” 라며
10월 23일	김영호 의원	눈 큰 비둘기형 장관이 됐음 좋겠다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종합감사	여야 의원들이 비둘기, 부엉이를 언급하며 선전을 벌이자
10월 23일	박진 의원	비둘기 보고 매가 되라곤 하지 않겠다. 대신 눈 크게 뜨고, 볼건 보는 부엉이는 되라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종합감사	여당 의원들이 비둘기를 거론하며 이인영 장관에게 덕담을 건네자
10월 16일	양경숙 의원	너나 잘하세요	기재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본연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대안도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혼수를 두는 것'이라며
10월 16일	안병길 의원	전화번호는 전달했지만 지시는 없었다.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메모는 부장에게 전달했지만 외압은 없었다는 해명에 대해
10월 16일	주철현 의원	솔직히 외압을 받은 거 아니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여당 의원조차 펀드 상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NH투자증권을 질타하며
10월 12일	윤호중 법사위 원장	여기는 장마당이 아니잖아요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법무부 국정감사, 여야 의원간 거친 공방이 계속되자
10월 12일	전주혜 의원	장관님, 여기는 진실의 자리이지 해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좌관과 주고 받은 카톡과 관련해 질의를 하며
10월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말 이것은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법 절차에서 허용된 범위 내 정당한 휴가, 병가라 위법과 불법이 없는 간단한 사건'이라 규정하며
10월 13일	김희국 의원	소설을 쓰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위의 부산시 국정감사	2200억원이 소요되는 부산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10월 12일	조명희 의원	시나리오 없이 12시간 내에 우리 다 죽어요.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 국정감사	인접국에서 원전사고가 나면 한국이 방사능으로 뒤덮인다고
10월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27번이나 욕박질렀죠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27번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냐고 질책하자
10월 13일	김병욱 의원	친일단체로 전락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냐	교육위의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3개 전범기업에 2년간 57억원을 투자한 것을 지적하며
10월 13일	김성주 의원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서 중고 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직접 구매했다	보건복지위의 식약처 국정감사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항정신성 전문의약품이자 필로폰 중독자 사이에선 마약 대체재로 쓰이는 의약품을 구매했다며 당근마켓의 부실관리를 지적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10월 13일	모종화 병무청장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고 미국사람	국방위의 병무청 국정감사	유승준씨의 입국 문제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을 답변하면서
10월 13일	윤석현 금감원장	칼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다	기재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10월 14일	이치범 주말레 이시아 대사	말레이시아 내 북한 사람은 없는 상황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이후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외교관계를 묻자
10월 8일	권성동 의원	지금 추리 소설 쓰는 거 같아요. 추리 소설	농림축산식품위의 해경 국정감사	의원들이 물으면 수사 책임자로서 확신에 차서 이걸 이렇고 저런 저렇습니다 답변해야 국민들이 해경청의 발표를 믿고 신뢰할 텐데 잘 모른다 추정한다고 답변한다며
10월 8일	주호영 의원	문재인 케어 나는 이 이름 좋게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재원 대책 없이 고갈되고 나면 문재인 케어 아니라 문재인 미스가 된다고
10월 8일	박성중 의원	대한민국 방송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굉장히 불행하다	과방위의 방송통신위 국정감사	YTN 주식 매각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비판하며
10월 8일	이용빈 의원	관종 뜻 아세요, 똥손 아세요?"	과방위의 방송통신위 국정감사	방송 프로그램에서 마구잡이식 신조어가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을 지적하며
10월 8일	전주혜 의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8명 재판관이 임명됐는데, 그 중 5명이 '우국민' 인사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우국민'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면서
10월 8일	최승재 의원	계란 한판이 얼마인지 아시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기업부 국정감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식자재마트의 급성장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
10월 7일	임이자 의원	았으나 서나, 자나 깨나 '이낙연'이시네요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정감사	송옥주 한노위원장이 임이자 의원을 호명한다는게 실수로 이낙연으로 잘못 말하자 웃음을 터뜨리며
10월 7일	배현진	문화체육관광부의 준비가	문화체육관광	문체부 국감 이틀 전에 의원

날짜	화자	말	장소	이유 또는 원인
	의원	대단히 부실하다	위의 문화체육 관광부 국정감 사	실로 찾아와 USB 30개 한꾸러 미를 의원실 책상에 던지고 갔다며
10월 7일	서범수 의원	야당이 부르면 안 온다	행안위의 행안부 국정감 사	김창룡 경찰청장이 개천절 집 회 대응 관련 국회에서 이낙 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보고한 것과 관련, 진영 장관 이 '필요하면 야당에도 설명해 야 한다'고 하자
10월 7일	신원식 의원	한강 다리에 자살하려고 올라간 사람은 안 구하나	국방위의 국방 부 국정감사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 망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구 조 노력이 너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10월 7일	김영진 의원	약간 야멸찬 국감인 듯하 다.	농림위의 농림축산식품 부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사 저가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 하자 현직 대통령이 퇴임 후 고향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취 지인데라며
10월 7일	김상희 부의장	마스크 씹시다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국정감 사	발언할 때 비밀이 많이 튀니 불편해도 되도록 마스크 착용 해야 한다며, 박성중 의원이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게 해달 라고 하자.
10월 7일	주호영 원내대 표	K방역 누가 이름을 지은 것인가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 정감사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 해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10월 7일	김진애 의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 판사 카르텔 아니냐	법사위의 대법 원 국정감사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 을 비판하며

9. 국정감사 중(시작전 포함) 위원회 전체회의 32회(지난해 40회)

이번 국정감사의 시작 전 또는 국정감사 도중에 위원회 회의를 연 경우
는 모두 12개 상임위원회에서 32회였다.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국방위원

회(위원장 민홍철),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 등 4개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하지 않았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0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월 19일 국정감사 당일 국방부장관과 삼군 참모총장들이 당일 개막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에 참석한 각국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들을 위한 만찬 행사를 주관해야 한다”는 사유로 “보충질의부터는 국방부차관과 삼군 참모차장들이 참석해서 답변하도록 했는데, 국방부차관과 삼군 참모차장 등 4명의 증인”을 채택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6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는데, 10월 21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는 수자원공사 관리 실패 및 직원의 횡령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도 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에도 6차례로 가장 많이 회의를 하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3차례 회의를 하였는데, 10월 21일에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으로 회의를 하였다. 즉,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중 전재국 성강문화재단 대표가 10월 20일 오전 신규 서점 오픈을 비롯한 여러 생업상의 이유로 그리고 도민석 증인은 생업 관련 중요한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의로 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다.

대부분 위원회 회의는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이나 증인채택 철회의 건 등으로 회의를 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국정감사 중 문화방송에 대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연합뉴스에 대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았다.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는 파행으로 인해 제대로 실시하지 못했던 외교부 국정감사를 10월 20일 추가로 실시하는 국정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처리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월 1일 지방국정감사 중 일부를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일정을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하였다. 즉 대구, 인천, 충남,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관 경찰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021년도 국정감사 도중(직전 포함) 상임위 회의 개최 현황》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국회운영	0	과학기술	3	산업통상	3
법제사법	1	외교	1	보건복지	3
정무위원	3	행정안전	2	환경노동	6
기획재정	0	농림축산	4	국토교통	2
교육	1	문화체육	3	계	32

<참고 : 2020년도 국정감사 도중(직전 포함) 상임위 회의 개최 현황>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국회운영	1	과학기술	4	산업통상	4
법제사법	1	국방	2	보건복지	5
정무위원	1	행정안전	4	환경노동	6
기획재정	1	농림축산	4	국토교통	2
교육	3	문화체육	2	계	40

제21대 국회 제2차년도(2021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 수	피감기관 수	감사일 수	감사진행 시간	시찰횟 수	국회일사 수	영상회의록 수	감사위원 출석률
국회운영	윤호중(민)	28	9	2	23:32:00	0	2	3	100.0%
법제사법	박강온(민)	18	78	10	107:10:00	0	8	13	99.4%
정무	윤재옥(국)	24	47	10	101:20:00	0	10	10	97.1%
기획재정	윤후덕(민)	25	29	9	92:37:00	0	7	12	90.8%
교육	조해진(국)	16	64	7	70:54:00	0	7	7	86.6%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원욱(민)	20	82	9	88:27:00	1	8	10	98.3%
외교통일	이광재(민)	20	31	12	65:01:00	0	5	5	94.8% (재외공관포함)
국방	민홍철(민)	17	67	10	62:03:00	3	3	8	79.4%
행정안전	서영교(민)	22	33	10	102:45:00	0	6	19	93.5%
문화체육관광	이채익(국)	16	51	8	65:44:00	2	6	7	94.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김태흠(국)	19	36	10	78:31:00	0	10	10	94.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학영(민)	29	58	8	91:03:00	0	8	8	95.7%
보건복지	김민석(민)	24	41	8	76:19:00	0	8	8	98.4%
환경노동	박대출(국)	16	75	10	86:56:00	1	7	9	93.8%
국토교통	이헌승(국)	29	33	9	89:37:00	1	4	8	96.9%
정보	김경협(민)	12	5	4	-	1	2	0	-
여성가족	송옥주(민)	17	6	1	8:08:00	0	1	1	100.00%
17개	17인	352 (340)	745	137	1210:07:00	9	102	138	94.59%
참고	1. 감사진행시간은 국회공보상 종료시간에서 감사개시시간을 뺀 시간임 2.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수는 2021. 11. 23. 기준임 3. 감사위원 출석률은 국회공보 기준임.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2020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 수	피감기관 수	감사일 수	감사진행 시간	시찰횟 수	국회회사 수	영상회의 수	감사위원 출석률
국회운영	김태년(민)	28	9	2	19:49:00	0	2	3	100.00%
법제사법	윤호중(한)	18	76	11	114:29:00	0	11	14	100.00%
정무	윤관석(민)	24	46	10	106:40:00	0	10	10	100.00%
기획재정	윤후덕(민)	26	29	9	102:30:00	1	6	12	99.57%
교육	유기홍(민)	16	64	7	77:58:00	0	5	13	100.00%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원욱(민)	20	82	9	99:16:00	1	8	9	100.00%
외교통일	송영길(민)	21	30	9	83:14:00	1	9(8)	11	96.43%
국방	민홍철(민)	17	63	10	67:15:00	2	3	9	99.26%
행정안전	서영교(민)	22	35	10	96:26:00	0	7	15	100.00%
문화체육관광	도종환(민)	16	56	8	66:37:00	1	7	7	93.7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이개호(민)	19	37	10	97:21:00	0	10	10	96.8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학영(민)	30	44	8	96:06:00	0	8	8	96.67%
보건복지	김민석(민)	24	22	8	77:51:00	0	8	8	100.00%
환경노동	송옥주(민)	16	70	10	98:17:00	1	7	9	93.75%
국토교통	전선미(민)	30	31	10	105:03:00	1	5	10	100.00%
정보	전해철(민)	12	5	4	20:52:00	1	2	0	97.22%
여성가족	정춘숙(민)	17	6	2	8:44:00	1	1	1	100.00%
17개	17인	356	705	137	1329:44:00	10	109	149	98.44%
참고	1. 감사진행시간은 국회공보상 종료시간에서 감사개시시간을 뺀 시간임 2.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수는 2020. 11. 15. 기준임								

제20대 국회 제4차년도(2019년도) 국정감사 주요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 수	피감기관 수	감사일수	감사진행시간	순감사시간	시찰횟수	국회회사수	영상회의록수	감사위원출석률
국회운영	이인영(민)	28	9	2	24:04	19:19	0	2	3	100.00%
법제사법	여상규(한)	18	76	11	97:46	75:32	0	3	14	98.81%
정무	민병두(민)	24	45	11	84:3	69:39	1	9	10	95.00%
기획재정	이춘석(민)	26	29	10	92:36	65:50	1	6	12	78.99%
교육	이찬열(바)	16	91	8	59:12	61:55	1	3	13	95.67%
과학기술정보통신	노웅래(민)	20	82	12	119:5	77:39	1	10	10	95.00%
외교통일	윤상현(한)	22	31	15	92:24	32:17	0	4	4	87.34%
국방	안규백(민)	17	64	11	57:45	49:22	5	2	8	96.26%
행정안전	전혜숙(민)	22	32	11	112:4 2	84:36	1		20	97.19%
문화체육관광	안민석(민)	16	75	10	55:18	37:50	3	7	7	95.5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황주홍(평)	18	34	10	84:1	60:09	0	9	10	9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종구(한)	28	61	11	111:4	66:43	1	10	10	99.29%
보건복지	김세연(한)	22	45	10	85:57	73:26	1	7	9	93.94%
환경노동	김학용(한)	19	71	12	103	77:10	2	8	10	99.38%
국토교통	박순자(한)	30	32	10	110:3 3	73:54	0	4	11	98.18%
정보	이혜훈(바)	11	5	3	16:56	16:56	1	0	0	93.18%
여성가족	인재근(민)	17	6	2	9:01	6:20	1	1	1	100.00%
17개	17인	354	788	159	1314:04	948:37	19	85	152	94.93%
참고	1. 외교통일위의 경우 해외공관 국감시간 포함하였고, 순감사시간에서는 제외한 것임 2. 행정안전, 국방, 정보위원회의 회의시간은 국회공보시간을 참고하였음 3. 화상모니터링 가능 영상회의록수는 2019. 11. 29. 기준임									